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2006년도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내용보고서

2006. 12

대한민국정부

# 차 례

I.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의 기본방향 .....	1
1. 목표 및 방향 .....	3
2. 투융자 추진실적 및 성과 .....	8
3. 2006년 농림·수산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	16
II. 구조개선을 위한 주요 농림수산업 제도개혁 .....	23
1. 협동조합개혁 .....	25
2. 농림수산물 유통의 개혁 .....	33
3. 행정 추진조직 개편 및 규제개혁 .....	45
III.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시책 .....	57
1. 경쟁력있는 경영체 육성 .....	59
2. 생산기반 정비 및 농어업의 기계화·현대화 .....	80
3. 농림수산업관련산업의 육성 .....	93
4. 고부가가치 농림어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정보인프라 구축 .....	97
5. 수출진흥 및 수입관리 대책 .....	111
6. 친환경농업의 육성 .....	120
7. 농어가 소득안정 및 경영위험관리체계 구축 .....	129
8.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 지속추진 .....	152

IV. 품목별 경쟁력 강화 시책 .....	157
1. 쌀산업 대책 추진 .....	159
2. 채소·원예산업 .....	165
3. 축 산 업 .....	170
4. 임    업 .....	188
5. 수 산 업 .....	224
V.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증진 시책 .....	231
1. 기초생활환경 개선 .....	233
2. 교육여건 개선 .....	246
3. 농어업인 연금제도 지원 .....	248
4. 농어촌 의료여건 개선 .....	249

● I.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의  
기본방향

1. 목표 및 방향 .....	3
2. 투융자 추진실적 및 성과 .....	8
3. 2006년 농림·수산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	16

## I.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의 기본방향

### 1. 목표 및 방향

현재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은 대외적으로는 DDA협상·한·미 FTA 협상, FTA 확산 등으로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고, 대내적으로는 안전·건강(Well-Being) 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지고 농산물 품질에 대한 기대수준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도·농간 소득 및 복지격차 해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주 5일 근무제 확산으로 전원·휴식공간으로서의 농촌지역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대내외 농정여건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우리 농업·농촌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식품 세계일류, 농촌 Global Top 10'이라는 새로운 농정비전과 6대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

#### < 6대 정책 목표 >

- ① 농업개방확대 적극 대응
- ② 농업 경영체 육성 등 소득 경영안정
- ③ 쌀 산업의 체질 강화
- ④ 농축산물 유통효율화 및 소비촉진
- ⑤ 소비자기향적 농식품 안전관리
- ⑥ 도시민과 상생하는 복지농촌 조성

6대 정책목표를 바탕으로 특히 2006년에는

첫째, 한·칠레 FTA 협상을 계기로 개방화 시대의 대책으로 2004년 2월 수립한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119조 투융자 계획」을 한·미 FTA협상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개방화시대에 적합한 농업생산 구조로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는 규모화와 직불제 강화 등으로 적정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령농 등 개방 적응 곤란 농가에 대해서는 은퇴하고도 생계비 걱정에서 벗어나도록 특별복지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둘째, 전문농업경영체 육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2013년까지 45,000명 신규인력 양성을 목표로 후계농업인력 영농정착 지원 및 체계적인 잠재 농업인력 육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셋째, 2005년에 도입한 공공비축제 및 쌀농업직불제의 미흡한 점을 보완, 시장수급에 따라 쌀값이 결정되고 농가소득은 직불제로 보전하는 제도를 정착시키고, 관세화 유예기간을 활용하여 쌀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농산물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성조사강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등을 본격 시행하고, 축산물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선진위생관리기법인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 및 음식점원산지 표시제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다섯째, 다양한 직접지불제를 강화하여 직접지불예산을 2006년 농림부 예산의 23.6%까지 확대하고,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공제 대상품목과 축종을 확대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강화하고 있다.

여섯째, 부처별로 분산된 농촌지역개발사업은 농림부로 일원화하여 지역개발사업을 효율화하고, 녹색·농촌 체험마을, 1사1촌운동 등을 통해 농외소득증대 및 도농교류를 활성화 하고 있다.

일곱째, 한·미FTA협상에서는 수용 가능한 협상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우리농업의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한 협상 전략을 수립, 협상을 진행 중이다. DDA협상에서는 수입국 그룹, 개도국 그룹 등 유사 입장국과 쟁점별

공조를 강화하면서 탄력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 UR이후 추진된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과 농업인 체감도가 낮았다는 지적을 감안 사업형성·집행단계부터 농업인,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현장의 반응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현장 적합성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농림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은 구조조정 등을 실시해 나가고 있다.

2006년 주요 재정사업 136개(관서사업 포함)를 선정하여 농림사업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평가부서에서는 사업부서 자체평가와 집중평가 자료 등을 기초로 총괄평가를 실시하여 농림업무성과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요 재정사업을 확정('07.4)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통한 “선택과 집중” 및 선진국의 사례분석, 외부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사업평가제도를 지속 개선하여 정책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임업분야에서는 녹화된 산림을 숲 가꾸기를 통해 생태·환경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경제림으로 육성하고, 산지의 난개발 방지 등 자연친화적인 산지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산불·병해충·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방지하고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산림생태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지구환경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탄소 흡수원으로서 숲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고, 21세기 선진 한국의 격에 걸맞은 국토의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녹화된 숲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이를 위해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녹색국가 구현’을 목표로 국가계획인 제4차 산림기본계획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최적 발휘되는 ‘숲다운 숲’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산주 및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산림휴양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산림휴양 공간을 확충하며 산촌진흥에 노력하는 등 사람과 숲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6년 수산업 구조조정 사업의 기본방향은 WTO/FTA 등 국제어업질서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연근해 어선세력의 구조조정, 자율관리어업 정착 및 안전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등을 중점 추진하여 시장개방 확대와 자원고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의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첫째, 2005년에 정부·지자체·어업인 등이 참여하는 「수산자원회복 세부 실천 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을 마련하고, 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종묘방류, 바다목장 조성 및 인공어초의 시설 등 수산자원을 적극 조성해 나가는 한편, 총 허용어획량(TAC)제도 대상 어종과 자율관리어업의 확대 등 수산자원 회복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둘째, 양식어업은 양식어장·특별관리어장 정화·정비 및 어장관리기본계획 마련 등을 통해 어장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배합사료 사용 지원 확대 등 양식어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 수산업 관측제 및 유통협약 확대 등을 통해 자율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하였다

셋째, 살기 좋고 활력 있는 어촌을 조성하기 위해 어촌종합개발, 어촌체험마을 조성 및 어촌관광모델 개발 등을 통해 어촌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400사 400어촌 자매결연 체결 등 도시와 어촌의 교류를 촉진하고 어촌관광 홍보 등을 통해 국내 관광수요를 어촌으로 흡수할 계획이며, 이와 아울러 어항의 안전수용률을 감안한 집중적 어항개발 및 관광·레저 등 다양한 어항 수요에 부응한 다기능어항을 개발하고 있다.

넷째,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산물의 공급을 위해 수산물 생산이력추적제, 양식장 HACCP 본격 도입 등 선진 위생 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공급을 지원하고, 외국산 불량 수산물의 수입 차단과 수산물 수출촉진을 위해 국내양식장 등의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싱싱회 보급을 확대하고 품질인증제, 원산지 표시제



확대 및 고품질 수산가공 식품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부산 감천항을 국제수산 물류무역기지로 조성하고 가락동·노량진수산시장의 현대화 등을 통해 유통비용 절감 및 이용객 편의를 제고 하고 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와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유통제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수산기술 개발과 성장동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영어자금, 수산발전기금 등 정책자금의 지원,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업 및 선도경영인 지속 육성과 어업인이 자연재해로부터 스스로 위험관리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험」 지원 확대 및 「양식재해보험」 도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수협중앙회 및 일선조합(94개)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어업인 지원기능을 강화하였다.

여섯째,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의 수산협력을 강화하고, 원양어선의 조업수역 확보를 위한 대외 어업협력을 확대하고, 양국간 어업협력을 바탕으로 주요 원양조업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입지를 한층 강화해 나아가고 있다.

일곱째, WTO/DDA 수산분야 협상으로 인한 충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수산보조금은 금지대상 보조금의 범위가 최소화 되고 유예기간 및 단계적 이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하는 한편, 수산물관세는 수산물이 무세화(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고 민감품목에 대한 신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FTA는 협상의 전 단계인 산·관·학 공동연구회도 적극 참여하여 FTA 체결에 따라 예상되는 영향 등을 미리 발굴하고, 자료조사 및 연구용역 실시 등을 통해 협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WTO/DDA 및 FTA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우리 수산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주요 어종·업종별 경쟁력 실태분석을 통한 지원대책 마련, 직접지불제 도입 추진, 어업인 전업방안과 수산발전기금 재원 확충 등 국내대책도 차질없이 마련중에 있다.

## 2. 투융자 추진실적 및 성과

### 가. 농업·농촌 투융자 실적 및 성과

#### (1) 농업·농촌 투융자 실적

2005년은 농업·농촌종합대책 119조원 투융자 계획 시행 2년차로서 2005년 투융자규모를 9조 7,354억원(국고예산기준)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적은 9조 38억원으로 예산 대비 일부 미달(92.5%) 집행되었다.

2005년 투융자 계획 및 집행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계획(예산)(A)	실 적(B)	B-A	대비(B/A)
국 고	97,354	90,038	△7,316	92.5
(보 조)	(69,359)	(65,022)	(△4,337)	(93.7)
(융 자)	(27,995)	(25,016)	(△2,979)	(89.4)

실적이 계획에 미달한 주요 이유는 i)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성이 낮은 사업의 예산액 조정, ii)시중금리 인하에 따른 정책자금 수요감소, iii)농축산물 가격안정에 따라 쌀소득보전직불 및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등 일부 직불성사업의 지급사유 미발생, iv)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 등 일부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지 못한 경우 발생, v)농어촌교육여건 개선 등 일부 신규사업의 소요재원 과다 예측으로 예산 미확보 및 상당액의 불용액 발생, vi)기타 많은 개별사업에서 소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119조 투융자 사업은 3년 단위로 종합평가(중간점검)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2006년 현재 농업·농촌종합대책팀을 구성하여 연도별 사업별 투융자 계획 조정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국고투융자 9조 38억원중 영농규모화 촉진, 전문농업인 육성 등 농업 체질 강화 및 경쟁력 제고 분야에 2조 9,240억원(32.5%), 농가소득안전망 확충,

농외소득 증대 등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강화 분야에 1조 8,668억원(20.7%), 농촌 사회안전망 확충, 농촌지역 개발 등 농촌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분야에 9,138억원 (10.1%), 농산물 유통혁신 분야에 7,994억원(8.9%), 산림자원 육성 분야에 6,567억원(7.3%), 농업기계화를 포함한 농업생산기반 정비 분야에 1조 8,431억원 (20.5%)이 집행되었다.

2005년 국고투용자의 사업분야별 내역

(단위 : 억 원, %)

분야(기능)별	계획(예산)(A)	실적(B)	대비(B/A)	비 중
<b>합 계</b>	<b>97,354</b>	<b>90,038</b>	<b>92.5</b>	<b>100.0</b>
<input type="checkbox"/> <b>농업체질강화 및 경쟁력 제고</b>	<b>29,098</b>	<b>29,240</b>	<b>100.5</b>	<b>32.5</b>
○ 영농규모화 촉진	5,056	4,990	100.0	
○ 친환경농업 지원	1,209	1,185	98.7	
○ 농산물상품가치 및 안전성 제고	1,151	1,040	90.4	
○ 전문농업인 육성	1,098	1,087	99.0	
○ 농림업 기술개발 보급	3,814	3,836	97.7	
○ 원예 및 축산업 선진화	4,647	4,256	100.6	
○ 농업정책자금 지원 확대	11,511	12,234	106.3	
○ 지역농업 육성지원	612	612	100.0	
<input type="checkbox"/> <b>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강화</b>	<b>24,178</b>	<b>18,668</b>	<b>77.2</b>	<b>20.7</b>
○ 농가 소득안정망 확충	23,610	18,160	76.9	
○ 농외소득 증대	568	508	89.4	
<input type="checkbox"/> <b>농촌복지증진 및 지역개발</b>	<b>9,745</b>	<b>9,138</b>	<b>93.8</b>	<b>10.1</b>
○ 농촌사회 안정망 확충	1,663	1,662	99.9	
○ 교육 및 기초복지인프라 구축	1,347	1,140	84.6	
○ 농촌지역 개발	6,735	6,336	94.0	
<input type="checkbox"/> <b>농산물 유통혁신</b>	<b>7,928</b>	<b>7,994</b>	<b>100.8</b>	<b>8.9</b>
<input type="checkbox"/> <b>산림자원 육성</b>	<b>6,627</b>	<b>6,567</b>	<b>99.1</b>	<b>7.3</b>
<input type="checkbox"/> <b>농업생산기반 정비</b>	<b>19,778</b>	<b>18,431</b>	<b>93.2</b>	<b>20.5</b>
○ 농업생산기반 정비	18,241	17,747	97.3	
○ 농업기계화 지원	1,537	684	44.5	

(2) 농업·농촌 투융자 성과

UR이후 추진된 농업부문에 대한 투융자는 1단계 42조원 농어촌구조개선대책('92~'98), 2단계 45조원 농업농촌발전계획('99~'03), 15조원 농특세사업, 119조원 투융자계획('04~'13)에 따라 1992~2005년간 국고기준 약 121조원이 투융자 되었다. 그 성과에 대해서는 투융자 효율성 및 체감도가 낮고 사업집행과정에서 일부 부실사례가 발생했다는 비판도 있으나 농업 각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분야별 투융자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999~2005년 농림어업 연평균 부가가치 성장율은 0.31% 증가하였고, 농가소득 및 농가자산은 1998년 대비 각각 48.8%, 55.0% 증가한 반면, 농가부채도 소득증가율 이상 증가하였다.
  - 농림어업부가가치 : ('91) 214,530억원 → ('98) 233,554(108.9%) → ('05) 252,231(108.0%)
  - 농림업 부가가치성장율 : ('91~'98) 연평균 1.2% → ('99~'05) 연평균 0.3%
  - 광공업 부가가치성장율 : ('91~'98) 연평균 4.6% → ('99~'05) 연평균 8.2%
  - 농가소득 : ('91) 13,105천원 → ('98) 20,494(156.4%) → ('05) 30,503(148.8%)
  - 농가자산현황 : ('91) 99,189천원 → ('98) 192,335(193.9%) → ('05) 298,178(155.0%)
  - 농가부채현황 : ('91) 5,192천원 → ('98) 17,011(327.6%) → ('05) 27,210(60.0%)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반 확충은 대폭 진전되었다.
  - 배수개선 : ('98) 84천ha → ('01) 111 → ('05) 129(153.6%)  
 (배수개선율) (45) (59) (68%)(23%P증)

- 발기반정비 : ('98) 30천ha → ('01) 48 → ('05) 69(230%)  
(발기반정비율) (27) (43) (62)(35%P증)
- 기계화경작로확포장 : ('98) 5,608km → ('01) 11,128 → ('05) 16,361(292%)  
(확포장비율) (16) (26) (46.7)(31%P증)
- 농업전반에 걸쳐 전업화·규모화가 진전되었다.
  - 경지 3ha이상 농가 : ('98) 66천호 → ('01) 75 → ('05) 93(140.9%)  
( '05총농가 : 1,273천호) (47) (5.5) (7.3%)(0.7P%증)
  - 밭소 50두이상 농가 : ('98) 2,976호 → ('01) 4,270 → ('05) 4,450(149.5%)  
( '05총농가 : 8,923호) (19.0) (33.3) (49.9%)(3.1P%증)
  - 양돈 1천두이상 농가 : ('98) 1,932호 → ('01) 2,733 → ('05) 2,951(152.7%)  
( '05총농가 : 12,290호) (7.2) (14.0) (24.0%)(2.4P%증)
  - 양계 3만수이상 농가 : ('98) 862호 → ('01) 1,161 → ('05) 1,443(167.4%)  
( '05총농가 : 135,817호) (0.5) (0.6) (1.0%)(0.0P%증)
- 농업기반 확충 및 기계화·규모화 확대로 노동·토지생산성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자본생산성은 농림어업부가치가 줄어 당초보다 감소하였다.
  - 노동생산성 : ('98) 9,897원/시간 → ('01) 12,141 → ('05) 12,297(124.2%)
  - 토지생산성 : ('98) 880천원/10a → ('01) 1,074 → ('05) 1,141(129.7%)
  - 자본생산성(부가가치/자본액) : ('98) 0.42 → ('01) 0.47 → ('05) 0.36(85.7%)
  - 농업기계화율(논, 벼) : ('98) 85.5% → ('01) 88.7 → ('05) 89.9(4.4%P증)
  - 농업기계화율(밭, 주요작물) : ('98) 41.8% → ('01) 47.0 → ('05) 47.2(5.4%P증)
- 품질인증 확대와 안전성 검사 강화 등으로 소비자 지향적인 고품질·안전 농산물의 생산·공급이 확대되었다.
  - 친환경·품질인증농산물 : ('98) 203천톤 → ('01) 294 → ('05) 992(489%)

- 원산지표시이행률 : ('98) 92.5% → ('01) 95.9 → ('05) 96.9(4.7%p증)
  - 쇠고기(한우) 1등급이상 출현률 : ('98) 15.4% → ('01) 29.9 → ('05) 47.9(32.5%p증)
  - 돼지고기 A등급 출현률 : ('98) 24.8% → ('01) 37.2 → ('05) 37.1(12.3%p증)
-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은 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규격화·포장화·직거래화가 촉진되어 농산물 산지유통구조가 선진화되었다.
- 산지유통센터 : ('98까지) 134개소 → ('01) 196 → ('05) 213 (159) → ('05) 232(173%)
  - 표준규격출하율 : ('98) 26% → ('01) 46.2 → ('05) 54.5(28.5%p증)
  - 농산물포장화율 : ('98) 75.1% → ('01) 88.5 → ('05) 87.8(12.7%p증)
- 도매시장, 공판장, 종합유통센터 등을 중심으로 소비지 유통구조가 확립되었다.
- 공영도매시장 : ('98) 18개소 → ('01) 29 → ('05) 32(178%)
  - 농산물공판장(국고지원) : ('98) 24개소 → ('01) 35 → ('05) 34(142%)
  - 종합유통센터 : ('98) 3개소 → ('01) 12 → ('06) 15(500%)
  - 미곡종합처리장 : ('98) 301개소 → ('01) 328 → ('04) 328 → ('05) 302
  - RPC 시장점유율 : ('98) 24.4% → ('01) 27 → ('04) 52 → ('05) 54(3.8%증)
- 김치, 화훼, 과일 등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농산물 수출이 증대되었다.
- 화 훼 : ('98) 12백만불 → ('01) 32 → ('05) 52(433%)
  - 과 실 : ('98) 39백만불 → ('01) 56 → ('05) 121(310%)
  - 채 소 : ('98) 59백만불 → ('01) 121 → ('05) 139(235%)
  - 김 치 : ('98) 44백만불 → ('01) 69 → ('05) 93(211%)
  - 닭고기 : ('98) 1,605천불 → ('01) 3,106 → ('03) 3,761 → ('05) 5,833(363%)
- 농촌 의료·교육여건이 개선되었다.
- 농촌지역 민간병원 부족병상 증설 등 지원
    - ('98) 428개소 → ('99) 489 → ('01) 541 → ('05까지) 894(209%)
  - 농업인 연금지원 : ('98) 616 → ('01) 709 → ('05) 883억원(143%)

- 농어촌 대학생 학자금 융자
  - ('98까지) 80천명, 793억원, ('05까지) 226천명, 1,843억원
-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실적
  - ('98) 33 → ('99) 38 → ('01) 46 → ('05까지) 88개소
- 농어촌학생 대학특별전형 실적
  - ('98) 7,748 → ('99) 8,999 → ('01) 9,460 → ('05) 10,258명
- 농어촌 생활여건도 많이 개선되었다.
  - 농어촌 주택개량('05까지) : 425천동, 47,906억원 지원(융자)
  - 농어촌생활환경정비(면개발) : ('98까지) 299개면 → ('05까지) 770
    - 문화마을조성 : ('98까지) 104개소 → ('05까지) 197
      - \* '04년부터 도시민 농촌유입 촉진을 위해 문화마을조성사업을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추진방식 전환('05까지 30지구 착수)

#### 나. 농업과학기술 개발·보급 투·융자 지원

2005년 농업과학기술 개발·보급 투·융자 지원규모는 국고기준으로 2004년 3,059억원보다 136억원(4.4%)이 증가한 3,195억원이다.

기능별로 보면 DDA·FTA 협상의 진전, 쌀 시장 개방에 대응한 농산물 품질고급화로 주요 농축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932억원, 지속가능한 친환경 유기농업 기술개발과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농산물 생산 체계 구축사업 199억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농업생명공학 기술개발과 첨단 신기술의 현장 실용화 촉진사업 599억원, 농가경영 혁신을 위해 지도·연구역량을 확충하여 기술·정보·경영컨설팅 지원과 전문농업인 육성 강화에 830억원, 고령사회에 대비한 농촌건강장수마을 조성사업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자원 발굴·활용 사업으로 112억원을 지원하는 등 농업과학기술 개발·보급사업의 구체적인 투·융자 부문별 내역은 아래와 같다.

2005년 농업과학기술 개발·보급예산 부문별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2004예산 (A)	2005예산 (B)	증△감 (B-A)	%
<b>I. 주 요 사 업 비</b>	<b>3,059</b>	<b>3,195</b>	<b>136</b>	<b>4.4</b>
1. 주요 농축산물 경쟁력 제고	887	932	45	5.1
2. 친환경농업 육성 대책	163	199	36	21.8
3. 농업생명공학 기술개발	535	599	64	12.0
4. 농촌지도·인력기반 확충	904	830	△74	△8.2
5. 농업기술 연구역량 강화	457	523	66	14.40
6. 농촌자원개발 및 복지여건 조성	113	112	△1	△1.0
<b>II. 기 본 경 비</b>	<b>1,158</b>	<b>1,209</b>	<b>51</b>	<b>4.4</b>
1. 인 건 비	979	1,019	40	4.1
2. 기 본 사 업 비	179	190	11	6.3
(순 계)	(4,154)	(4,346)	(192)	(4.6)
전 체 규 모	4,217	4,404	187	4.4

다. 임업 투·융자 지원

2005년 임업 투·융자 지원실적은 국고기준으로 2004년 7,146억원보다 579억원 (8.1%) 증가한 7,725억원이다.

기능별로 보면 조림·숲가꾸기·묘목생산 등 지속가능한 산림의 육성에 2,161억원을 투자하였고, 기계화 추진·임도 확충·유통체계 구축 등 임업생산기반 확충에 1,924억원, 산불방지·사방사업·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재해방지에 1,548억원, 자연휴양림·수목원·박물관 등 산림휴양·문화공간확대 및 산촌개발에 914억원을 지원하는 등 투·융자 부문별 내역은 아래와 같다.



## 투·융자 부문별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2004예산	2005예산	증 감	
				%
<b>합 계</b>	<b>7,146</b>	<b>7,725</b>	<b>579</b>	<b>8.1</b>
○ 지속가능한 산림의 육성	1,885	2,161	276	14.6
○ 임업생산기반확충	2,139	1,924	△215	△10
○ 산림재해방지	1,437	1,548	111	7.7
○ 산림휴양 및 생태관리	766	914	148	19.3
○ R&D, 국유재산관리 등	919	1,178	259	28.2

투·융자사업의 향후 지원방향은 건강하고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 확대 및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숲 조성, 사유림경영 활성화 및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확충, 대형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방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휴양서비스 확대 및 생활권주변 녹지공간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라. 수산업·어촌 투·융자 지원

2005년 수산업·어촌투융자 실적은 국고기준 8,642억원이며, 2004년에 비해 증가율이 0.5%로 미미한 수준이나 일부 보조사업의 지방이양(16개사업 135억원)과 융자사업의 수산발전기금으로의 이관(2개사업 240억원)규모를 합하면 실제로는 4.9%증가하였다.

기능별로 보면 어촌어항건설, 수협경영지원, 수산자원관리 등 생산기반조성 5,199억원(60.1%), 유통시설지원, 수산물 위생안전 및 수요개발 등 유통개선 362억원(4.2%), 수산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360억원(4.2%), 어업구조조정, 이차보전 등 부담경감 및 소득보전 2,721억원(31.5%)에 집행되었다.

### 3. 2006년 농림·수산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 가. 2006년 농림분야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 (1) 2006년 농림예산 편성방향

2006년 농림예산은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삶의질향상 5개년계획의 실천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정된 자원 범위 내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자원을 편성하였다.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작별예산을 확충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 등 경영안정 및 부담경감에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인프라 및 지역개발 중점을 두는 한편, 농업체질 강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였으나 농업생산기반조성, 양곡 매입·관리 부분은 예산을 축소 편성하였다. 2006년에는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쌀협상비준대책 소요를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사업평가결과를 기초로 자체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구조조정으로 확보된 자원을 중점분야에 증액재원으로 활용하였고, 보조사업은 사업평가와 연계하여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을 통해 사업추진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융자사업은 내실화를 위해 이차보전 형식으로 금융기관 자금 활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원체계를 개편하였다.

첫째,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안정된 소득확보를 위해 직접지불 예산을 확대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부채대책 등 부담경감을 적극 추진하였다. 쌀협상에 따른 쌀농가소득보전을 위해 목표가격을 정하고 산지쌀값이 하락할 경우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경지경사도 14%이상 영농여건이 열악한 밭을 대상으로 한 조건불리지역직불은 전국적으로 확대하였으며, 농가의 경영위험관리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재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출연금 200억을 반영하였다.

둘째, 농촌사회의 안정과 농업인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복지 및 교육분야 지원을

확대하였다.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을 2ha미만에서 5ha미만 농가까지 확대하였으며, 고령·취약농가에 대한 영농인력지원, 가사인력지원, 육아비용지원 등을 신규로 추진하였다.

셋째,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가축분뇨 퇴·액비 등 유기질비료 지원을 확대하였고, 논에 지급하는 친환경농업 직불단가를 인상하고 저농약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으며, 농약사용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천적방제 지원을 확대하였다. 또한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2003년에 시범 도입한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본격 시행하였고, 부적합한 농산물의 생산·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였다.

넷째, 산지유통 거점시설 확충을 위해 산지유통센터건립을 확대하고 경영평가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을 확대하여 포장 및 하역 기계화를 촉진하였다.

다섯째, 창업농, 쌀 전업농 등 전문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지방단위 산·학·연을 연계한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사업을 확대하였다.

여섯째, 생산기반조성부문은 시행중인 지구의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고 수리시설 개보수, 배수개선 등 재해예방사업은 투자를 확대하는 등 투자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다.

2006년 농림부문 예산은 총 10조 5,364억원으로 2005년 보다 7.1% 증가되었으며, 기능별·재원별 규모와 사업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2006년 농림예산 기능별·재원별 규모(2청 포함)

(단위 : 억원)

구 분		2005예산 (A)	2006예산 (B)	증△감 (B-A)	%
일 반 지 출	<b>I. 주 요 사 업 비</b>	<b>80,982</b>	<b>83,495</b>	<b>2,513</b>	<b>3.1</b>
	1. 생 산 기 반 조 성	15,073	14,470	△603	△4.0
	2. 생 산 및 유 통 개 선	4,422	5,071	649	14.7
	3. 기술개발 및 인력육성	6,415	6,690	275	4.3
	4. 부담경감 및 소득보전	30,850	33,634	2,784	9.0
	5. 양 곡 수 급 안 정	14,412	12,930	△1,482	△10.3
	6. 산 립	7,713	8,799	1,086	14.1
	7. 채 무 상 환	2,097	1,901	△196	△9.3
	<b>II. 기 본 경 비</b>	<b>4,177</b>	<b>4,418</b>	<b>241</b>	<b>5.8</b>
	1. 인 건 비	3,368	3,528	160	4.8
	2. 기 본 사 업 비	809	890	81	10.0
	일 반 지 출 계	85,159	87,913	2,754	3.2
	기 금 전 출 금	13,255	17,451	4,196	31.7
	순 계	98,414	105,364	6,950	7.1

(2) 2006년 산림분야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2006년 산림예산은 Top-down제도 정착을 위해 세출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고, 핵심정책사업에 대하여 Zero-Base차원에서 편성하는 등의 기본방향에 따라 산림을 가치있는 자원으로 육성, 산림재해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 임업인 소득증대 및 산림경영기반 구축, 산림휴양·경관 조성 및 생태관리, 국유림확대집단화, 국가연구개발(R&D) 및 정보화 강화 등의 분야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

첫째, 산림을 가치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능별 숲가꾸기 사업 이외에 숲가꾸기 품질향상을 위한 설계·감리·교육훈련비 및 산물수집비를 신규로 반영하였고, 경영림 확보를 위한 산림·산촌 클러스터 기본조사 실시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체제 확립을 위하여 국가산림자원조사를 신규로 추진하여 산림의 가치를 증대 하면서 탄소흡수원 확충 등 경제·환경적 기능증진을 위한 산림자원 육성분야에 투자 확대 방안을 모색토록 하였다.

둘째, 산불전문인력 증원배치 및 초대형헬기를 조기 도입하여 대형산불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산사태 등 수해 사전예방을 위한 산림유역관리사업 확대 및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한 방제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등 산림재해방지를 철저히 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산림생태계 보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셋째, 단기소득 임산물과 국산목재이용 육성 등 경쟁력 있는 품목육성과 가공·유통체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산림조합을 산주와 임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육성하는 등 사유림경영의 활성화 및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을 확충해 나가면서, 자연친화적인 임도시설을 확충하고 재해방지 및 경관유지를 위해 이미 설치한 임도에 대하여는 구조개량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비, 물류비, 검역비 등 임산물 수출촉진을 지원하고, 해외임지조사비를 신규로 반영하는 등 해외 자원 확보를 위하여도 적극 노력하였다.

넷째, 주5일 근무제 확산과 가족여가문화 정착에 따른 휴양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휴양·문화 공간을 확대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특히,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도시숲·산림공원과 학교숲을 조성하고 전국 가로수를 조성·관리하는 등 생활권 녹색공간조성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백두대간 훼손지를 복원하고, 등산로 및 등산객 관리를 강화하였다.

다섯째, 경영의사가 없는 사유림을 매수하고 국유지내 사유입목을 매수하여 무분별한 벌채를 방지하는 등 산림의 공익적 관리를 위해 국유림율을 선진국 수준인 30%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면서, 산림정책에 맞는 산림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국가연구개발(R&D)·정보화 등 산림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적극 지원하였다.

2006년 산림예산은 총계 규모로 1조 1,668억 1,199만원으로서 2005년 1조 711억 4,003만원 대비 8.9% 증가하였다. 이중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등 1,713억 499만원을 제외한 순계 예산규모는 9,955억 7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3.2% 증가하였으며 이는 정부 예산의 0.57% 수준이다.

### 산림 예산의 수준

(단위 : 억원)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06
정부예산	32조4,078	75조4,897	127조4,415	167조9,332	175조3,882
산림예산	1,479	3,721	7,343	8,795	9,955
(%)	3.38	0.49	0.58	0.52	0.57

자료 : 산림청 기획홍보본부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877억 700만원,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943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500억 700만원 및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273억 6,2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361억원 3,100만원이다.

부문별로는 산림을 가치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274억 200만원을, 산림재해방지를 위한 체제 구축 등 산림자원보호에 2,154억 300만원, 임업인 소득증대 및 산림경영기반구축에 1,780억 9,100만원, 산림휴양·문화공간 확대 및 생태관리에 1,189억 3,700만원, 임업부문 R&D 및 국유재산관리 등에 2,256억 7,400만원을 편성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국유림사업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 나. 2006년 수산분야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2006년 수산분야 예산은 2005년보다 298억원(3.6%)이 증가한 8,526억원으로서, 생산기반조성 부분은 감소한 반면, 부담경감·소득보전 등 기타 부분은 증가하였다.

## 수산분야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단위 : 억원)

	2005년 예산	2006년 예산	증△감	
				%
<b>합 계</b>	<b>8,228</b>	<b>8,526</b>	<b>298</b>	<b>3.6</b>
<b>□ 부담경감·소득보전</b>	<b>2,711</b>	<b>3,248</b>	<b>537</b>	<b>19.8</b>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345	534	189	54.8
○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	-	200	200	순증
○ 어촌관광 개발	314	639	325	103.5
○ 어업인정책보험 지원	209	180	△29	△13.9
○ 어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1,113	968	△145	△13.0
○ 부실조합 경영개선 등	730	727	△3	0.4
<b>□ 생산기반조성</b>	<b>4,800</b>	<b>4,424</b>	<b>△376</b>	<b>△7.8</b>
○ 바다목장 조성	100	135	35	35.0
○ 국가 및 지방어항 건설	2,089	1,796	△293	△14.0
○ 수협경영 지원	260	261	1	0.4
○ 어업지도·단속	445	358	△87	△19.6
○ 정책자금 지원	929	789	△140	△15.1
○ 수산자원 관리	723	744	21	2.9
○ 자율관리어업 육성 등	254	341	87	34.3
<b>□ 유통개선</b>	<b>362</b>	<b>449</b>	<b>87</b>	<b>24.0</b>
○ 유통시설 지원	272	346	74	27.2
○ 위생안전, 수출지원 등	90	103	13	14.4
<b>□ 기술개발·인력양성</b>	<b>355</b>	<b>405</b>	<b>50</b>	<b>14.1</b>
○ 수산기술개발	283	272	△11	△3.9
○ 기술관리	68	107	39	57.4
○ 어업인교육	4	26	22	550.0

첫째, 수산업 생산기반조성을 위해 바다목장화 사업을 확대하고,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에 신규 투자하였으며, 국가어항 건설은 완공소요와 태풍대비 등 시설보강이 시급한 어항 위주로 지원하는 등 투자의 내실화를 기하였고,

둘째, 수산물도매시장 및 산지가공시설 등 수산물 유통개선시설에 투자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60개 해역의 위생등급 설정과 생산이력제 등 수산물 위생안전사업에 중점 지원하였으며,

셋째, 어업인 부담경감 및 소득보전을 위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조기 완료 및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 완료 소요를 반영하였으며, 어촌·어항을 레저·휴양·관광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다기능어항 및 어촌체험마을 등 어촌관광개발 사업대폭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 II. 구조개선을 위한 주요  
농림수산업 제도개혁

1. 협동조합개혁 .....	25
2. 농림수산물 유통의 개혁 .....	33
3. 행정 추진조직 개편 및 규제개혁 .....	45

## II. 구조개선을 위한 주요 농림수산업 제도개혁

### 1. 협동조합개혁

#### 가. 농업협동조합

##### (1) 개혁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

세계적으로 농산물 시장과 농업환경이 급변하면서 농협의 사업 여건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국가 간 무역장벽이 붕괴되고 시장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협동조합의 경쟁시장은 소규모 지역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WTO 체제 이후 각국 정부는 농업보호정책 감축과 농업생산의 구조조정을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협동조합의 각종 사업은 양적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 선호의 다양화·고급화 추세는 단순 물량 위주의 사업전략을 유지하고 있는 협동조합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여 최근 선진국 협동조합들은 사업전략과 조직구조를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게 혁신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장과 정책의 변화에 대응하여 생존 차원에서 시장지향적 사업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조직구조를 이러한 사업전략과 합치되는 형태로 전환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농업협동조합은 어떠한가? 농협은 과거 정부의 보호아래 농업이 성장하던 시기에는 큰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정부가 농산물의 시장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지해주고 있는 데다, 생산만 하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던 시기였으므로 사업량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거의 운영방식의 개선 없이 영세한 영농규모 등 열악한 농업여건 하에서의 협동조합이 최근 농업환경변화에 적응하는데 많은 구조적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은 상당히 크다. 하지만, 조합경영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에 의하여 조합이 해산하는 사태까지 발생한 경우처럼 영세한 읍면단위의 시스템 하에서 농협에 거는 기대와 실제 역할 간의 괴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정부는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 금융시장 구조조정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농협이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는 조직으로 탈바꿈 되고, 산지 및 소비지의 유통주체로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등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증대를 통하여 농촌의 복지향상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협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 (2) 주요추진사항

### (가) 농협중앙회 신용 및 경제사업 분리 추진

농협중앙회 신용 및 경제사업 분리는 2004년 개정된 농협법(부칙 제12조)에서 농협중앙회는 법률 제6018호 농협법 부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금융연구원이 국회에 제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중앙회의 신용사업 및 경제사업(농업경제사업 및 축산경제사업)을 효율적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자본금 확충 및 운영개선방안, 법인의 설립방안 및 설립기한, 교육·지원사업의 사업비 조달방안 등을 포함한 세부추진계획을 법 시행('05.7.1)후 1년 이내에 마련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농림부장관은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세부추진계획을 농업 또는 금융전문가, 농업인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에서는 자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농림부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농협중앙회 신용 및 경제사업 분리를 논의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농림부내 신·경분리위원회를 구성하고 2006년 1월부터 농림부, 농특위, 학계, 농민

단체, 변호사, 회계사 등 15명으로 운영하였으며, 7월부터는 재경부 등 관계부처, 언론, 농협 등 23명으로 위원회를 확대·운영하여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수협중앙회 독립사업부제 사례분석, 농협의 교육·지원 및 경제사업 현황분석, 농협에서 제출한 세부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세부추진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 전문 연구용역 기관인 한국금융연구원에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된 실무기획팀을 농림부, 농협, 전문가 등으로 확대·개편하여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본금 확충, 법인 설립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논의 및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검토 결과가 농협중앙회 세부추진계획서의 보완 및 추가적인 세부추진 계획 마련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필요 자본금 규모 및 자본금 확충방안 등 논의가 필요한 사안별로 신·경분리위원회에서 집중 검토중에 있으며, 주요 쟁점, 이해관계자들의 이견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과장급, 농민단체, 연구용역 기관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에서 집중 논의할 예정이며, 전문가, 농민단체, 일선농협 등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농민 조합원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신·경분리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나) 일선조합 구조조정 추진

일선조합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부실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2005년 일선조합의 구조개선 추진목표를 조합의 부실정리 및 경영건전성 제고를 통한 조합원·예금자 보호역량 강화로 정하고, 경영부실 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개선 관련 고시와 훈령을 개정하여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을 경영개선요구 대상조합은 순자본

비율 -7% 미만에서 0% 미만으로, 경영개선명령 대상조합은 순자본비율 -20%미만에서 -7%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순자본비율 산정시 경제사업부문의 대손충당금과 부실채권을 포함되도록 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6년부터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순자본비율 4%로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 (3) 협동조합개혁 향후 추진계획

앞으로도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엄격하게 운용하고, 경영진단을 통해 조합의 경영상태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부실확대 등으로 퇴출이 불가피한 경우 부실이 건전조합에 전가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계약이전·파산을 통해 정리하되, 합병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기회를 부여하는 등 경영상황을 감안한 구조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경영약체조합에 대해 사전부실예방조치를 강화하고, 경영정상화 가능조합에 대하여는 구조개선 지원을 강화하되, 경영개선계획을 불이행한 조합에 대하여는 임직원 징계요구, 임원 직무정지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부실을 철저히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미 구조조정을 완료했거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의 부실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실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조속히 부실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의 구조개선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부실조사 대상조합에 대하여 대부분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조사결과 부실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채권보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통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고 조합 임원의 경영책임을 강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2006년 8월 31일 현재 구조개선자금이 지원된 부실조사 대상 144개 조합 중 143개 조합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였고, 조사가 완료된 조합 중 71개 조합의 임직원 등 부실관련자 430명에 대하여 329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또한 소송이 완료된 105억원 중 70억원을 승소하였으며, 224억원에 대하여는 소송을 진행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다.

## 나. 산림조합

### (1) 산림조합 경영진단 실시

산림조합의 자율경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994년에 도입한 신용사업이 IMF 이후 급격히 변한 금융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고, 규모의 영세화로 인해 2003년 신용사업부문에서 25개 조합이 적자가 발생됨에 따라 조합부실 방지 및 경영정상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었으며, WTO/DDA 협상과 각국과의 FTA추진으로 임업과 조합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방안을 강구할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산림조합의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2005년 예산에 조합진단에 관한 소요비용을 반영하였다(1,400백만원 : 국고 980, 자부담 420).

경영진단은 조합의 부실규모 및 운용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조합의 경영정상화 기반을 마련하고, 조합별 특성을 반영한 기능을 재정립함으로써 산림조합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영진단은 중앙회소속 144개 조합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경영진단 추진의 전문성·공정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학계·임업계 등 외부인사로 경영진단위원회(9명)를 구성·운영하였다. 경영진단업체는 공개입찰을 통해 등록된 복수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경영진단위원회에서 전문성·실행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하였다.

경영진단의 분야는 신용사업과 일반경제사업 부문 등 산림조합의 전반적인 사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6개월(5~11월)동안 추진하였다. 진행과정은 우선, 지역별 특성에 따른 대표조합을 6개 선정하여 표본조사를 통해 현지실사를 위한 실사기준과 정형화된 틀을 만들고, 이어서 144개 조합에 대한 전면 서면조사를 거친 후 현지실사 하였다.

경영진단결과 자산규모는 2조 3,165억원으로 조합당 160억원이었으며, 이익

잉여금 적자누적조합은 29조합 △274억원, 자본잠식조합은 28조합 △274억원으로 조사되어 당초 예상보다 부실이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부실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영세한 산림사업 규모와 임산물 저온저장시설, 직매장 등 경제사업에서의 수익 저조가 일반사업 분야의 경영부실 원인이 되었고, 신용사업의 경영부실로는 부실채권, 낮은 예대율(39%), 유가증권 투자손실, 금융사고 등이 주요 원인이 되었다.

## (2) (가칭)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144개 지역산림조합에 대한 경영진단실시 결과 29조합에서 △274억원의 누적 결손이 발생하였으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상 순자본비율 2%미만의 부실조합이 27개가 발생함에 따라 통폐합 등 구조개선이 불가피하여 「산림조합경영진단위원회」에서 부실조합의 구조조정 및 부실심화 방지를 위한 구조개선법 제정을 제의하였고,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경영개선 및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고, 정부의 자금지원 근거 확보를 위하여 “(가칭)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잠식으로 정상 경영이 어렵거나, 재무상태가 일정기준에 미달한 조합에 대해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우려)조합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산림청장은 부실조합 및 임원에 대해 부실정도에 따라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등 적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회는 구조개선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과 MOU 체결 및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경영개선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에 대해 임원의 직무정지 및 해임, 계약이전, 6월 이내 사업정지, 설립인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자본잠식

조합 임·직원에게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부실책임이 있는 임·직원 등 부실관련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여 손실분담 및 책임 경영제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다섯째, 조합 구조개선 촉진을 위해 정부출연, 기금채 발행 등 재원 조성범위를 확대하고, 기금운용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외부인사를 확대하였다.

여섯째,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기타 경미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이 마련되면 부실조합에 대하여는 신용사업 업무정지,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조합에 대해서는 통·폐합 등 강력한 구조개선을 추진하여 건전한 산림조합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다. 수산업협동조합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함께 경영개선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함으로써 일선수협이 어업인 자조조직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00년부터 1,305억원의 무이자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였으나 자본잠식규모에 비해 지원액이 과소하여 경영개선 효과가 미흡하였다.

따라서, 일선수협의 부실원인 및 규모 등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2년 9월부터 2003년 4월까지 경영진단을 추진하여 ‘부실조합 등’으로 지정하고 47개 조합에 대해 2010년까지 자본잠식액을 회복하는 목표하에 인원감축, 고정자산 매각 등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를 체결하면서 이의 이행을 전제로 2003년 8월부터 매년 471억원(무이자자금 환산 6,709억원) 및 2006년 1월부터 2010년까지 무수익고정자산 매각손실에 대한 추가지원 자금



4억원(무이자자금 환산 194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6년 하반기에 사업기간 변경에 따라 조기확보된 자금 256억을 일선수협에 지원하였다.. 또한 회생이 불투명한 부실조합에 대해서는 합병(2개 '04.5.31) 및 계약이전(1개, '04.10.31)을 통해 2004년 총 922억원(합병 376억원, 계약이전 546억원)의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하여 2003년 △155억원 적자에서 2005년 272억원의 흑자를 실현하여 경영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해왔던 구조조정을 2002년말까지 조기 마무리하여 인력 985명('00:5,275명 ⇒ '02:5,290명), 점포 75개(493개 ⇒ 418개)축소, 부실채권 감축(10.5% ⇒ 3.9%), 고정자산매각(342억원) 등을 완료하였으며, 구조개선법 시행후에는 적기시정조치 및 MOU를 통한 자구노력을 통하여 MOU를 해지한 4개조합을 제외한 43개조합의 인원감축 510명('02:2,572명 ⇒ '05:2,062명), 부실점포 폐쇄 29개소('02:432개 ⇒ '05:403개), 고정자산매각 312억원('03:114억원, '04:83억원, '05:115억원), 출자금증대 208억원('02:977억원 ⇒ '05:1,185억원)등을 완료함과 아울러 2005년 12월말 기준으로 회계법인과 공동으로 순자본비율 산출등의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순자본비율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의한 경영상태평가결과를 감안하여 46개조합에 대해서는 부실우려조합(경영개선권고, 요구), 7개 조합에 대해서는 부실조합(경영개선명령)으로 지정하고 적기시정조치로써 상임이사제 도입 및 임직원 체재, 직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등을 시달하여 지속적인 구조조정 및 경영진의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수협 회원조합 부실의 책임이 있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엄격한 책임추궁을 통하여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회원조합 손실보전과 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3년 11월 해양수산부장관의 합병명령조합(3개) 및 2003년말 기준 경영평가 결과 경영상태가 악화된 3개 조합등 6개 조합을 대상으로 2004년 부실조사를 실시하여 부실발생의 원인을 분석, 이 중 3개 조합 37명에 대해 243

역원의 손해배상을 2005년 부실조사를 실시하여 부실발생의 원인을 분석, 이중 4개 조합 11명에 대해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이러한 일선수협외 경영정상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문경영자로 하여금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상임이사제 의무 도입, 조합장의 공명선거 확립, 감독기능의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협법을 개정하여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또한 조합의 부실을 사전 예방하고 부실수협의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협구조개선법”을 제정하여 2003년 10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일선수협외 예금고객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0.12%에서 0.2%로 상향조정하여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01년부터 부실화된 수협중앙회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강력한 독립사업부제 확행을 전제로 1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정상화를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 2001년 275억원, 2002년 550억원, 2003년 711억원, 2004년 1,042억원, 2005년 1,247억원 등 흑자규모가 대폭확대 추세에 있어 수협중앙회의 경영정상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 2. 농림수산물 유통의 개혁

### 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산물유통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산지와 소비지의 유통시설이 확충되어 농산물의 표준규격출하율이 증가되고 선진적인 거래제도의 도입시행으로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는 등 유통개혁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지시장의 변화와 농산물 수급불안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산지의 준비태세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고, 유통경로별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혀 나아가야 할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대형할인점의 급속한 증가, 소비의 고급화·다양화, 농산물의 과잉 공급 기조 등 농산물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지금까지의 유통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유통개혁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 (1) 수급 및 가격안정체계 구축

생산계획단계부터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주요 농축산물 28개 품목에 대한 관측 정보를 제공하고, 관측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표본농가 11,451호 및 모니터 요원을 1,155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품목별 수급모형 및 단수예측 모델 개발 등 과학적 선진 관측기법을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농가의 생산·출하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를 적기에 제공토록 하고 있다.

또한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 노지채소 위주로 시행해 오던 채소수급안정 사업을 2001년부터 오이, 호박, 가지 등 시설채소까지 확대하였으며, 노지채소 계약재배 물량에 대하여 운용해 오던 최저보장가격제도는 개방화시대에 맞는 계약재배안정화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시범사업('06~'07)을 실시하고 있고, 계약재배 사업 주체를 사업농협중심에서 가공업체, 대형유통업체 등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현재 전체 채소생산량의 10%를 차지하는 계약재배 사업 물량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농협 등에 자금 지원을 확대해 향후 2013년까지 23% 수준으로 계약재배 물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과실에 대해서도 과수농가의 경영안정과 생산자단체의 시장 대응력 향상 등 과실류의 수급안정을 위해 2001년에 사과·배를 대상으로 과실계약 출하사업을 처음 도입한 후 2002년에는 단감, 2003년에는 감귤을 각각 추가하였으며, 2005년에는 사과, 배, 감귤의 사업참여 기준 물량을 기존 200톤에서 300톤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사업결과에 따른 손익 배분 및 보전 방법의 개선 등을 통하여 사업의 규모화와 참여확대를 도모하였다. 앞으로도 계약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계약출하사업을 과실수급안정을 위한 핵심제도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2000년부터 생산자단체의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조금을 조성하는 품목별 생산자단체에게는 정부가 일정률(1:1 매칭펀드)의 자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시행 초년 2개 품목이던 것이 2006년 19개 품목으로 확대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자조금 단체수를 늘려 정부 주도의 수급조절 제도에서 생산자단체가 주도적으로 농산물 판로 확대와 수급조절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2) 산지유통전문조직 육성 및 농산물 표준규격출하 확대

농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농산물도 산지에서부터 대량의 표준규격농산물이 지속적으로 소비지시장에 공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영농규모의 영세성, 생산자의 조직화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농업인의 유통참여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규모화·전문화된 일선조합 및 영농조합법인을 산지유통전문조직으로 지정하여 생산단계부터 상품화·유통단계까지 수확후 품질관리, 공동출하·브랜드화 유통 및 출하조절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지유통전문조직 264개소('06)를 선정, 유통활성화자금 3,019억원('06)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산지유통전문조직 중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광역화·전문화를 유도하여 브랜드마케팅 경영체로 육성하기위해 책임경영제, 독립채산제 등 혁신요소를 고루 갖춘 기업형 공동마케팅조직을 2013년까지 80개소를 육성할 계획이다.

우선 2005년~2006년 15개소를 시범사업자로 선정하여 유통정책자금, 무이자 인센티브자금, 마케팅·홍보비용 등을 집중 지원하였으며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 시스템 도입과 평가를 통한 차등지원 및 경쟁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유통효율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산지유통의 핵심체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평가를 통해 우수한 조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조직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하여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산지에서부터 대량의 규격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도록 채소·과일 산지유통센터를 2004년 213개소에서 2005년 232개소로 확대하였다. 앞으로 산지유통센터의 시설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산량의 50%를 산지에서부터 선별·포장·브랜드화 하여 출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현재 132개 품목에 대한 표준규격이 제정되어 있는데 영농규모의 영세성, 생산자의 인식미흡 등으로 인하여 농산물 표준규격 출하율은 54.5%('05) 수준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앞으로 표준규격출하율 제고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을 2006년에는 전체 공동선별·포장비의 30% 수준인 481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현재 54.5% 수준인 표준규격출하율을 2008년까지 60% 수준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 (3)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 제고

농산물을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판매하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는 고효율·저비용 유통구조인 직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백화점·할인점 등 민간대형유통업체의 농업인과의 직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 업체에 직거래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산물 상품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소비자 유통업체와 산지 농업인간 상호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산지 생산자가 소비자 유통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상품성 및 품질경쟁력을 제고하게 되어 직거래가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아울러 소비자 중심 직거래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소비자협동조합 등 소비자 단체에 직거래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뿐 아니라 2004년부터 소비자단체의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안전농산물의 직거래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4)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확충으로 유통경로 다원화 및 유통단계 축소

그 동안 도매시장 위주의 농산물 유통에서 벗어나 농산물 유통경로를 다원화하고 예약·주문거래로 유통단계를 축소하기 위해 농산물 종합유통센터를 2006년까지 15개소를 개장하였으며, 2008년까지 1개소를 추가 개장할 계획이다. 종합유통센터는 유통단계축소 뿐만 아니라 파렛트 출하를 통한 하역기계화로 물류비를 절감하고 있다. 또 산지에서부터 소비자까지 콜드체인시스템을 구축하여 고품질 신선농산물을 공급하는 등 종합유통센터를 새로운 선진유통모델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운영중인 종합유통센터는 운영주체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여 개장 8년 차인 2005년에 2조7,986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등 농산물전용 도·소매시설로 정착되어 생산자 수취가격 제고 및 소비자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산지 생산자조직을 종합유통센터 전속 출하조직으로 육성하고, 할인점·판매점 등 대형유통업체를 판매가맹점으로 확보토록 유도하기 위해 매취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산지 생산자조직과 소비자 가맹점과의 전자상거래(EDI)시스템을 구축하여 물류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

(5) 도매시장 유통시설 확충 및 거래제도의 다양화 등

정부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85년 가락동 도매시장을 시작으로 2004년 강서도매시장까지 32개 공영도매시장 개설을 완료하고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을 통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

정부는 도매시장 경유 거래물량의 감소 원인을 경직된 거래제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다양하고 효율적인 거래제도로의 변화를 주기 위하여 농안법 개정을 2005년부터 추진하여 2006년 12월 국회의결을 통해 마무리 하였다.

지난 2000년 농안법개정으로 경매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장도매인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서울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 제시장을 2004년 6월부터 개장, 운영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이번 농안법 개정에서는 현행 경매제에 탄력성·효율성을 부여하고자 정가·수의매매의 범위를 확대, 유통주체간 거래규제완화, 도매시장기능 복합화, 도매시장 운영개선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효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정가·수의매매 범위 확대 노력과 함께 2000년부터 농산물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통비용을 절감을 도모하며 도매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자경매를 실시하고 있다. 전자경매비율은 첫째 4%, 2001년 32.8%, 2002년 55.5%, 2003년 64.2%, 2004년 68.5%, 2005년 70.6%까지 높아 지는 등 도매시장의 주된 거래방법으로 자리잡았다.

한편, 전자경매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락가격의 실시간 제공 역시 경매절차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있어 출하자가 안심하고,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도매시장 육성에 한 몫을 하고 있다.

#### (6) 물류표준화와 하역기계화로 농산물 물류비 절감

정부에서는 소비자유통의 투명화를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포장화, 하역기계화를 통한 선진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배추 포장유통시범사업을 수도권 8개 공영도매시장을 대상으로 2006년 9~10월 기간동안 실시하고, 시범사업결과를 분석·평가 보완하여 2007년부터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으로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배추·무 포장유통사업이 정착되면 생산농가의 상품성향상, 정가 거래에 의한 부가가치창출, 도매시장의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비포장 농산물의 포장화 촉진을 위해 도매시장내 쓰레기 유발부담금을 인상하여 포장품과 비포장품의 차별화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주요농산물 포장규격을 표준파렛트 적재효율이 90%이상이 되고 소비자 구매패턴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시장의 유통환경에 대응하였다.

하역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파렛트, 지게차, 전동차 등 하역기계화 장비 보급 뿐만 아니라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일관수송체계 구축을 위해 파렛트·플라스틱상자

등 물류기기를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임차료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원조건은 물류기기 구입시 보조 50%이며 물류기기 임차시에는 임차료의 60%를 지원하고 있다.

(7) 농산물 안전성 강화로 소비자의 안전식생활 보장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및 공급을 위해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부적합한 농산물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및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우선, 생산자가 스스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560천명의 생산자와 18천명의 관계공무원, 농약판매상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토양·수질 등 농업환경 및 농산물 생산·수확후 처리단계의 위해요소를 종합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우수 농산물관리제도(GAP)를 2003년 도입하여 3년동안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6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 농산물에 농약검출 등 농산물안전성에 위해가 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추적을 통하여 문제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농산물이력 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는 시범사업 및 실무교육 등을 거쳐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부적합 농산물의 시장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성조사를 62천건 실시하였고, 안전성조사 범위를 재배환경과 병원성 미생물(살모넬라 등)로 확대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농산물 안전성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지자체, 도매시장 등에 조사결과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PDA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중금속기준 확대를 위해 정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금속 기준 설정위원회



(’04.11)의 결정에 따라 2006년 농산물 중금속(Cd, Pb)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쌀, 배추 등 주요 농산물 10품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수입농축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데 이어 더욱 강력한 단속을 위해 제재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과학적 정성·정량분석법을 개발하고 지도 및 단속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다.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소비자가 안전성조사에 참여하는 농소정협의회를 수차례 운영하였고, 농·소·정협력사업을 통한 도시 소비자의 농업 현장체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농식품안전자문단을 2003년말 구성하여 소비자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 나.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WTO 체제 출범, FTA 협상진행 이후 시장개방 등 자유무역 확대로 목제품과 버섯, 잣, 대추, 호두, 산채류 등 값싼 외국 임산물의 수입확대가 진행됨에 따라 외국 임산물과 당당히 겨루어 나갈 수 있는 국내 임산물 생산자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직거래 유통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유통기반시설 확충, 산지의 전문생산자 조직 육성 및 지원 강화, 생산자의 시장 교섭력 제고를 위한 신속한 유통정보 제공 등의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산물의 산지와 소비지가 가깝게 연결되는 직거래 판매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전국에 95개소의 산림조합 유통조직 직매장을 통해 단기임산물의 유통체인망을 구축하고, 목재유통센터 2개소, 목재 집하장 17개소를 조성하여 목재수집·운반·가공기능 확대로 산지별 목재유통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있다.

또한 산림관상자원의 안정적인 생산유도 및 직거래판매 유도를 위하여 현재까지 전국 주요 생산지역에 조정수유통센터 3개소, 종묘전시판매장 1개소와 생산자단체가 생산한 청정 임산물의 직거래 유통을 위한 산채 등 단기임산물유통센터 9개소를 지원하여 유통경로의 다원화 및 유통단계 축소 등 유통구조개선 개선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단기임산물 유통센터 조성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2004까지		2005		2006	
	개 소	금 액	개 소	금 액	개 소	금 액	개 소	금 액
단기임산물 유통센터	13	9,000	3	3,360	5	1,860	5	3,780

한편 우리나라는 연간 3천만<sup>m</sup>³ 내외의 목재자원을 이용하고 있으나 아직은 가꾸어 주어야 할 단계에 있는 산림이 62%로 목재자원이 부족하고 자급률은 8.8%대로 낮은 실정에 있어 국산 소경재의 활용을 위하여 1997년에 여주목재유통센터를, 2004년에는 동해사업소를 준공하여 국산재 이용촉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1988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7개소에 목재집하장을 조성하여 국산재활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임산물의 경우 경영규모의 영세성, 생산자조직의 미흡 등으로 전문적인 임산물 생산자조직의 유통참여가 어려웠던 바, 정부는 법인 경영체를 중심으로 규모화·단지화·전문화된 임산물의 유통구조 조성을 위해 산지유통전문조직을 집중 육성하여 생산에서 가공·유통단계까지 품질관리, 공동출하, 브랜드화 유통 및 산지와 시장의 출하 조절에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동선별자금 등 표준출하자금('06년 5억원) 및 밤, 표고 등 주요 임산물의 수매자금('06년 525억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단기임산물의 수급불안과 소비지시장의 급격한 구매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매년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66개소('06년 72억원) 및 홍수 출하

기 임산물의 적기 수매를 위한 단기임산물 수집자금('06년 10억원)을 지원하여 수급 조절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소비추세는 가격보다는 질 위주로 먹을거리의 안전성과 맛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가격경쟁력보다는 지역별 차별화·표준화된 품질과 브랜드를 활용한 임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표준출하규격 제정 운영 및 임산물의 지리적표시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 최초로 양양 송이가 임산물 지리적표시 1호로 등록한 이후 현재까지 장흥 표고, 산청 꽃감, 정안 밤 등 4개 품목이 등록완료하고 현재 경산 대추, 봉화 송이 등 8개 품목에 대한 지리적표시 등록이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역별 명품 임산물 육성을 위한 지리적표시 등록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현황

구 분	등 록 완 료				등 록 추 진 중
임산물 지리적 표시등록	양양 송이 (1호, 2005)	장흥 표고 (2호, 2006)	산청 꽃감 (3호, 2006)	정안 밤 (4호, 2006)	경산 대추, 담양 죽세품, 청양 구기자 등 8개 품목

2003년부터 밤에 대한 관측정보 제공을 시작으로 2006년 현재 표고, 대추 품목을 추가하여 산지 생산현황, 시장가격, 수출 및 수입 등 해외 시장동향 등에 관한 종합적인 관측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자에게는 생산·출하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임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되어, 생산계획 단계부터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임업관측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06년 2억원)하고 있다.

임업인의 정보화 운영능력 향상에 의한 전자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2001년부터 임업인에게 홈페이지구축을 지원하여 2006년 현재 512개 임가에 홈페이지를 완료하였고, 2010년까지 1,000개 임가에 대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자·소비자간의 정보교류를 위해 여주유통센터에 구축하여 운영 중인 임산물 유통정보시스템(www.forestinfo.or.kr)을 통한 임산물 가격·유통·생산기술 정보의 전파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임업인 홈페이지구축 현황

(단위 : 임가, 백만원)

구 분	계		2004까지		2005		2006	
	임 가	금 액	임 가	금 액	임 가	금 액	임 가	금 액
임업인 홈페이지 구축	512	840	331	570	91	135	90	135

한편 최근 청정 임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증가하면서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임산물의 생산 및 공급을 위해 밤 등 주요임산물의 생산이력제 도입, 친환경 생산을 위한 장비지원, 유기질비료·목탄·목초액 등 친환경 자재 활용에 의한 토양 개량사업 등 친환경임산물의 생산기반조성사업을 강화하고, 친환경임산물 인증 임가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우선 지원 및 경영컨설팅 등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국산 장뇌 등 수입임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생산이력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생산자단체의 자발적인 유통시장 정화활동 확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신뢰 제고를 위하여 2004년부터 산림조합 계통 유통조직을 중심으로 임산물에 대한 리콜제를 실시하여 소비자의 신뢰 제고 및 안전성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다.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수산물은 강한 변질성, 다양한 품목과 크기로 인해 근본적으로 유통상의 취약성을 갖고 있어 어획 후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유통구조가 필요하며, 정부는 유통의 왜곡에 의한 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첫째, 대형 할인 매장의 확대, 생산자와 유통관계자 또는 소비자간 직거래 확대 등으로 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여 도매시장의 기능이 위축되고 있어 도매시장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었다.

우선, 지난 2001년 5월부터 가락, 노량진, 구리 등 수도권 3개 도매시장에서 패류 11개 품목에 대해 실질경매를 추진하여 2002년 8월까지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으며, 2003년 9월 1부터는 선어부류까지 확대하여 추진함으로써 거래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매 당일 어대금 정산으로 생산·출하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등 도매시장의 기능을 정상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경매시행 후 일부 시행착오가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는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생산 어민의 직출하가 용이하게 되었으며, 대금결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둘째, 생산자 단체인 수협의 직거래 사업을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유통체계를 다양화하여 경쟁을 통한 유통구조개선을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다

셋째, 물류표준화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에 지게차, 전동차 등 하역장비 구입비 320백만원, 표준규격 어상자 구입지원 대금 1,462백만원 등 총 1,782백만원 지원하였으며, 수산물표준거래단위 및 표준규격을 제정하였다

넷째, 수산물 물류기반 확보를 위해 1995~2008년중 2,072억원을 투입하여 부산 감천항 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노량진수산물시장 현대화를 위한 2006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07년 기본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며, 매년 신규 또는 노후화된 산지 수협의 위판장 2~3개소를 지원하는 등 하드웨어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기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 3. 행정 추진조직 개편 및 규제개혁

#### 가. 농림수산분야 행정추진조직 개편

##### (1) 농업분야

##### (가) 대국민서비스 강화 및 국경검역인력 증원 등

쌀 재협상 이후 농가소득보전대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FTA협상을 위한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협상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수행할 인력, 농산물품질관리 및 수입쌀 원산지 단속인력, 농축산물 국경검역인력 및 수입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실무 153명을 증원하였다.

- 본부 : 자유무역협정2과 신설·운영인력,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자유무역협정과 실무인력 등 15명(4급1, 5급8, 6급4, 7급2, 직급상향 5급1)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산물품질관리·대민서비스 일선기관 실무인력, 수입쌀 원산지 단속인력 24명(5급 10, 6급14, 직급상향 6급2), 10출장소 분리증설
- 농업연수원 : 청사시설관리 및 방호인력 1명(7급1)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축산물위생감시과·동물보호과·위험평가과 신설·운영인력, 검역탐지견센터 운영인력, 고성출장소 실무인력, 인천공항 검역인력, 수입축산물 정밀검사 인력, 조류인플루엔자·브루세라·수퍼박테리아 연구인력 86명(4급3, 5급11, 6급22, 7급26, 별정3, 연구관1, 연구사20)
- 국립식물검역소 : 고성출장소 실무인력, 목재포장재 검역인력, 인천공항 CIQ인력 21명(5급1, 6급5, 7급7, 8급8, 직급상향 5급5)
- 종자관리소 : 보급종 생산·공급인력, 재배시험 및 특수검정 인력, 보급종 및 품종보호 관리인력 6명(6급3, 연구사3) 등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대통령령 제19368호, 2006. 3. 3, 대통령령 제19418호, 2006. 3. 29),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농림부령 제1517호, 2006. 3. 8, 농림부령 제1520호, 2006. 3. 29)>

(나) 주요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농림조직 개편

예산·기금 배분 및 집행점검기능 강화, 효율적인 홍보기획 및 지원체계를 구축, 맞춤형 농정 총괄·조정 및 직접지불제 총괄업무를 수행할 과단위 기구 증설, 조직의 탄력성이 큰 참모조직은 “과”에서 “팀”으로 변경하는 등 조직개편 할 예정이다.

첫째, Top-down제 도입에 따라 예산·기금 배분 및 집행점검기능 강화

둘째, 효율적인 홍보기획 및 지원체계를 구축

셋째, 맞춤형 농정 총괄·조정, 농가등록제, 농촌형 특별 소득보조, 농가소득정책, 직접지불제 총괄업무

넷째, 조직의 탄력성이 큰 참모조직은 “과”에서 “팀”으로 변경

다섯째, 한미 FTA 협상을 전담 조직 신설

여섯째, 혁신리더쉽 강화를 위하여 혁신인사기획관실 개편

일곱째, 식량국장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 등

여덟째, 종자·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지원 전담조직 신설 등

(다)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한 2007년 농림부 소요정원 협의

농촌정주지원단·정주지원과·도농교류과 신설 등 2006년 수시직제 반영분야, 농지은행제도 등 법령의 제개정으로 실무인력 증원이 필요한 분야, 품질 및 안전성·농축산물검역검사·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분야 등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대민서비스 강화가 필요한 분야 등을 중심으로 2007년 농림부 소요정원을 작성,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다.

- 본부 : 농촌관광·복지 및 지역개발 분야(농촌정주지원단·정주지원과·도농교류과 신설 및 실무인력 등), 법령 제개정 및 장비도입 분야(농지은행제도·동물보호법·공익수의사제도 실무인력·통합정보화팀 신설 및 실무인력), 친환경농업·품질 및 안정성 분야(자연순환농업팀 신설 및 실무인력·육류

이력추적시스템·검역제도 관리·축산물위생 관리 등), 행정수요증가 및 실무인력(종자생명산업과 및 북한농업협력팀 신설 및 실무인력 등)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품질 및 안정성분야(원산지 단속·LMO관리·GAP 관리 인력 등), 친환경농업분야(친환경인증 인력), 시험·연구 분야(정밀분석·사료분석 인력), 출장소 분리 증설 등
- 농업연수원 : 행정 및 청사방호 인력, 교육과정개발 전문인력 등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품질 및 안정성 분야(동물약품관리과·축산물위해관리과 신설 및 실무인력 등), 검역·검사 분야(동물검역부 신설·탐지견관리과 신설 및 실무인력·CIQ 2교대 근무인력), 시험·연구 분야(조류인플루엔자과·부루세라과 신설 및 실무인력, 연구인력 보강 등)
- 국립식물검역소 : 검역·검사 분야(우편식물검역담당과 신설 및 실무인력·주한미군 반입식물 및 CIQ 검역인력 등), 시험·연구 분야(중부격리재배관리소 확대 등)
- 국립종자관리소 : 품질 및 안정성 분야(보급종 생산·공급인력, 품종보호 심사 인력, 등록관리인력, 민간육종 활성화인력, LMO관리 인력 등)

(라) 농촌진흥청 2006년 직제개편 추진

2006년에는 급변하는 대내외 농업환경 변화와 새로운 기술개발 수요에 맞추어 직제개정을 추진하였다.

- 국가경쟁력 강화와 농촌 환경변화에 대응한 조직 개편

FTA/DDA 등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05년 소요정원 결과를 반영하여 과단위 기구를 신설하고 인력 34명을 증원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국내 인삼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연구인력 3명과 지원인력 1명을



증원하였으며, 2003년 8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차세대성장동력 10대 산업으로 선정된 「바이오 신약/장기 생산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축산연구소에 관련 연구인력 6명(연구관 2, 연구사 4)을 증원하였다. 또한 외국 쌀과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의 다양한 소비패턴 변화에 부응하여 쌀 품질고급화, 다양화 및 육종효율화 증대를 위해 작물과학원에 쌀 연구인력 2명(연구관 1, 연구사 1)을 증원하였으며, 외국 육종 회사의 품종 로열티 문제에 대응할 국산 장미 품종 육종 전문 연구인력 2명(연구관 1, 연구사 1)을 증원하였다.

또한 세계적으로 GM 농산물 재배 면적과 점유율이 급속히 증가되고 국내에서도 GM작물 개발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실용화 시대를 대비한 범국가적 안전성 평가 및 철저한 관리체제 구축, 국제 환경에 대응한 GMO의 안전성 정책 수립과 정책추진에 필요한 판별 및 평가기술 개발에 대비한 연구인력 5명(연구관2, 연구사1)을 증원하였다.

한편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됨에 따라 농촌자원개발 연구과제 및 기능 확대를 수행할 연구인력(연구사) 1명을 증원하였으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축산환경분야 연구인력 2명(연구관1, 연구사1)을 보강하였다.

또한 농업인의 삶의질향상 지원과 농촌 고령화에 대비한 농촌노인의 생산성 개발, 농업소득 한계 극복을 위한 농업인의 가공기술 수요 증가 등에 따라 농촌지원국 소속의 농촌생활자원과를 농촌자원과와 농촌생활과(신설)로 분리하고, 관련 지도인력 8명(생활지도관4, 생활지도사4)을 증원하였다.

아울러 최근 축산업에 큰 위해요인이 되고 있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광우병 등악성 가축전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방역지도 및 홍보, 가축위생관리 기술보급 강화를 위해 지도인력 1명을 증원하였고, 국민의 건강식에 대한 관심 고조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오리 전문 연구인력 2명(연구관1, 연구사1)을 증원하였다.

또한 후계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해 한국농업전문학교 학생수 증원 학과에 조교1명과 정보교육센터의 운영을 위한 전산인력 1명을 증원하였다.

○ 고위공무원단체도 도입과 고객지원센터 설치

2006년 7월 1일부터 고위공무원단체도가 도입됨에 따라 본청 및 소속기관 국장급 이상 21개 직위에 대한 공무원 정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정원으로 변경하고, 고객관리 전담부서인 고객지원센터를 차장 직속의 과단위 기구로 설치하여 민원관련 제도개선 및 영농현장의 애로·문제 발생시 현장조사·확인·지원등의 기능을 One- Stop으로 총괄하도록 하였다.

○ 향후 조직개편 추진계획

2007년 정기직제는 2005년에 실시한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 개발, 미래 국가 성장동력 기술개발, 농촌 고령화 등 농촌사회 분야 등에 중점을 두어 1연구소 1시험장 신설과 필요 인력 23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인삼품종 및 현장애로 기술개발을 위해 현재 작물과학원 인삼약초과를 인삼약초연구소로 확대 개편하고 필요인력 6명(고위공무원 1, 4·5급 1, 7급 1, 연구관 1, 연구사 2)을 증원하고, 국산감귤 조기육성을 위해 난지농업연구소의 감귤과를 감귤시험장으로 확대 개편하고 필요인력 3명(연구관 1, 연구사 1, 6급 1)을 증원할 계획이며 아울러 축산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가축분뇨 자원화 연구(4명), 농업시설재해 방재연구(3명), 농업유전자원 수집·보존(1명), 바이오그린21 사업팀의 프로젝트 관리(2명), 여성농업인의 생산적 복지지원(1명),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기능(1명), 고객지원 현장지원 기능보강(1명) 등에 중점을 두어 농업·농촌의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고 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해 나갈 것이다.

## (2) 산림분야

산림행정조직은 산림청(4본부 1단 25팀)과 10개 소속기관이 있다. 그 소속기관으로 국립산림과학원(4개 연구소), 국립수목원, 산림인력개발원, 산림항공관리본부(7개 산림항공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5개 지방산림청(27개 국유림관리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570명(산림청 221, 소속기관 1,349)이다.

2006년에는 3차례의 조직개편이 있었다. 2006.1.1 변화하는 산림행정 수요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지원·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산림정책국 정보통계과를 정책홍보관리관실 정보통계담당관으로, 정책홍보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을 산림정책국 국제협력과로 실국간 기능을 조정하였으며, 임업관련 전문교육 강화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 임업연수부를 산림청 소속 산림인력개발원으로 설치하고, 휴양림의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위하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기관장을 민간전문가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산림관리청”의 명칭을 “지방산림청”으로 변경하고 소나무재선충병방제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소속기관 실무인력 6급 2인을 본청으로 전환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6.1.26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등을 위한 소나무재선충병방제과를 신설하여 6명을 증원하고, 산림보호과를 산림환경보호과로, 산림보호지원팀을 산림재해상황팀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지방청 사유림매수 확대에 따라 양양·순천국유림관리소를 신설하고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평가과를 신설했다.

또한 백두대간보호를 위해 지방산림청에 14명을 증원함과 동시에 기능직 통신원 8명을 산림항공관리소로 전환배치하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교대근무를 위해 12명을 증원하였으며, 관할 면적이 넓은 평창·영주국유림관리소장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 하였다.

2006.7.27 책임행정구현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본청을 본부-팀제로 전환

했다. 이번 수시직제개편은 2005년 자율혁신을 위한 진단·혁신관리 결과를 반영하여 기능 및 목적별 혼합조직을 기능별 조직체계로 전환하고, 2006.8.5부터 시행되는 국유림경영·관리법, 산림자원법 및 산림문화휴양법 제정에 따른 신설기능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도시숲정책팀, 산촌소득팀, 등산정책팀을 신설하면서 실무인력 9명(4급1, 5급5, 6급3)을 증원하였다.

또한 산지의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위해 산지보전단을 신설하여 산지정책, 국유림관리, 백두대간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아울러 산림항공관리소의 위상강화를 위해 기관명칭을 “산림항공관리본부”로, 7개 지소를 “산림항공관리소”로 변경하였다.

본부-팀제 전환에 따른 조직개편 내역

종 전	개 편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홍보관리관 □□혁신인사, 재정기획, 행정법무, 정보통계, 정책홍보</li> <li>• 산림정책국 □□산림정책, 산지정책, 국유림경영, 국제협력</li> <li>• 산림자원국 □□산림자원, 숲가꾸기, 경영지원, 임산물이용, 산림휴양</li> <li>•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 산불방지, 치산, 백두대간, 소나무재선충병, 산림재해상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홍보본부 □□혁신인사, 재정기획, 행정법무 정보통계, 정책홍보</li> <li>• 자원정책본부 □□산림정책, 산림자원, 숲가꾸기, 국제협력, 도시숲정책</li> <li>• 산림이용본부 □□경영지원, 목재이용, 산림휴양 산촌소득, 등산정책</li> <li>• 산림보호본부 □□산림환경보호, 산불방지, 치산, 산림병해충, 산림재해상황</li> <li>• 산지보전단 □□산지정책, 국유림관리, 백두대간보호</li> </ul>

자료 : 산림청 기획홍보본부

### (3) 수산분야

선진 통상국가 도약의 일환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수산분야 협상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유무역대책팀을 2년간 한시조직으로 신설하였으며, 국제협력관실의 과 단위 조직을 팀제로 전환하여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수산정책국에서 담당하던 WTO/DDA 국내대책 수립에 관한 업무를 국제협력관실 통상협력팀으로 이관하는 등 수산관련 국간의 업무를 조정하여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수산업의 체질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한편, 수산과학 연구기능 및 조직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에 본부제를 전면 도입함에 따라, 2006년부터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 운영하여 수산관련 연구 성과를 배가 시켜 나갈 계획이며, 해양수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인력개발원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독립시켰다.

2007년부터는 해양수산통계 인프라를 강화하고 통계의 신뢰도 제고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통계자료 서비스를 위하여 전담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 되는 기구 및 인력에 대해서는 이미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다.

## 나. 농림수산분야 행정규제개혁 추진

### (1) 농업분야

2006년에는 농림부 소관 기존규제 515건을 분야별로 철저히 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고, 직접규제보다는 경제적 유인, 자율규제 등 비규제 대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간접규제 방안을 강구하며, 규제정비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주요규제에 대해서는 피규제자에 대한 순응도를 조사하는 등 규제정비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금년 규제 정비계획은 자체적으로 73건의 정비과제를 선정하고, 이중 70건은 2006년말까지 정비완료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 규제정비 추진을 위하여 대상과제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며, 농지·축산위생·유통분야 등의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규제개혁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피규제집단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갈등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정책고객관리시스템(PCRM)을 통한 개선과제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며, 아울러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한 규제에 대한 규제순응도 조사를 실시하여 규제의 현장인식 제고 및 품질관리를 향상하고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행정규제정비 개선지침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금년 규제정비계획의 분야별 추진계획을 보면 기업도시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등 국가개발사업 지원을 위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고 도매시장 경매사 지정 제도 폐지 등 시장구조의 경쟁체제에 장애가 되는 규제 9건, 법령 위반자에 부과해 오던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범법자 양산을 방지하고, 축산물 영업자 자체위생 관리기준 완화 등 민간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규제 8건, 종자유통 조사를 하면서 무상으로 수거 해오던 시료를 유상으로 전환하는 등 전근대적인 행정수행 방식과 관련한 정비과제 7건, 이밖에도 법령 조문이 불명확하여 자의적인 해석이 우려되는 규제 6건, 행정전산시스템 도입에 따른 민원인 신청서류 감축 27건 등 모두 73건의 규제 적극 정비해할 계획이며, 이중 70건은 년내에 관련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나머지 상위법률 개정을 필요로 한 3건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 개정과 동시에 하위법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2) 산림분야

산림청은 그동안 산림의 보호와 보전을 위한 규제일변도에서 산림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면서 보전할 수 있도록 국민편의 증진에 역점을 두고 지난 1998년부터 불합리한 제도·법령의 개정을 통해 기존규제 276건 중 194건 폐지, 15건 통폐합, 68건 신설, 104건 개선을 추진하여 현재 143건을 존치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혁을 추진하였다.

또한 산림분야 규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시장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규제를 발굴·일제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편익 및 권익보호는 물론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개입을 축소하고 산주의 자율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2005년 8월 4일자로 제정·공포된 산림자원·국유림경영·산림휴양 3개 분야의 분법화 법률은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산림자원 관리를 위해 규제 심사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6건 폐지, 5건 완화한데다가 규제의 신설·강화를 최소화하여 5건을 신설하였다.

2006년 8월 5일자 분법화 법률의 시행과 더불어 새롭게 제정·시행된 분법화 법률 하위법령은 경쟁제한이나 기준·요건 등 총 16건의 규제완화를 통해 산림분야 규제를 정부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맞게 일제 정비하여 행정여건 변화로 규제의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새로운 체계가 요구되는 규제의 세부내용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이를 위해 규제개선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산림청 소관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변화된 사업여건을 반영함으로써 존치가 필요한 규제도 내용이나 기준 및 방법 등을 개선하여 규제를 정비하였다.

한편, 산지의 보전·관리 분야의 규제는 산림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해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소중한 자원이므로 폐지 등 정비에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인·허가 및 신고 등의 기준이나 요건 완화 보다는 행정절차

간소화, 인·물적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금년부터는 법령 제·개정시 입안단계에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입법 예고 기간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규제의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규제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분야 규제옴브즈만 제도를 운영하여 산림행정 현장에서의 여론수렴과 그에 대한 의견 제출을 통해 산림행정규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3) 수산분야

2006년 수산분야의 규제개혁은 시장 변화속도에 뒤쳐지는 규제의 일제 정비를 통해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지식정보화·전자정부화·급속한 기술발전 등 시장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규제 중, 규제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행정여건 변화로 규제의 실효성이 상실된 규제는 폐지하고 존치가 필요한 규제도 규제내용, 기준 및 방법 등을 개선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으로 불필요한 관련서류를 요구하는 규제를 일제 정비하는 한편, 행정전산망 구축으로 관할청이 아닌 곳에서도 민원을 처리토록 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둘째, 전체 규제개혁위원 개편 및 해양수산규제리모델링제 시행을 통해 규제 심사 방식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규제의 지속적 증가를 억제하여 변화에 부응하는 규제 개혁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존의 이원화체제로 운영된 해양수산행정규제개혁위원회(본 위원회 및 분과위 위원 등 총 36인)의 분과위를 폐지하고 인원을 17명으로 축소 개편하여 본위원회 중심의 대면회의를 통해 심사의 충실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해양수산규제리모델링제의 시행으로 신설·강화규제와 질적·양적으로 상응하는 기존규제 정비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규제의 무분별한 증가를 억제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상시 발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한편, 금년도 해양수산부 규제정비 추진계획 총 80여건중 수산분야 규제정비 추진 계획은 총 30여건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장정화·정비의 수익자 부담금 부과를 폐지하고, 대학졸업예정자도 수산질병 관리사가 될 수 있도록 하며, 2톤미만 선박의 경우 입출항 신고서 제출을 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선박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여 그간 수산물의 규격화, 선진화 등으로 불필요해진 각종 기준 및 검사 사항을 폐지하고, 일부어망의 그물코규격 제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완화하여 어민의 소득증대 도모하는 등의 규제를 완화 하였다.

어업허가 등의 변경 신고서 제출 시 증빙서류로 첨부해야 하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앞으로는 행정정보공동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무원이 확인토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 ● Ⅲ.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시책

1. 경쟁력있는 경영체 육성 ..... 59
2. 생산기반 정비 및 농어업의 기계화·현대화 ..... 80
3. 농림수산업관련산업의 육성 ..... 93
4. 고부가가치 농림어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정보인프라 구축 ..... 97
5. 수출진흥 및 수입관리 대책 ..... 111
6. 친환경농업의 육성 ..... 120
7. 농어가 소득안정 및 경영위험관리체계 구축 ... 129
8.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 지속추진 ..... 152

### Ⅲ.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시책

#### 1. 경쟁력 있는 경영체 육성

##### 가. 영농규모화 촉진

영농의 규모화·집단화를 통하여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쌀 전업농을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주곡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영농규모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한국농촌공사를 통하여 비농가나, 전업 또는 은퇴하는 농업인들로부터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이를 다시 젊고 유능한 쌀 전업농에게 장기 저리의 이자(매매 : 연리 3%, 임대 : 무이자)로 매도하거나 임대하여 우리나라의 쌀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편, 영농규모화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동 기금은 재원의 상당부분을 이자율이 높은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재특회계의 차입에 의존함으로써 구조적으로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지관리기금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동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1997년부터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규모 확대를 할 수 있는 농지임대차사업 중심으로 그 추진방향을 전환하였다. 청장년층의 쌀 전업농 참여를 촉진하여 영농규모화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지매매사업자금 상환 기간을 당초에 20년 균분상환에서 15년에서 30년까지 연령별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여 청장년층에 대한 자금상환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다.

2005년 영농규모화사업의 지원규모는 총 11,907ha 4,769억원으로 이중 농지매매가 3,951ha 2,903억원, 농지임대차가 7,892ha 1,839억원, 농지교환·분합이 64ha 27억원을 집행하였다.

동 사업자금의 시·도별 예산은 각 시·도별 농업진흥지역 면적, 쌀 전업농수, 2005년 사업신청액, 전년 집행실적, 농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이 많고 쌀 전업농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영농규모 확대가 촉진되었다. 전체 벼 재배농가 914천호 중 8.8%(80.6천호)의 비중을 차지하는 쌀 전업농이 전국 벼 재배면적(980천ha)의 30.3%를 담당하여 쌀 산업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쌀 전업농의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서 3ha이상 생산 농가가 44천호로 이중 쌀 전업농이 38천호(84%)를 차지하였다.

2005 영농규모화사업 계획 대 실적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2005 계획(A)		2005 실적(B)		집행율 (B/A)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계	11,505	476,941	11,907	476,938	100
농지매매	4,010	290,325	3,951	290,322	100
임 대 차	7,445	183,891	7,892	183,891	100
교환분합	50	2,725	64	2,725	100

자료 : 농림부 식량정책국

2006년 영농규모화사업은 지원규모를 10,227ha, 4,341억원으로 농지매매사업 금리인하(3%→2%) 시행, 일정규모 농가(2~6ha미만) 집중지원, 쌀전업농 경영진단 실시, 사후관리 강화 및 수요자 중심의 전문교육 등 사업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향후 쌀시장 개방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응하여 우리 쌀농업의 체질 강화와 경쟁력을 촉진하기 위해 「쌀 전업농 육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해오고 있다. 본 대책의 목표 및 비전은 2013년까지 지대별 여건 등을 감안, 호당 경영규모 6ha 수준의 쌀 전업농 7만호를 육성하여 이들이 2013년 예상 벼 재배면적인 83만ha의 절반 수준을 경영토록 하고,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과 대등한 소득수준을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나. 경영이양직불제 운영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쌀 전업농 육성대상자의 영농규모 확대를 촉진함으로써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영농규모화사업과 마찬가지로 한국농촌공사를 통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3년간 계속하여 벼를 재배하고 10년이상 벼농사에 종사한 연령이 63세이상 69세이하인 고령농가가 소유농지를 쌀 전업농에게 매도하는 경우 연령에 따라 최단 2년, 최장 8년간 ha당 241천원(연 2,896천원)을 매월 분할 지급하며, 임대하는 경우는 ha당 2,977천원을 1회에 일시 지급해 주고 있다.

아울러 한·칠레 FTA 비준시 추가지원 대책에 따라 70세이상 72세이하 고령농업인에 대해서도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매도·임대 공히 ha당 2,977천원을 1회에 걸쳐 일시 지급해 주고 있다. 지급상한은 재정범위를 감안하여 2ha까지로 되어 있다.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산성이 낮은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과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가 동시에 달성되도록 영농규모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5년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의 지원규모는 총 7,267ha 22,103백만원으로 이 중 매매이양이 1,133ha 2,887백만원, 임대이양이 6,134ha 18,266백만원을 집행하였다. 1997년부터 2005년까지 68천명의 고령은퇴 농업인에게 1,268억원의 경영이양직불금을 지급하여 고령농업인 1인당 188만원의 소득을 지원하였으며, 쌀 전업농 45.1천명에게 고령농업인의 경영이양농지 45.4천ha를 양수하여 쌀 전업농 1인당 1.01ha의 영농규모를 확대하였다.

2005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계획 대 실적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2005 계획(A)		2005 실적(B)		집행율 (B-A)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계	7,267	22,103	7,267	22,103	100
사업비	7,267	21,153	7,267	21,153	100
운영비	-	950	-	950	100

자료 : 농림부 식량정책국

2006년 경영이양직불사업은 지원규모를 4,818ha, 17,491백만원으로 수요조사 등을 바탕으로 한 적정 사업물량 편성, 지급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대상 사후관리 추진, 등을 통해 사업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향후 쌀산업의 구조조정과 타 직불제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대상연령, 지원한도 조정 등 사업개선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다. 생산자조직 중심의 계열화·브랜드화 추진

WTO체제 출범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규모화 및 계열화를 통한 생산자조직 중심의 유통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의 급속한 확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의 판매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일선조합과 별개로 독자적인 유통기능을 수행하는 작목반·영농조합을 계열화함으로써 일선조합이 실질적인 산지유통주체가 되도록 하고, 일선조합은 다시 광역의 연합조직에 계열화하여 마케팅 효율성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를 추구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작목반·영농조합과 같은 기초생산자조직은 생산에 있어서 정보교환 등

생산활동에 치중하고, 수확후 관리, 소비지 출하 등을 일선조합이 수행하도록 하며, 광역의 연합조직은 유통정보, 신상품개발, 브랜드화, 판촉 등 마케팅 활동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생산자조직간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산자가 공동으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자 조직 중심의 공동 출하사업이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260개소의 산지유통전문조직을 지정하여 유통정보의 수집·분산, 수확후 관리기술 보급 등 품목별 지도·지원의 중심체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품목별 연합사업 확대를 통해 산지유통혁신과 실질적인 생산출하조절을 담당하는 품목별 전국협의체 결성을 촉진(2006년 31개 연합조직)함과 아울러, 해당 품목의 생산자를 대표하는 전국단위 연합조직에 자조금 조성을 보조지원(2006 : 55억원)함으로써 생산자조직 자율에 의한 수급조절능력이 배양되도록 할 계획이다.

#### 라. 농업종합자금제 개선

농업종합자금은 농업인들이 스스로 소정의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이 해당분야의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설·개보수·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06년 종합자금지원은 농기계보관창고사업을 통합하여 1999년 시범사업 이후 총 26개 사업을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총 지원규모 9,761억원(농특자금 1,752억원, 농협자금 8,009억원)을 운용하고 있다.

농업종합자금은 기존 농림사업자금의 일반적인 방식과는 달리, 지역별·품목별·용도별로 자금을 사전에 배분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하나의 자금풀(pool)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수시 신청에 따라 연중 수시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여 자금공급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있다.

농업종합자금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까지실적	2003실적	2004실적	2005실적	2006계획
합 계	1,041,500	452,253	753,568	823,228	976,100
농특자금	496,200	106,450	117,079	150,196	175,220
농협자금	545,300	345,803	636,489	673,142	800,880

2003년에는 3천만원이상 농기계구입자금, 관광농원 개발, 농촌민박마을 조성, 자가배합 사료제조 시설 지원사업을 종합자금으로 통합하였으며, 2004년에는 2천만원이상 농기계구입자금, 농기계생산지원자금, 산지일반가공육성, 전통식품개발, 농촌가공산업육성자금, 후계농업인육성자금, 객토자금을 농업종합자금에 통합하였다. 2005년에는 고품질 우량종자개발사업, 1천만원이상 농기계구입자금을 통합하여 총 26개 농업분야 융자자금을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지원하고 있다.

시중금리의 하락추세와 어려운 농업경영여건을 고려하여 2002년 7월 1일부터 대출금리를 5%에서 4%로 낮추어 지원하였고, 한·칠레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가격하락 등으로 농가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004년 3월 1일부터는 대출금리를 4%에서 3%로 인하하여 농업인의 금융비용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다.

또한 농축산경영자금중 전업경영체 지원자금인 농기업경영자금과 축산전업경영자금을 농업종합자금으로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업인에 대한 지원자금중 농업종합자금제로의 통합이 바람직한 사업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통합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종합자금제는 정책자금을 시장원리에 따라 지원함으로써 부실화율을 낮추는 등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개선해야할 점도 남아 있다.



앞으로 대출절차를 더욱 표준화하고 대출관련 준비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담당자 확충 및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취약한 사업계획 수립능력을 보완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능력있는 경영체를 선별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심사인력을 육성하고 대출심사기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경영실태조사결과의 자료화와 경영분석능력제고를 통해 농가 부실화징후의 사전 감지, 농가에 경영진단자료 제공, 컨설팅사업과 연계 등 사업성공위주의 사후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업종전망 및 동향분석 자료를 대출심사자와 경영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컨설팅서비스체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마. 농업인력 육성시책 추진

#####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농업인력의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젊고 능력있는 농업인을 확보하기 위해 1981년부터 시작하였으며, 일정기준에 적합한 청장년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하여 영농기반 확보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06년 현재 후계농업인 사업은 35세미만자를 지원하는 창업농제도와 45세 미만자를 지원하는 신규후계농업인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05년에 창업농 1,050명, 신규후계농 485명을, 2006년에는 창업농 1,000명, 신규후계농업인 400명을 선정하여 지원을 할 예정이다.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육성대상자는 특·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선정된 자에게 사업계획에 따라 연리 3%에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1인당 2천만원~2억원의 사업비가 차등지원된다.

특히, 2003년까지는 창업농에게 영농 정착단계에서 연리 4%의 장기정책자금

용자와 함께 창업농 교육을 지원하던 것을, 2004년 정예인력육성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영농정착단계별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며 자금지원조건도 크게 개선되었다.

우선, 영농정착전단계에서는 잠재농업인력의 체험 프로그램을 확충하였는데, 대표적으로 2005년부터 농업인턴제와 대학생창업연수제를 도입하였다.

농업인턴제란 44세 미만의 영농정착 희망자에 대해 선도농가에서의 실무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선도농가에게 월 50만원 한도로 농업인턴에 지급하는 보수의 50%내 보조금을 지원하며, 사업량은 2005년, 2006년 각각 100명씩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학생창업연수제란 농과대학에 재학중인 3-4학년생을 대상으로 영농정착에 필요한 이론, 실습 및 체험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입년도인 2005년에는 11개 대학, 104명을 대상으로 2006년에는 15개 대학, 202명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며, 학생 1인당 3백만을 연수기관에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다.

영농정착단계에서는 기존의 후계농업인 자금의 금리를 4%에서 3%로 인하하고, 자금지원 한도도 2억원까지 상향조정하였다. 창업농에 대한 교육도 기존의 공통교육, 경영기술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세부교육내용에 따라 공통이론, 공통전문 및 경영기술교육으로 개편하여 후계농업인의 원활한 영농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영농정착후에는 창업농의 영농초기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창업농후견인제를 도입하여 창업농에 대한 전담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창업농의 원활한 영농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창업농사업과 달리 45세 미만의 신규후계농업인 지원사업은 경쟁력을 갖춘 자를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4백명 수준을 선정하여 영농규모 확대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사업운동을 위하여 2007년부터는 신규 후계농업인 사업도 창업농 사업과 유사하게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

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종전 종합자금방식에서 별도 자금으로 분리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2) 농업경영체활성화 방안 추진

1989년 영농규모화 사업 추진을 위해 도입된 농업법인 제도는 1994년 농업생산 외에 가공·유통 기능까지 그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여 농업법인제도의 체계가 정립되었으며 1999년 농업·농촌기본법에 농업법인의 육성 근거가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농업법인제도는 개별농가의 자본과 기술을 통합하여 규모의 이익을 창출하고, 고품질·기술농업의 실현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등 농업경영의 전문화 촉진에 기여하였으며, 법인화를 통해 농업분야에 기업적 경영방식을 도입하는데 역할이 컸다.

이러한 농업법인이 DDA·FTA 등 개방확대에 대응하여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위해 2004년부터 농업경영체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농업인 위주의 농업관련 세금제도를 농업법인의 성장을 제약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농업회사법인에 외부자본과 경영 전문 인력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진입제한을 완화하였으며 창업에서 성숙과 구조조정의 전 과정에 걸쳐 농업법인의 사업원활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확충해 나가는 등 2005년말까지 총 17개 추진 과제 중 14개 과제는 완료하였으며, 3개 과제는 추진 중에 있다.

한·미 FTA에 대응하여 2006년 5월 19일 2차로 관련 업계, 농업인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법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기존대책을 종합·점점 보완하는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법인의 애로사항으로는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확보문제, 신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부족,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정보화 기반 부족 등이며, 과도한 표시·광고 등 규제와 세금 부담도 어려움으로 제기되었다.

(가) 성장단계별 농업법인 양성 인프라 구축

농업법인이 세제혜택, 농지소유 허용 등 많은 정책 지원을 받고 있으나 실태 파악이 불가능하여 관리가 어려우므로 선량한 농업법인의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농업법인 설립완료시 시장·군수에 설립사실 등을 통보토록 농업법인 설립통보제를 재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의 농업법인이 창업보육 혜택을 받는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 특화창업보육센터를 권역별로 확충(7개소)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제도에 농업분야 평가지표를 신설하여 선도 농업법인이 인증 받고 정책지원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나) 농업법인 투자 유치 및 자금 지원 개선

농업법인의 담보 및 회계투명성 부족, 소극적 대출 경향으로 정책자금을 배정 받아도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현실이므로 농업정책자금 취급기관을 농협위주에서 시중은행으로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농업회계기준 정착과 농업법인 신용평가 모형 개발 등을 통하여 농업법인에 자금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Inno-biz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신보 보증한도를 확대(15억원→ 30)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법인에 농업전문투자펀드 등 투자방식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나 BT등 고수익분야로 편중되거나 민간부문의 투자 참여가 미흡하므로 2010년까지 1천억원 규모('06 현재: 180억원)로 농업전문투자펀드를 확대 조성하고, 농업전문투자펀드의 투자대상이 농식품·유통업분야에 더 많이 집중(60%)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다) 우수 인적 자원 양성 및 유입 촉진

농산물시장의 위험은 증가하고 있으나 농업법인 경영주의 경영역량은 부족하고 전문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기업 연수기관에 위탁하여 농가조직화·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다양한 교육방식을 도입하고, 우수 농업법인이 회계·경영·전산전문가를 채용할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며, 농업분야 외국 인력 활용도 확대되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라) 농업법인의 경영·기술·정보화 기반 강화

농업법인에 대한 전문적인 경영컨설팅과 경영정보화 기반이 부족하고, 농업법인 성장에 신기술 및 신상품 개발이 중요한 요소이나 상품 개발 등 사업화 기술 지원을 받는데 애로가 많으므로 수요자 중심의 상시 컨설팅 체계를 구축하여 투자유치기법, 특허 등 컨설팅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업법인의 연구개발 참여비율을 확대('06:총사업비의 6%→2010 : 20%) 하며, 과제선정 평가위원단에 농업법인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이 협력하여 농업법인의 특허자문도 실시할 계획이다.

(마) 농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세제 지원

농업법인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체조직 기능 증진 효과, 영양학적 유용성 등 표시·광고를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 통해 허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의 배당소득 소득세 감면시한을 2006년 12월말에서 3년 연장하고, 2009년 12월까지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은 비과세하되 농업외 소득은 14% 분리 과세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6년 12월말 도래되는 농업법인 법인세 감면의 일몰시한을 2009년 12월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며, 조사료 생산용 비닐을 부가세 환급대상에 포함하고 화훼 종자류(종구·종묘)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1차 대책 수립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 문제는 전문가 연구용역을 거쳐 농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할 계획이다.

### (3) 농업교육 체계 개편

농업인력의 감소와 고령화, 시장개방 확대 등 농업환경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농업이 국제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생산기술과 경영기법을 실천할 수 있는 유능한 농업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농촌 지도기관, 농과계 대학, 농업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농업인 교육 훈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 농업교육체계혁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농업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배워서 돈이 되는 전문교육으로 전환을 추진중이다.

농업교육예산을 2004년 29억원, 2005년 36억원에서 2006년 122억원까지 대폭 증액하였으며 농업인단체 중심의 농업인리더십교육, 경영교육을 내실화하고 품목 단체를 통한 현장실습, 고부가가치 기술교육, 해외선진지 연수까지 일관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비농업계 농업진입 희망자를 대상으로 3~6개월간 영농정착에 필요한 영농기술과 귀농정보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대상인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계 고교, 전문대학 및 농과계 대학이 학생들에게 직업으로서 농업의 가능성 탐색과 창업준비에 필요한 지식·기술을 실용적 농업교육을 통해 전달할 수 있도록 농고현장체험교육과 농대영농정착교육과정 등 현장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젊고 유능한 후계농업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1997년 설립된 한국농업전문학교는 입학정원 240명 규모의 3년제(전문학사과정) 대학으로서 이론과 실기를 조화시킨 샌드위치식 교육으로 현장적응능력이 뛰어난 후계농업인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06년 9월 27일 한국농업대학설치법이 공포되어 개교 이후 현재까지 7회에 걸쳐 1,44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졸업생의 95%가 영농에 종사함은 물론 평균소득이 60백만원('06)으로 일반농가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으로 농촌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 2007년부터는 학교 명칭 변경, 전공심화과정 설치 운영 및 졸업생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통해 후계농업인력 양성기능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각 지역별로 대학, 연구소, 농촌지도기관, 농협 등이 참여하는 농업교육 협력체를 구성하여 지역농업발전의 비전과 목표에 맞는 농업인력을 육성하는 지역 특성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6년에는 총 10개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시범적으로 참여하였으며, 2007년에는 참여지자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교육발전을 위한 기초인프라로서 농업교육 전문강사와 실습장Pool을 구축하고 농업교육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농림부 지원 농업교육프로그램의 완성도, 수요자 만족도 등에 관한 평가체계도 강화하였다.

#### (4) 경영컨설팅 지원

농업경영의 상업화·규모화·전문화로 인한 농업경영환경의 변화에 부합하고 농업인의 경영능력과 자력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시설·원예, 축산분야에 대하여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제도를 도입하였다.

#### < 경영컨설팅사업비 지원현황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사업량(개소)	220	441	553	759	847	870	1,000
사업비(백만원)	1,710	3,388	4,427	5,586	5,696	6,550	8,000
국고	671	1,227	1,499	1,676	1,709	1,965	4,000

민간에 의한 양질의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컨설팅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05년부터 지원대상을 원예·특작, 축산, 가공업 외에 RPC, APC, 쌀전업농으로 확대하였으며 농업인 자부담비율을 50%에서 30%로 축소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또한 2006년부터는 컨설팅사업이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생산기술 중심의 컨설팅에서 농업경영전반으로 대상과 내용을 확충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영, 마케팅, 브랜드 등 종합컨설팅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 농가기준을 제한하여 일정 규모 이상 농가위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소규모 농가는 종합컨설팅이 가능한 수준으로 묶어 공동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원예·특작 : 3,000m<sup>2</sup>이상, 가공 : 매출액 2억원 이상, 한우·젓소 50두 이상, 돼지 1천두 이상, 양계 2만수 이상

또한, 전문가등으로 컨설팅업체 인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컨설팅 수행능력을 평가한 후 인증서를 발급하고 2년마다 평가하여 재인증할 계획이다.

즉, 농업계 전반에 검증되지 않은 컨설팅회사의 난립 문제가 제기되어 능력 있는 업체를 공모·평가·선정하여 컨설팅 업체 pool을 구성하고, 농업인은 이 컨설팅 업체 pool에서 희망하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컨설팅 업체의 질 향상을 통해 농업인에게 양질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업경영컨설팅이 특정 품목에 편중된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한 품목에 50% 이상 배분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농축산물 브랜드 주체에 대한 컨설팅 실시를 통해 농가조직화,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시장 교섭력 배양 등 경영능력을 제고하고, 농촌관광, 브랜드, 클러스터 및 경영회생지원 등으로 농업경영컨설팅 영역을 다각화해 나갈 계획이다.



(5) 농업벤처 육성

농업벤처는 농림업, 농업 전후방연관산업 및 농촌과 관련된 분야에서 농업생명공학기술 등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활용한 고위험-고수익의 중소형 모험기업으로서 2001년부터 농업벤처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전문펀드 조성, 농업벤처창업보육센터 지원, 농업벤처창업경연대회 지원 등 관련 시책을 추진 중에 있다.

2001년과 2002년에 결성한 농업전문투자조합에서 우수한 기술력과 농업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아이템을 가진 13개 농업벤처에 투자하였으며, 2호 조합에서는 75억원(원금 5억원의 15배)의 이익을 회수하여 농업부문도 성장발전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005년까지 선정된 4개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는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비를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하였으며, 2006년에도 2005년 경상대학교 선정에 이어 충청, 호남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권역별 확충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06년 농안기금 예산으로 확보한 50억원으로 민자를 유치하여 100억원 규모의 농업전문투자조합(3호 조합)을 결성, 농업분야벤처기업에 투자해 나갈 계획이며, 농업분야 우수아이템에 대한 창업경연대회와 농업벤처투자박람회도 개최하여 농업벤처를 우리 농업의 새로운 활로 개척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6)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

(가)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능력 및 리더십 향상

품목단체별로 시행하는 품목별 전문교육에 여성농업인이 20%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지역 농과계 대학의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에도 전체 위탁교육 인원의 20% 수준에서 여성농업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능력 배양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농업인 해외연수는 선도 여성농업인으로 체험단을 구성하고, 품목 또는

분야별로 여성농업인의 특성에 맞는 연수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농업인 교육훈련 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였다.

여성농업인의 리더십을 향상하기 위해 농업연수원에 전문강사 요원을 양성하기 위한 '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 과정과 여성 농정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성농정위원반' 과정을 2005년에 이어 계속해서 운영하였다.

(나) 후계 여성농업인력 육성기반 확충

정부는 '농업·농촌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예농업 인력육성 종합대책('05.1)을 마련하고, 20만호의 정예인력 육성방안을 구체화 한 바 있으며, 여성농업인에 대하여도 농업구조의 선진화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견인하는 주요 인력으로 육성하고자 여러 가지 정책을 펼 계획이다.

우선 후계농 지원사업, 농업인턴제, 창업농 후견인제, 대학생 창업연수제 등의 후계인력 육성사업 시행시 20% 범위내에서 여성농업인을 우선 선정토록 함으로써 저연령·고학력 집단의 여성농업인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쌀 전업농 선정시에도 일정요건을 갖춘 여성농업인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부가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자금 신청시 주사업 품목이 다를 경우 각각 지원 가능토록 사업시행지침을 개선하고, 부부창업농·부부후계농 우선 선발 및 우대지원제도에 대하여도 검토할 계획이다.

(다) 여성농업인 노동생산성 향상과 노동부담의 완화

최근 영농형태가 벼농사 위주에서 원예·화훼 등 밭작물의 비중이 커지면서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참여도가 점차 증가되고 있으나, 현재 보급되고 있는 농기계는 대부분 남성의 체형에 맞춰 개발되어 여성이 운전 조작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선 여성농업인의 참여도가 높은 농작업에 대한 기계장치 개발을

강화하고, 여성농업인이 취급하기 쉬운 작고 가벼운 농기계를 개발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노동부담을 경감하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라) 농촌개발 리더로서의 여성농업인 전문화

농촌지역개발 및 농촌관광 분야는 여성의 참여 없이는 활성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으며, 농촌지역개발 리더 교육과정에 여성인력 참가 희망자를 우선 선발하고 농업연수원에 「여성농촌관광지도자」과정을 운영하여 여성농촌체험교사를 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마) 출산농가 도우미제도 확대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제도는 출산으로 인한 여성농업인의 영농중단을 방지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산모의 모성보호를 위해 2000년 처음으로 도입한 생산적인 복지제도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결정으로 2005년부터 지방사업으로 이양되었지만 해당 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원단가 현실화 및 지원기간 연장 등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확충 및 내실화 유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2005년부터 지방사업으로 이양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대하여도 해당 지역에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2006년 여성농업인센터는 2004년보다 16개소가 늘어난 5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사) 여성농업인의 육아부담 경감 추진

농촌의 고령화·과소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업인의 영유아 보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젊은층의 농촌거주 유도 및 지역사회 활력유지를 위해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2006년 지원대상을 농지소유규모 5.0ha 미만까지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2006년에는 지방비를 포함하여 315억원의 예산으로 아동별로 법정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50%(5세이는 100%) 수준을 지원하였고, 해당 농업인의 신청에 의해 자격(조건)확인후 농업인 계좌에 직접 지급하는 일종의 직불형태의 지원사업이다.

한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에 한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2006년부터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을 도입하여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유아를 둔 농업인에게도 육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농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농지소유 5ha 미만 농가의 보육시설 등 미이용 아동에 대하여 2006년에는 법정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정부보육료 지원액의 25%(5세아는 50%) 수준을 지원하였으며, 연차적으로 지원액을 인상하여 농업인의 육아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 나가고자 한다.

그 밖에 농어촌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농번기 보육지원 강화 등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보육여건을 개선을 위해서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

(아) 제2차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제1차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2001~2005)이 완료된데 이어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관련규정에 따라 2006년 제2차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수립이 의무화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실질적인 지역별 여성농업인육성정책을 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2차계획은 1차계획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의 여성농업인과 관련된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의 비전과 목표, 추진방향 및 핵심과제를 제시하였고,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역 여성농업인 및 관련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2005년에 개최된 도별 순회토론회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확정하였다.

#### (자) 정책의 성별 영향평가제도 확산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정책의 수립·시행과정에서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는 정책의 성별 영향평가제도는 2004년 농업인력 육성정책, 2005년 농업종합자금지원제도에 대하여 평가를 완료한데 이어 2006년에는 농림사업 중 주요 관심영역, 정책의 사회적 파급효과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3개과제로 확대하였으며, 평가결과는 해당 사업부서에 통보하여 양성평등 관점이 반영된 농림사업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였다.

#### 바. 독립가 등 임업인력 육성시책 추진

독립가·임업후계자·신지식임업인 등에 대한 임업기술·정보의 보급과 교류 및 육성자금의 확대지원, 금융 및 세제지원의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임업기능인 영립단을 확대해 나가면서 기초성된 임업기능인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숙련된 전문임업인을 양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임업노동력의 확보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 6,394천ha중 69%에 해당하는 4,420천ha가 사유림으로서 소유규모가 1인당 2.3ha로 매우 영세하고 임업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산림경영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사유림경영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독립가, 임업후계자를 사유림경영의 핵심주체로 육성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으로 이들을 확대 선발하기 위하여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을 개정(2005.6.30)하여 임업후계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였으며, 2005년말 기준 독립가 368명, 임업후계자 1,554명을 선발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육성자금은 2006년에는 독립가 21억원, 임업후계자 37억원, 신지식임업인 2억원 총 6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지원자금의 효율적 집행 및 지원목적사업의 지속적 실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6년 5월에는 지원자금의 집행실태를 불시 점검하여 목적사업에 부합되지 않는 융자금을 환수 조치하고, 융자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임업정책자금집행지침을 개정하는 등 융자심사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앞으로 이들에 대한 육성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이자율도 장기사용 사업에 대하여는 3%에서 1.5%낮추어 전체적으로 1.5~3%로 조정하여 2006년부터 적용하여 이자율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고, 경영실적이 우수한 독립가, 임업후계자에 대한 포상(20명) 확대 및 임업선진국 해외연수 기회(20명)를 제공하는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하여 사유림경영을 선도하는 전문 임업인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다.

#### 사. 어업인력 육성시책 추진

##### (1) 어업인후계자 육성지원

지난 1981년부터 어촌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 추세에 대응, 어업인 후계자 육성 사업을 추진하여 2005년까지 총 14,210명의 어업인후계자를 선정, 2,556억원의 사업자금을 지원 하였으며, 2006년에는 329명을 선정하여 1인당 40백만원 범위내에서 총 94억원을 개인별 영어사업계획에 따라 차등 지원하였다.

##### (2) 전업경영인 육성지원

우리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나갈 전문화·규모화·현대화된 가족단위 전업

경영인을 확보할 목적으로 1992년부터 전문경영인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데 전업경영인이 되고자 신청한 분야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최근 3년이상 그 사업을 계속하여 경영하고 있는 경영주가 55세이하인 어가를 전업어가 대상자로 선발하여 2005년까지 2,303호의 전업어를 선정하여 1,20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에도 98호에 49억원을 지원하여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문 어업경영체로 육성하였다.

(3) 선도어업경영체 육성 지원

경영규모, 시설장비, 경영능력 등에서 가장 앞서가는 어업경영체를 선정하여 일반어가, 수산계학생, 어업인후계자에 대한 현장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2000년까지 총 42개소를 선정하여 3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부터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예산확보(10억원) 및 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

어업인후계자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1981~2005		2006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합 계	16,992	394,400	16,555	379,050	437	15,350
일반후계자	14,539	265,063	14,210	255,613	329	9,450
전업경영인	2,401	124,912	2,303	120,012	98	4,900
선도경영인	52	4,425	42	3,425	10	1,000

(4) 영어조합법인 경영체의 육성지원

수산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1996년말 도입된 영어조합법인의 경우 2004년말 현재 942개의 법인이 설립되었으며, 현재 증가 추세에 있는바, 법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정부보조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의 자격요건을 설정하고 매년 정기적인 경영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영어조합법인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기관 용역실시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2. 생산기반 정비 및 농어업의 기계화·현대화

### 가. 생산기반 정비

#### (1) 우량농지 대구획경지재정리 추진

대구획경지정리는 이미 경지정리는 되었으나 필지규모가 소구획으로 대형농기계 영농이 어렵고 농로가 없거나 좁아서 농기계 통행에 불편하며 용배수로는 관개 및 배수 기능 겸용이거나 흙수로 되어 유지관리에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필지규모는 3,000평 수준으로 대형화하고 용·배수로를 분리구조물화하며 농로를 대형 기계 및 농산물 운반에 편리하도록 정비하고 있다.

동 사업은 영농여건이 불리한 평야부 우량농지 200천ha를 개발할 목표로 농어촌 특별세를 재원으로 1994년부터 시작하였는데, 2005년 봄마무리까지 96천ha를 완료하였으며, 2006년에는 2005년 가을에 착수한 5천ha를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였고 가을에는 4천ha를 착수하여 2007년 영농기 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

최근 쌀 산업 여건변화, 농촌·농업에 대한 재정수요변화 등을 감안하여 기계화·규모화 영농에 꼭 필요한 집단화된 농지 위주로 시행하기 위해 2003년에 당초 개발 목표 200천ha를 164천ha로 축소 조정할 바 있다.

이 사업은 평야부 우량농지를 대형농기계 사용과 농업구조개선에 기여하도록 경지정리함으로써 전문영농조직이 대규모로 영농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쌀생산비를 줄이는 등 경쟁력 있는 농업기반을 조성하는데 보다 큰 효과가 있다.



앞으로도 대형농기계를 이용한 영농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구 분	목 표	2005년까지	2006년계획	2007년이후
○ 사업량(천ha)	164	96	5	63
○ 사업비(억원)	46,886	24,171	1,137	21,578

※ 마무리 기준, 2003년에 목표면적 조정 : 200천ha → 164천ha

(2) 밭작물 생산기반정비를 위한 밭기반정비 확대 추진

국민 식품소비구조의 변화에 따른 채소, 과일 등 밭작물 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밭작물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으로 경쟁력제고 및 농업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밭기반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전체 밭 719천ha중 개발여건이 양호한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등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1단계로 110천ha(15%)를 정비할 목표로 추진중이다. 2005년까지 15,857억원을 투자하여 개발목표의 62%인 68천ha를 정비하였으며, 2006년에는 1,046억원(국고 80%, 지방비 20%)을 투자하여 4천ha를 정비할 계획이다.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구 분	목 표	2005년까지	2006년계획	2007년이후
○ 사업량(천ha)	110	68	4	38
○ 사업비(억원)	25,794	15,857	1,046	8,891

(3)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추진

농작업의 기계화가 확산되고, 농기계가 대형화되는 추세에 따라 기계화 영농 편의를 도모하고자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의 주요 간선농로 35천km를 대상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농산물 생산지, 유통시설간 농로 위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까지 16,717억원을 투자하여 목표의 47%인 16.4천km를 확장 또는 포장 완료하였으며, 2006년에는 1,215억원을 투입하여 1.2천km를 확장 또는 포장할 예정이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기계화영농 편의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 운반시 진동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여 고품질을 유지토록 하는 등의 농산물 유통 개선과 도시인의 농촌 접근성 제고로 도농교류를 활성화 하는 등 농촌생활환경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구 분	목 표	2005년까지	2006년계획	2007년이후
○ 사업량(천km)	35	16.4	1.2	17.4
○ 사업비(억원)	37,071	16,717	1,215	19,139

(4) 수리시설 개보수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13,016개소의 수리시설 중 30년 이상된 시설이 6,558개소로 50%에 달하고 특히,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 3,328개소 중 85%인 2,826개소가 30년 이상 경과되는 등 노후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용·배수로의 경우도 간지선 47천km중 48%인 23천km가 흠수로로 되어 있어 누수손실이 많고 유지관리가 어려워 시설의 현대화 등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노후·파손으로 기능이 저하되고 재해에 취약한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및 용수로 등 8,769지구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방조제의 93%가 설치된지 30년이상 경과된 노후시설로서 외측보호 사석의 이탈, 배수갑문 콘크리트 구체 및 철제문짝의 부식 등이 심하여 해일에 의한 시설 붕괴 및 해수유입에 의한 농작물의 염해피해 예방을 위한 개보수사업의 확대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관리방조제 206지구, 지방관리방조제 3,284지구 등 전국 3,490지구의 방조제, 배수갑문, 부대시설 대상으로 방조제 개보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05년까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한국농촌공사 관리 수리시설 5,521개 지구, 국가관리방조제 109개 지구, 지방관리방조제 1,033개 지구에 총 39,389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06년에는 수리시설 99개 지구, 국가관리방조제 7개 지구, 지방관리방조제 78개 지구에 대한 개보수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계획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개보수 대상		2005 까지		2006 계획		2007 이후	
	대 상	%	개 소	%	개 소	%	개 소	%
○ 사 업 물 량	12,259	100	6,663	54.4	184	1.5	5,412	44.1
- 농기공수리시설	8,769	100	5,521	63.0	99	1.1	3,149	35.9
- 국가관리방조제	206	100	109	52.9	7	3.4	90	43.7
- 지방관리방조제	3,284	100	1,033	31.5	78	2.4	2,173	66.2
사 업 비	127,265	100	39,389	31.0	4,111	3.2	83,765	65.8

※ 방조제는 반복 개보수계획 반영

(5) 배수개선사업

배수개선사업은 하절기 태풍이나 집중호우시 저지대 농경지 침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경지 유실·매몰, 수리시설의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습침수지역에 배수장, 배수로, 배수문 등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재해대책사업이다.

전국의 상습침수 농경지는 235천ha로서 이중 지표배수개선 대상면적은 188천ha로 낙동강, 금강, 영산강, 동진강, 만경강, 안성천, 삼교천 등의 큰 하천변과 그 지천에

주로 분포되어 있으며, 지하배수개선 대상면적은 47천ha로서 수렁논 등 저습답의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영농기계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2005년까지 우선 시급한 지표배수개선 위주로 추진하여 대상면적 188천ha 중 129천ha가 완료되었으며, 2006년에는 119개 지구에 2,179억원을 투입하여 이중 16개지구 5천ha를 완공하여 배수개선율을 71%로 개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배수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천ha, 억원)

구 분	대 상		2005년		2006년		2007년	
		%	까지	%	계획	%	이후	%
○ 사업량	235	100	132	56.3	5	2.0	98	41.7
- 지표배수	188	100	129	68.8	5	2.5	54	28.7
- 지하배수	47	100	3	6.4	-	-	44	93.6
○ 사업비 (지표배수)	43,252	100	24,757	57.2	2,179	5.0	16,316	37.8

(6) 농업용수 개발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모든 농사에 기본이 되는 물을 확보·공급하는 사업으로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는데 있다.

2004년까지 총논면적 1,115천ha중 870천ha가 수리시설의 혜택을 받는 수리답으로 조성되었으나, 수리답이라도 웬만한 가뭄(10년빈도)에 견딜 수 있는 논면적은 479ha(총논면적대비 43%)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3년까지 전체는 목표면적 1,100천ha중 900천ha 82%를 수리답으로 조성하고자 추진중이다.

2005년에는 농촌용수개발사업 11.4천ha를 준공하였으며, 2006년에는 5.8천ha를 준공하여 용수부족지역 영농급수에 기여할 계획이다. 앞으로 신규착수를 억제하고 시행중 지구의 조기마무리 위주로 집중 투자하는 등 농업용수 개발사업의 투자 규모는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계획

총논면적	개발대상면적	2004까지	2005실적	2006계획	2007이후
1,115천ha	1,100	870	11	6	213

자료 : 2005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통계연보, 농림부

(7) 새만금지구 등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추진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은 하천 등 대규모 수계를 중심으로 한 대단위 권역에 대하여 농업용수 공급,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농지조성 등 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규모화·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창출함과 아울러, 육상운송거리 단축에 의한 교통환경개선·종합관광권 형성 등 지역경제기반 확충에도 기여하는 사업이다. 현재 시행중인 지구는 새만금을 비롯한 7개지구, 122천ha로 2005년까지 49%(34,717억원)의 투자율을 보이고 있다. 2006년에는 3,350억원(국고 910억원, 농지관리기금 2,440억원)을 투자하여 투자율을 54%로 제고할 계획이다.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

지 구 별	개발면적 (ha)	총사업비 (억원)	연도별 사업비			사업기간
			2005년까지	2006년계획	2007년이후	
계(7지구)	121,560	69,998	34,717	3,350	31,931	
금 강(Ⅱ)	43,000	7,069	3,859	400	2,810	1989~2008
미 호 천(Ⅱ)	4,430	2,908	2,270	100	538	1989~2008
홍 보	8,100	3,755	2,575	210	970	1991~2010
영산강(Ⅲ-1)	13,160	7,076	3,950	120	3,006	1985~2008
영산강(Ⅲ-2)	7,840	4,200	2,217	160	1,823	1989~2010
영 산 강(Ⅳ)	16,730	7,439	660	160	6,619	2001~2007
새 만 금	28,300	37,551	19,186	2,200	16,165	1991~2011

(8) 어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어업생산기반 시설사업은 전국 연안 자연부락 단위인 어촌에 산재되어 있는 항포구에 선착장, 방파제, 물양장 등을 시설하여 어촌 지역의 교통, 상권, 물류, 관광 등의 종합적인 기능 활성화와 어업인들의 가장 큰 재산인 어선을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방지하는 중요한 시설사업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1994년부터 2006년까지 5,265억원을 투자, 낙후된 어촌지역의 생산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잘사는 어촌을 건설하고자 1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지원하는 주요사업에 선착장·물량장 등 어선계류시설을 포함하여 2005년까지 전국 152개 어촌종합개발사업 권역내의 어업생산기반시설 사업 등에 4,87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에는 17개 권역내에 386억원을 투입하여 어업생산기반 시설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다.

향후 2007년부터 2단계 65개 권역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낙후어촌의 정주 생활 환경을 개선하되 도시민의 어촌정주지원방안도 함께 계획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사 업 별			2004까지	2005	2006	2007 이후
어촌종합 개발사업	사업량	완 료	130	5	-	-
		계 속	25	18	17	73
	사 업 비		455,068	32,817	38,646	360,698

## 나. 농업의 기계화

### (1) 농업기계화 정책개선

#### (가) 추진배경

농업기계화는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한 농업기계화촉진 시책에 따라 부족한 농업노동력 문제해소, 영농규모 확대를 통한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가소득 증대 등 농업구조개선 촉진과 농업경쟁력 강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농기계 가격·유통 등 공급문제, 농기계 산업구조의 경쟁력 약화, 농기계 사후관리 체계의 구조적인 취약성 등 기계화촉진 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가지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나타나 21세기 농정여건에 걸맞게 농업기계화정책의 중장기계획의 기본틀을 새로이 하고 시장지향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6년 농업기계화사업은 농업여건의 변화와 개방화에 대응, 농업기계화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기계화 정책 제도 개선과 농업인의 편의 및 농기계이용률 증대를 위한 사후관리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나) 농업기계화정책 제도개선

정책자금의 효율성제고와 농업인의 적정한 농기계구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는 1,000만원이상의 농기계 구입지원은 농업종합자금에서 지원토록 하였으며, 행정구역 중심의 5단계로 되어 있는 소규모 농기계 사후봉사업소를 A/S능력 중심의 대·중·소형 3등급으로 조정하여 A/S능력 향상을 유도하였다.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율제고와 구입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업인 중심의 작목반 등 공동이용조직을 대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을 2006년에 12개소를 실시하였으며, 농기계유통의 효율화 및 중고농기계 거래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A/S실태 종합평가제를 계속 추진하여 농기계 수리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는 한편, 사후관리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2) 농기계 구입자금지원

2006년에는 농기계구입자금 지원제도의 기본을 유지(지원대상자, 지원대상 농기계, 공급자의 기준, 신기술농기계와 발작물·축산전용 농기계에 대한 우대지원 등)하면서, 쌀전업농과 고품질벼 생산농가가 구입하는 농기계에 대하여는 기준금액의 70%에서 90%까지 우대 지원하여 쌀전업농의 영농규모화를 촉진하고 고품질벼 생산을 유도하였다. 또한 기술개발·국산화 등으로 생산원가를 10%이상 절감한 농기계와 기본성능을 유지하면서 가격을 10%이상 인하한 경제형 농기계에 대하여는 용자한도액을 20% 상향 지원하여 농업인의 농기계구입부담완화와 국산농기계의 기술개발을 유도하였다.

2006년 농기계구입자금 지원규모는 총사업비 4,890억원(국고용자 578, 농협용자 2,845, 자부담 1,467)으로 49.2천대분의 농기계구입자금을 농업인에게 지원하여, 농기계 적기 공급 및 농촌일손부족 해소와 농업인의 농기계구입부담 완화에 노력하였다.

## (3) 농기계 사후관리 강화

### (가) 농기계 수리봉사 지원

2006년에는 120억원의 수리용부품 자금을 지원하여 고장난 농기계를 신속히 수리하도록 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수리점 등 면단위 사후봉사업소에 대하여도 고장 농기계 운반용 차량구입비 뿐만 아니라 수리·정비용 건축비 등 사후봉사업소의 시설현대화에 지원하였다. 그리고 수리용 부품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조업체와 대리점 사이의 전산망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A/S실태 종합평가제(연 2회)를 계속 추진



하여 사후봉사 실태가 부실한 제조업체와 사후봉사업소에 대하여는 경고, 농기계 구입자금지원 제외 또는 수리용 부품 확보자금 지원제외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신속한 사후봉사 체계를 확립토록 하고 있다.

또한, 농기계 사용시 발생하는 고장으로 인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B/S(사전 서비스)실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주관으로 연 2회(3~4월, 8~9월) 전국농기계순회수리봉사를 실시하고 시장·군수 주관 하에 사후봉사업소 및 농업기술센터 등으로 지역순회수리봉사반을 편성 오지마을 중심으로 순회하면서 수리봉사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농기계 사후봉사업소의 수리기사와 농업회사법인의 농기계 운전요원 139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여 병역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며, 농업인의 농기계 수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계화영농사를 660명 양성하는 등 154천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나)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지원

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내용연수를 연장시켜 이용을 증진을 위해 일반농가 보관창고 80개소를 설치지원하였으며, 설치비의 70%를 용자지원하였다.

(다) 중고농기계 유통활성화 촉진

중고농기계 거래시장은 중고농기계 적정판매가격 산정이나 품질보증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는 등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전국적으로 20개소의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을 설치 지원하였으며, 2005년부터는 중고농기계의 품질보증 제도를 중고트랙터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는 등 중고농기계 거래로 인한 농업인 피해방지와 이용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내용연수를 경과한 중고농기계에 대하여도 3년이내의 기간동안 구입자금을 용자지원토록 하였으며, 기 지원한 20개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중고농기계 유통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감에 따라 중고농기계의 용자지원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 (4) 농기계 생산지원

농기계 적기공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신기술농기계공급 촉진과 농업시설 기자재의 자동화, 첨단화를 위하여 2006년에는 200억원을 지원하였다. 그중 농기계 적기공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농기계생산 원자재구입 비축 지원에 18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업시설 기자재의 자동화, 첨단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농업기자재 생산 지원에 20억원을 지원하였다. 농기계생산 원자재 구입비축 자금은 연리 3%, 융자일로부터 1년이내 상환해야 하며, 시설농업기자재지원은 연리 3%, 3년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 되어 있다. 업체별 지원규모는 최근 2년간 매출실적, 국산화율, 수출실적 등을 감안하여 산출지원 하였으며, 금년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자금 지원은 18개 업체에 지원하였으며, 시설농업기자재자금은 4개 업체를 지원하였다.

#### (5) 농업용 면세유 공급

2006년에는 재정경제부로부터 휘발유 132,700kl, 실내등유 381,200kl, 보일러 등유 1,200kl, 경유 1,972,200kl, 중유 98,200kl, 윤활유 6,500kl, LPG 1,600톤 등 총 2,596,600kl의 농업기계용 면세석유류의 공급 한도량을 배정받아 유종별 연간한도량 범위내에서 지역조합별로 배정·한도 범위내에서 농업인에게 지원하였다. 이에 따른 2006년 면세액 추정은 1조3,895백만원에 이르며, 세부적인 면세내역은 부가가치세 10%, 교통세는 유종별 리터당 휘발유 526원, 경유 351원, 특별소비세는 등유 134원, 중유 15원, LPG 40원이고, 교육세는 휘발유 및 경유의 경우 교통세의 15%이며, 등유는 특별소비세의 15%이다. 주행세는 휘발유 및 경유의 경우 교통세의 26.5%이며, 판매부과금은 등유에 한하여 리터당 23원이다.

또한, 면세유 공급시한이 2007.12.31일까지 되어 있으나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계속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 농업시설의 현대화

(1)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저장시설 설치 확대

농가가 생산한 벼의 수집·건조·저장·가공 및 판매과정을 종합적으로 일관 처리하는 현대화된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를 확대하여 농촌노동력을 절감하고, 쌀의 생산비와 유통비용을 낮추며, 고품질의 지역 특산미를 공급해 나가는 동시에, 수확기에는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수매·저장하여 가격안정 및 가격지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RPC에서 산물상태로 일관처리하기 위해 1991년부터 2004년까지 총 8,432억원(국고보조 2,684, 국고융자 2,358, 지방비 130, 자부담 3,260)을 투자하여 2001년까지 328개소의 신규 RPC를 설치하였다.

가공시설능력이 충분함에 따라 1999년 이후 가공시설 지원을 중단하고, 2002년부터 신규 RPC 지원을 중단하였으며 건조·저장시설은 2004년까지 639개소를 설치하였다.

앞으로 부족한 건조·저장시설에 대하여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69개소(410만석)의 추가 설치하여 수확기 유통량의 70%(1,100만석)수준을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WTO/DDA협상과 쌀 관세화 관련협상 등으로 시장개방폭이 확대될 경우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영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므로 2004년부터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지원체계를 개편해서 우선, 경영평가제를 도입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함으로써 미곡종합처리장 경영혁신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RPC간 통·폐합을 통한 책임경영체계 구축으로 경영효율화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 통합 RPC에 대해 지원을 우대할 계획이다.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단위 : 개소, 억원)

	1991년~2004년	2005년	2005년~2013년	계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328개소 (568개소)	- (50)	- (619)	328 (1,308)
총 사업비	8,432억원	235	3,474	12,141

## (2) 원예·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채소·과수·화훼 등 원예·특용작물은 기상여건 등의 영향에 따라 풍·흉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는 등 수급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안정생산을 위한 받기반 정비, 관수시설의 확보, 비가림시설, 공동육묘장 설치 등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농촌인구의 감소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농작업의 생력화와 생산비 절감에 의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기계화·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고품질의 안전농산물 생산 및 선진농업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하여 기존시설의 개보수를 확대하고, 온실의 표준화 및 시설자재 국산화로 설치단가를 인하해 나갈 계획이며, 인삼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삼생산기반의 구축과 인삼을 수출전략품목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

첨단 재배기술 개발·보급을 통한 시설원예의 생산성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양액 재배, 자동화기술 등을 농림기술개발과제로 선정하고 생력화 기술을 개발하여 파종·수확 등 전작업 기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 (3) 축산시설 현대화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농가에게 시설 및 자동화기계 등의 설치자금을 지원하여 자동화·현대화된 사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사료공급기반 확대를 위해 전업농가·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에 섬유질 및 자가배합사료 제조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생산·도축·가공·판매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축산물종합처리장을 2005년까지 총 14개소를 건설·운영 중이다. 가축계열화사업을 통해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가공·유통의 일관경영

으로 양축농가는 생산에 전념토록 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2000년부터는 축산부문에 “농업경영종합자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자동화 자금과 병행하여 운영자금도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 3. 농림수산업관련산업의 육성

#### 가. 농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최근 식품소비구조는 다양화·고급화되고 있고, 여성의 고학력화와 사회생활 참여도의 확대 및 핵가족화 심화 등으로 편의성을 갖춘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식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외식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에 있다.

농산물가공산업은 농업 후방관련산업으로서 농산물 수요를 증대시키고 농산물의 가공처리로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농산물의 수급절과 가격안정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1989년부터 농산물 가공공장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2005년말까지 2,93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전국에 1,108개소의 농산물 가공공장을 지원하였으며, 연간 총 매출액은 6,607억원, 농어촌 유희인력 고용은 약 6,607명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생산자단체와 농업법인, 주류제조면허 추천·명인 지정업체, 일반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2006년에는 농업종합자금으로 6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의 국내 경기침체로 제조업 전체가 위축되고 식품 소비침체 등으로 판매가 부진하여 농산물가공업체도 부도 등 일부 경영부실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희생가능성이 없는 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 영세·한계업체 222개소 퇴출로 전체

농산물 가공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의 하드웨어적인 시설비 지원에서 경영·기술분야에 대한 소프트웨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999년부터 농산물가공공장 기술·경영·마케팅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의 수요확대를 위하여 맞춤형 공동브랜드 개발 등 다양한 판매·홍보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 나. 종자산업의 육성

1997년 이후 다국적기업의 국내 진출과 21세기 주요산업으로 생물산업의 부상 등 종자산업의 대내외적 변화에 대응하여 종자수급의 안정도모와 신품종육성 등의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종자산업육성대책을 추진중이다.

채소부문의 종자업체는 2006년말 현재 123여 업체이며,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품종육종기술 수준이 낮고 경영규모 등이 영세한 편이므로 이들 종자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업체별로 지정된 전문작물 중심으로 품종육성자금을 중점지원하고 있다.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은 2005년부터 보다 유리한 지원조건(금리 4% → 3%)인 농업융합자금제로 전환하여 지원하고 있다.

#### 우량종자개발 자금지원 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1995~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이후
지원금액	15,057	2,380	2,965	2,280	1,935	1,983	428 (융합자금제 전환)

무, 배추, 고추 등의 세계적인 품종육종 기술을 활용하고 협소한 국내 종자시장에서의 과당 경쟁을 피하기 위해 종자 수출확대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2005년 수출 실적은 17,407천불로 1997년 대비 46.4%증가하였다.

새로 개발된 품종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하여 품종육성자의 신품종육성의욕을 고취하고자 품종보호제도를 1998년부터 시행중이며, 품종보호제도 시행당시 27개 품종보호대상작물을 2006년 현재 189개 작물로 확대 지정하였으며 2009년까지 모든 작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회원국으로 가입('02.1)하였으며, 앞으로 국내 신품종의 국외보호와 품종육성자에게 외국의 품종 육성관련 정보제공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생명공학의 발달과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은 신품종육성의 소재가 되는 유전자원 확보·활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국내외 유전자원에 대한 수집·보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농업유전자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중에 있으며, 보존유전자원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중이다.

#### 다. 수산식품 가공산업의 육성

수산물의 소비가 웰빙 추세에 따라 2004년 3,922천톤에서 2005년 4,169천톤으로 247천톤 증가한 가운데 수산물가공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함에도 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및 생산량은 153만톤 수준에서 소폭증가(3만톤) 추세이며, 품질인증 대상품목이 확대되고 품질기준이 일부 강화되었으나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수준의 품질인증제 확대가 요구되는 실정에 있고 가공산업 활성화 및 고품질 수산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활어회 중심의 회문화 개선을 위한 싱싱회 생산·유통·소비기반을 구축하고 수산물품질인증제 확대를 통해 수산식품의 기준강화 및 품질 향상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 및 음식문화의 국제화 추세 등으로 가공품에 대한 소비 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수산물가공품 생산에 있어서도 소비자 요구 및 소비 추세를 반영하여 편리화·다양화·고급화 전략과 함께 국민보건 위생에 적합한 가공품 생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2006년은 가공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Cold Chain System을

구축하여 동북아 수산물류 거점 확보를 위한 감천항 가공단지 지원 및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물의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을 내실화하고 특히 부가가치가 큰 지역특산품 중심으로 산지가공시설 선별 지원(17개소 69억원) 및 굴 패각제거업 시설 현대화(21개소, 13억원)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싱싱회 가공시설 활성화 및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판매장 15개소를 개설, 지원(9억원)하여 싱싱회 가공공장의 판매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싱싱회 공급체제를 구축하여 싱싱회 가공산업 육성의 원년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수산물 확대보급을 위한 수산물 품질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대상품목에 건제품, 냉동품, 헛감용 등에서 활어 등을 추가하고 인증품목 수를 112개에서 130개품목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국의 명성 높고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함께 이를 지역 특화사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생산자와 소비자의 동시 만족과 보호를 위한 지리적 표시의 등록제도를 최초로 연내에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 제품별 가공공장 현황

(2005년말 기준)

구 분	계	해조류	절임식품	조미가공	건포류	기 타
공장수 (개소)	2,937	580	524	299	265	1,269

### 가공공장 및 가공품 생산량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공 장 수(개소)	4,984	3,484	3,388	3,008	3,87	2,937
생 산 량(천톤)	1,465	1,547	1,444	1358	1,529	1,559
평균생산량(톤)	293	444	426	451	495	530

※ 가공공장의 대형화 현대화 추세로 공장은 감소하는 반면 공장당 평균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음



아울러, 수산벤처기업과 수산물 가공산업을 수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고소득 창출과 어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수산특정 연구 개발사업과 해양 수산 벤처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신지식인(95명)과 영어조합법인(986개소) 등을 대상으로 벤처 지정 및 창업 관심을 유도하고 각종 교육과 지원을 강화하여 성공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과 수산벤처 지원 확대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4. 고부가가치 농림어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정보인프라 구축

##### 가. 농림기술개발사업 추진

###### (1) 개요

농림업분야의 기술은 타분야와 달리 기후나 토양 등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술의 이전이나 모방이 어려울 뿐 아니라 선진국들이 농림업과 관련한 유용 물질이나 첨단기술의 이전을 점차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어 세계는 지금 기술경쟁 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 소비자의 기호가 고품질·안전농산물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통일을 대비한 기초식량의 자급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농림업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1994년부터 농림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에 기술수요자 중심형 기술개발 및 성과활용 촉진을 위해서 현장애로 기술개발 등 5개 사업을 3개 사업 영역으로 개편(핵심전략기술개발사업과 현장적용기술개발사업 및 농산업기술개발사업)하여 추진하고 있다.

핵심전략기술개발사업(기존 기획연구개발사업 및 첨단기술개발사업)은 국가정책 목표달성 및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긴요한 중점기술과 생물, 물리, 화학, 등을 응용하여 농림업에 적용되는 첨단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미 타 분야에서 개발된 기술을

농림업분야에 접목시켜 생산성의 향상 또는 농림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분야와 현장적용기술개발사업(기존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 및 농업인개발과제)은 영농·영립 현장에서 재배, 사양, 생산기반, 기계, 시설, 유통, 가공, 생활, 환경, 정보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애로기술로서 단기간에 해결이 가능하며 농림업의 소득증대와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분야로 구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농림업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농림산업의 구조조정 촉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연구의 주체가 되어 기술을 개발하는 농산업기술개발사업(기존 벤처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을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사업개편 개요

	사 업	지원분야	지원기준
<b>현장애로 농업인 첨단기술 기획연구 벤처형</b>	<b>핵심전략 기술개발 (Top-down)</b>	- 생명공학기술 등 - 정책목표달성기술	과제당 10억원이내 *전략기술 : 20억원이내
	<b>현장적용 기술개발 (Top-down, Bottom-up)</b>	- 현장애로기술 - 지역별 특화기술 등	과제당 5억원이내
	<b>농산업 기술개발 (Bottom-up)</b>	- 고부가제품 개발기술 - 수출촉진기술 등	과제당 5억원이내

### (2) 연구개발 추진현황

2005년말 현재 총 3,606연구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중 핵심전략기술개발사업 과제가 97건, 현장적용기술개발사업 과제가 3,341건, 농산업기술개발사업 과제가 168건이다.

2005년말까지 연구가 완료된 과제는 2,832개 과제로 이중 522개 과제는 산업체 및 농가에 이전되었고, 1,468개 과제는 산업체에 이전 추진중에 있으며, 842개 과제는 교육지도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등 산업재산권 출원 1,595건, 논문발표

및 학술지 게재 12,283편으로 이들 과제의 연구성과가 조기에 농업인과 산업체에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

농림기술개발과제 현황

구 분	연 구 과 제			
	선 정	계 속	완 료	기타(협약 해약, 중단 등)
핵심전략기술개발사업	97	21	76	-
현장적용기술개발사업	3,341	599	2,653	89
농산업기술개발사업	168	42	106	20
계	3,606	662	2,835	109

특히 기술개발이 완료된 과제 중 기업체와 기술이전 및 기술료 징수계약을 체결한 우수 기술개발 과제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업체 기술이전우수과제 내역

연구성과 (제품명)	제 품 설 명	연구비 (백만원)	연구기관 (생산업체)	경 제 적 효 과
천년약속	버섯균사체가 분비하는 알콜을 이용한 건강기능주	210	동의대학교 (주)천년약속	○2004년 4월 제품생산 ○2005년 30억원 매출 ○2006년 350억원 매출
농업용 저수지 수위 관측기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위를 자동으로 측정하여 저수지 물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관측 시스템 개발	140	농어촌연구원 아이에스텍(주)	○2006년 31개소에 보급 1억4천 매출(대당 700만원) ○2011년까지 전국 1,550개소 보급 계획, 50억 이상 매출예상 ○기존제품 1/2 가격으로 전국농업 저수지 50%이상 보급 목표
씻어나온쌀	알칼리 이온수로 씻은 뒤 급속 건조시킨 쌀 (쌀벌레, 곰팡이, 변패없음)	779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주)라이스텍	○2000년 12월 제품생산 ○2002년 27억, 2003년 50억, 2004년 92억 매출 ○2006년 120억원 매출추정
꽃송이버섯	꽃송이버섯 및 약용버섯 유래의 수용성 베타글루칸을 이용한 건강식품 및 화장품	160	(주)하나바이오텍	○2005년 15만불 수출 ○2006년 30만불 이상 수출 예상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2006년도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내용보고서

연구성과 (제품명)	제 품 설 명	연구비 (백만원)	연구기관 (생산업체)	경 제 적 효 과
거대배아미	쌀눈을 키워 건강기능성 성분을 증진시킨 특수미	240	서울대학교 (주)신지	○ 2005년 30억 매출 ○ 2006년 35억원 이상 매출예상
농용공기순환제습기	공기순환 팬과 제습시스템을 결합한 '농용공기순환제습기'	227	(주)신안그린테크	○ 2005년 11억 매출 ○ 2006년 20억원 이상 매출예상
강제틀사방댐	새로운 치산구조물 철강제사방댐	300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주)한보니스코	○ 2006년 현재 약 60개소 강제사방댐 적용으로 기존사방댐 설치비용의 65% 수준으로 경감 ○ 전국 사방댐 설치대상지역 약 7,300개소에 본 연구결과를 적용하면 약 70억원의 공사비용 절감 및 재해예방 저감효과 발생 - 강제틀사방댐 설치지역의 경우 비설치지역 대비 2006년 수해피해액 규모(강원도지역)가 10% 미만으로 수해예방효과가 큼
HAN Slim	농산물 유래 항비만 바이오신소재 개발	205	(주)바이오뉴트리젠	○ 유럽의 Han Korea에서 Slim & Slim-PWH원료를 사용한 "HAN Slim" 제품 출시 현재까지 44.6백만원어치 원료를 수출 ○ 2006년 11월 국내 미군부대에 제품 납품
밤나무 노령임분 갱신	밤나무 노령임분 갱신 및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900	국립산림과학원	○ 조사지역(공주, 부여, 진주)에서 저수고 수형조절시 생산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냄(5년 차에는 ha당 약 1톤 증가) ○ 과실등급별 생산비율은 저수고 수형조절이 무처리에 비해 특대와 대의 품등 점유율이 높음

## 나. 수산기술개발사업 추진

### (1) 개요

수산업을 21세기 종합해양 과학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일반회계('90년) 및 농특세('94년)를 재원으로 농림수산부에서 추진하였으며, 해양수산부의 발족으로 수산부문 기술개발사업을 농림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하여 199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은 수산정책연구개발사업과 수산기술개발사업으로 구분하며, 수산기술개발사업은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 첨단기술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동 사업은 국·공립연구기관, 학계, 산업계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수산업발전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06년에는 학계·연구기관·산업계·행정기관 등에서 수요 조사한 과제를 대상으로, 전문기관(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에서 평가·선정한 기획과제와 함께 자유 공모과제를 모집하여, 실용성이 있고 산업화가 가능하며 수산기술개발중장기 발전 계획에 부합되는 우수한 과제를 선정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 (2) 과제현황

2005년 수산기술개발사업은 “도서지역 고밀도 양식증대를 위한 컨테이너형 용존 산소 관리시스템 개발” 등 총 73개 과제(신규사업 25과제, 계속사업 48과제)를 선정하여 5,155백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하였고, 수산정책연구개발사업으로는 “수산물 채취 잠수부의 잠수관련 질환의 현황 조사 및 대책수립” 등 총 14개 과제(신규사업 14과제)에 750백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였다.

이러한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은 2005년말까지 총 463개 과제에 대하여 67,172 백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하였는데, 이 가운데 390개 과제는 종료되었고, 73개 과제를 수행 중에 있으며 연구가 완료된 390개 과제 중 39개 과제가 산업체와 기술실시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이전이 되었고, 국제특허 11건, 국내특허 150건을 등록하는 등 연구 성과가 어업인과 산업체에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

수산특정연구개발 추진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5/2004
합 계	과제수	89	90	92	77	83	87	105
	금 액	5,562	5,631	6,136	5,348	6,100	5,905	97
수산기술개발	과제수	75	76	77	63	69	73	106
	금 액	4,762	4,888	5,351	4,634	5,350	5,155	96
수산정책연구	과제수	14	15	14	14	14	14	100
	금 액	800	743	785	714	750	750	100

다. 농림어업정보화 촉진

제1차 농업·농촌정보화 5개년 계획('01~'05)을 수립하여 농업·농촌정보화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정보화 기반이 상당수준 개선되었고, 농업인들의 정보화 이용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으나 아직 농업인들의 정보활용도가 미흡하고 농업인들에 대한 다양한 농업정보 콘텐츠 제공 및 정보화 교육서비스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2차 농업·농촌정보화 5개년 계획(2006~2010)을 수립, 농림정보화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농업·농촌정보화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농간 정보격차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1)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농림부에서는 도·농간의 정보통신기반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

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하여 왔다.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을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통신사업자에 대한 용자지원을 통해 추진하였고, 그 결과, 2005년말 전국의 농어촌지역 가구의 95%가 초고속통신서비스(ADSL)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2007년까지 인터넷 이용을 희망하는 모든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이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자체, 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여 (정부:지자체:통신사업자 = 1:1:2) 50가구 미만 지역 11만여 가구에 대한 망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총 352억원(정부 88억원)을 투입해 3,011개 마을 7만5,990 가구에 초고속망을 구축하게 되며, 2007년에는 유선 및 위성 방식으로 산간 및 도서 지역을 포함한 잔여 지역에 대한 망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작년말 미구축 잔여가구로 남아 있던 50가구 이상 지역 8만가구는 지난 상반기 통신사업자에 의해 구축 완료됐다.

농어촌 지역에 대한 초고속망 구축은 2005년 23%(전체국민 72.8%)에 머물고 있는 농어민들의 인터넷 이용률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2) 농업인 정보화 교육 확대 및 정보문화 확산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교육내용 및 교재를 기초·중급·전문과정별 특성에 맞는 교육내용으로 집중화·차별화하고, 교육내용을 수준에 따라 선택·활용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된 농업 경영정보 전문교육(공모과정) 개발을 확대하여 수요자 맞춤형교육을 통한 정보 활용 능력 향상을 추진하였다. 교육기관 평가 및 교육강사 등에 대한 인증제 시행으로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교육이수 후 사후관리기능도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농업인의 정보화교육 참여를 확대하고 재택·반복학습 지원을 위해 온라

인교육 콘텐츠 확대구축을 통해 온·오프라인 통합교육(Blended Learning)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22개 농업계 대학에서 실시해 온 농업정보119 서비스는 농업정보119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방문교육 및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하고, 원격지원 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방문교육이 되도록 하였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단위 : 명)

구 분	계	1998~2003	2004	2005	2006(P)
총 계	524,767	325,020	77,352	67,380	55,015
기초교육 (컴퓨터·인터넷활용)	149,811	117,722	20,445	7,144	4500
중급교육 (농업정보활용)	67,894	41,355	13,182	6,607	6750
경영·회계 S/W(중기)	3,416	-	-	1,766	1650
품목·분야별 전문교육	18,382	14,072	2,039	1,056	1215
농업정보 119서비스	91,462	56,198	13,190	12,074	10000
이동버스 정보화교육	9,778	7,478	1,230	570	500
정보화선도자	81,906	11,271	16,292	23,943	30400
자체교육(농협, 기술센터)	46,666	31,776	6,821	8,069	-
온라인교육	7,712	1,202	2,722	3,788	-
원격지원서비스	3,794	-	1,431	2,363	-
생산자단체(농협)교육	11,186	11,186	-	-	-
정보화공공근로사업 (농가방문교육)	32,760	32,760	-	-	-

자료 : 농림부 투융자평가통계관실



(3)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콘텐츠 확충

농림수산정보망(affis.net)을 통해 농업인을 위한 품목중심의 콘텐츠 및 도시지역 자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교육관련 전문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교육컨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농촌을 도시지역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도시지역 이용자와 함께 꾸며가는 콘텐츠도 제공할 계획이다. 살아있는 농업정보 공유를 위해 동호회 중심의 커뮤니티를 활성화 하고, 품목중심으로 활동중인 동호회를 기반으로 정책담당자, 관련기술담당자, 유통전문가, 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동호회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농산물 출하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유통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한 출하지원시스템(<http://www.chulha.net>)은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의 67개 주요 품목에 대한 경락가격 분석정보와 유통전문가의 시황·전망정보 등을 제공하여 농업인이 출하시기와 시장을 스스로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농림 소속(유관)기관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하는 농림분야 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검색·분류·제공하여 농업인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농업·농촌 정보화 촉진 및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2004년까지 총 1,706농가에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에는 기 구축된 홈페이지의 운영 및 관리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산물 전자상거래의 기반을 확대 추진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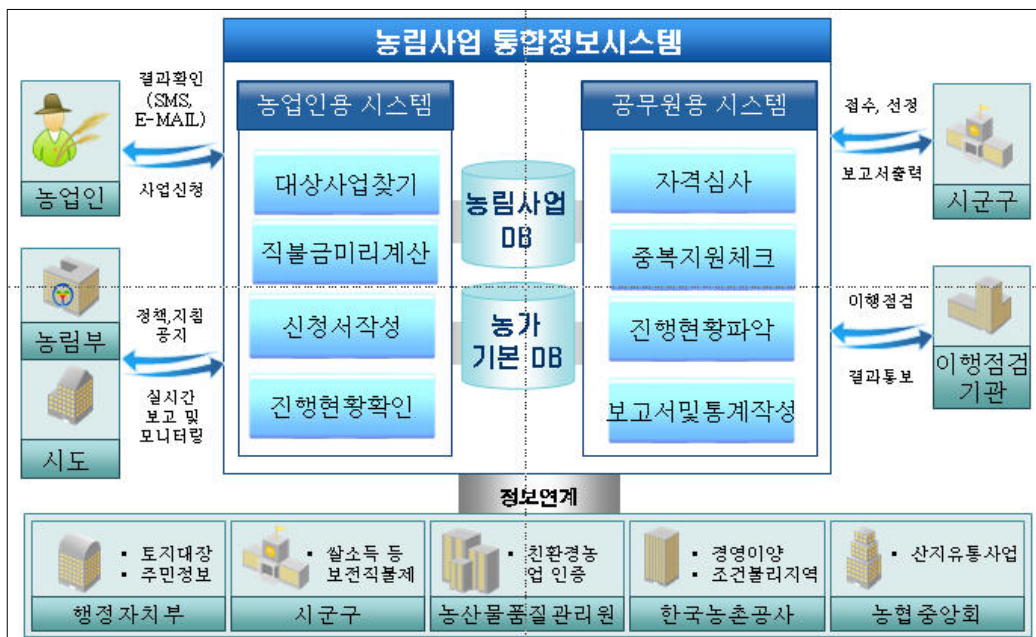
또한 농업인 홈페이지 모음 사이트를 개선하여 홈페이지 관리·운영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농업인 홈페이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전자상거래 우수농가를 발굴·홍보하여 벤치마킹 사례를 제공하고, 농산물 품평회를 겸한 시상식도 추진할 계획이다.

(4)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그 동안 농림사업관리는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신청·대상자선정·자금집행·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없어, 일선 시군의 경우 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에 중복문제 발생가능성 및 사후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은 2013년까지 투자되는 119조원의 농림 투융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업무처리방식을 On-line화하여 시군·시도·농림부에서 사업진행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미비점을 조기에 대처하는 동시에 업무경감과 사업집행의 투명화를 통해 농림행정의 혁신을 목적으로 구축중인 사업이다.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은 2006년 5월부터 실제 업무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AgriX가 적용됨으로써 농업인들은 전국의 234개 시군구를 통하여 서류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게 되었고 일선공무원은 신청검토·선정·자금집행·보고하는 업무를 온라인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2006년에는 대상자수가 많고 파급효과가 큰 직불제사업(친환경농업, 조건불리, 경관보전)에 대해 AgriX를 우선 도입키로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축산분야로, 2007년에는 과수분야로 확대하여 2009년까지는 130여개 농림사업 대부분을 온라

인화 할 예정이다.

농업인의 경우 AgriX 홈페이지([www.agrix.go.kr](http://www.agrix.go.kr))에 접속하여 본인의 영농상황을 입력하면 시스템의 자동검색기능을 통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시도·시군 공무원은 AgriX의 자동탐색기능을 통하여 농업인의 중복신청을 원천 차단할 수 있고, 자료작성·관리와 대내외보고 자동화로 행정비용·시간을 대폭 절약할 수 있으며, 농림부 담당자는 사업 진행상황의 실시간 파악이 가능하게 되고, 중복지원 사전예방 등 행정의 투명화·효율화로 창의적인 일에 전념할 여력이 생기게 되며, AgriX에 축적된 정보는 DB로 관리되어 향후 맞춤형 농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 (5)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우리나라 식물자원의 보전 실태를 정보화하여 지속적인 보전관리와 자원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1998년부터 국가식물자원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하였고, 동 시스템을 확대한 국가생물종지식정보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국가생물종지식사업에 대한 연차별 사업실적은 1단계(1998)에는 기반구축단계로서 C/S환경의 관리시스템 및 국립수목원 홈페이지를 개발하였고, 2단계(1999)에는 활용단계로서 웹환경의 인터넷 정보망 개발 및 보전기관, 식물분류체계, 식물목록, 식물도감 DB를 구축하였다.

3단계(2000~2001)에는 DATA 구축단계로 국립수목원 등 식물보유기관(10개소)의 보유식물 정보화와 대학 등 식물표본관(15개소)별 표본정보의 DB를 구축하였고, 식물 식재위치를 GIS와 연계하여 식물식재지에 대한 결과분석이 가능하도록 GIS 응용시스템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4단계(2002~2003)에는 국가생물종지식DB 구축단계로 12개 대학 및 3개 기관

에서 보유한 곤충표본정보 DB를 구축하였고, 동기간에 국내에 자생하는 식물에 대한 “국가표준식물목록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식물종 목록에 대한 표준화를 실시하였으며, 표준화된 식물종은 국제생물다양성협약에 의거 우리나라의 식물주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5단계(2004)에는 기존에 구축한 식물·곤충 종정보 및 표본정보의 DB 표준화와 각 시스템의 연계를 통하여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의 통합구축을 완성하는 단계로서, 미비된 곤충종정보와 자연생태동영상 등 생물정보 DB를 추가 구축하고 도감 정보를 재정비 하였다.

6단계(2005)에는 국가생물종지식DB 구축을 13개 대학 및 2개 기관에서 보유한 식물표본 및 균류도감 정보를 확대 구축하고, 기구축된 지식정보화 사업 중 수목원 보유식물의 종 정보 및 이미지 정보의 보완과 식물명을 국가표준식물목록을 적용하여 표준화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7단계(2006)에는 기 구축된 생물자원 표본의 활용도와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종합생물자원 정보포털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더욱 다양하고 많은 양의 표본에 대한 DB구축 확대를 위하여 16개 대학 및 3개 기관에서 보유한 식물 및 곤충표본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하고 있다.

국가생물자원정보 사업을 통하여 기초과학분야인 식물, 곤충에 대한 분류체계의 정착과 생물종정보에 대한 활용가치를 확산, 상대적으로 정보화에 열악한 국립수목원의 정보화를 통하여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국 수목원, 식물원, 대학간의 정보교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6) 농업과학기술 개발·보급사업 정보화 추진

농업기술 개발·보급 분야의 정보화 사업은 생명공학, 재배사양, 농업환경, 경영기술 등에 정보기술을 접목시켜 신품종 육종 등 기술개발을 향상시키고 인터넷 등 정보매체를 통하여 일선 농업인에게 개발된 기술이 조기에 실용화 되도록 촉진함

으로써 기술개발 및 보급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생물산업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대규모 유전체정보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용 생물정보의 발굴·활용과 고유 유전자원의 개발에 활용하고 있으며, 전국의 농업토양정보를 DB화 하고 국가 지리정보시스템(NGIS)과 연계하여 필지별 농업토양정보서비스인「토양전자지도」를 세계최초로 완성, GIS기반의 농업환경연구 업무 추진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농업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식역량 확충을 위하여 농업과학기술 전자도서관을 구축, 219천여권의 장서를 DB화하고 4,700여종의 농업관련 해외 전자학술잡지(e-Journal)를 구독하여 연구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개발된 농업기술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그동안 새롭게 개발된 분야별 농업기술들을 체계화 하여 이를 인터넷을 통하여 농업인 등에게 서비스 중이다. 서비스되고 있는 주요 내용으로는 분야별 농업기술을 집대성한 농업과학기술대전과 농업토양, 기상, 병해충 정보 등 농업환경정보, 농업경영·유통정보 그리고 농촌 어메니티자원 정보, 농업인 건강·안전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핵심기술들을 동영상화 하거나, 통합검색, 맞춤형 정보서비스, 모바일정보서비스 등을 개발하여 농업인들이 복잡한 농업기술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의 전문가와 상담이 가능하도록 한 원격지 화상영농상담시스템을 전국 40개소에 운영하고 있고, 사이버 영농교육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연간 13개 분야에 대하여 2,500여명의 농업인들이 영농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고객을 직접 상대하여 농업인 애로해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2005년에는 농산물 생산이력 기반조성 및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시범 농가를 중심으로 42개소 2,200농가가 참여한 농산물 생산이력시스템을 시범운영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농림부가 추진해온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농촌진흥청에서 이관받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까지 630농가를 지원하였다.

향후 중앙과 지방농촌지도기관 간 농업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지식 공유의 확대를 통한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각 지역별 농업기술정보를 확충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정보서비스를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 (7) 어업정보화 촉진

어업인 정보격차 해소 및 인프라구축을 위해 2000년부터 어촌디지털 구축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먼저 어업인 정보화 교육은 지방청, 국립수산물과학원을 중심으로 2005년까지 총 71,006명의 어업인 등에게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도시나 농촌에 비하여 정보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촌지역을 위해 어촌정보사랑방 운영사업을 2005년까지 443개소를 지원하였다.

앞으로도 어업인정보화 교육은 그동안 양적 중심에서 질적 중심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어촌정보사랑방운영사업은 2010년까지 850개소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어업인 단문자서비스(SMS)확대, 어업인 교육장 환경개선 등 어업부문을 본격적인 정보화 추진을 통해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어촌정보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8) 수산물 유통정보화 사업 추진

수산물은 복잡 다기한 유통절차를 거쳐 소비되고 있어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수산물 유통정보 제공기반의 구축으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산물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수산물 유통의 합리화를 도모함은 물론 유통주체간의 정보를 공유하여 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원활한 수산물 수급조절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통종사자와 소비자들이 쉽게 수산물 유통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1999년부터 수산물 유통정보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2001년까지 정부예산, 정보화촉진기금 및 유통주체 부담금 등 5,300

백만원을 활용하여 ‘수산물 유통정보’ 인터넷홈페이지 개설, 산지수협 등 73개소에 대한 위판정보 및 조합업무전산화를 하였으며, 11개 수산부류도매시장에 대한 경락정보 DB화, 3개 도매시장에 대한 무선응찰방식 전자경매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수협중앙회에 대한 전자상거래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한편, 2003년에는 97개 일선수협 중 수산물 유통정보시스템에 편입되지 못한 25개 조합의 유통정보화를 추진하여 동 5개년 사업의 마무리를 하였으며, 생산자-소비자간 직거래 확대를 위해 인터넷 수산시장 개설을 추진하여 2004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총 500여개 어가의 입점이 완료되어 시스템구축 사업은 준공되었으며, 향후에는 어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운영체제를 갖추는데 주력할 것이다.

또한, 수산물 수출입통계DB를 구축하여 수산물유통정보를 유통종사자, 어업인 및 소비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5. 수출진흥 및 수입관리 대책

### 가. 수출진흥 대책

#### (1) 농식품수출 현황

농식품수출은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농업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대안임과 동시에 WTO체제하에서 그동안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해온 구조개선사업의 성과를 간접적으로 평가받는 지표가 되며, 우리농산물의 품질향상과 규격표준화 등 유통시스템개선을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농정시책이라 하겠다.

또한, 우리의 바로 이웃에는 세계최대의 농산물 수출시장인 일본과 거대 시장으로 등장한 중국이 위치하고 있어 우리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수출증대를 통하여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국내의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불안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농식품 수출동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화훼, 채소, 과일류 등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신선농산물의 수출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이 같은 경향은 수출농업인의 수출마인드 향상과 정부에서 적극적인 해외시장개척의 성과라고 평가되며 중장기적인 수출농업의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 최근년도의 수출동향

(단위 : 백만불, %)

	1997	2004	2005	증감률(%)
(전체 농림축산물)	1,759.2	2,085.0	2,221.5	6.5
○ 신선 농림축산물	615.7	549.7	608.2	10.4
- 김 치	39.7	102.7	93.0	△9.4
- 돼 지 고 기	242.3	27.3	34.3	25.6
- 채 소	38.4	127.0	138.5	9.1
- 화 훼	5.3	48.5	52.1	7.4
○ 가 공 농 림 축 산 물	1,143.5	1,535.3	1,613.3	5.2

한편, 수출농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수출농산물의 공동선별·포장, 예냉검사 등 일관 수출체계를 갖추고 있는 광양·마산수출물류센타를 운영중이며, 아울러 수출농산물의 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원예전문생산단지를 재정비하여 수출농업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 (2) 그간의 수출농업 육성시책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수출농업의 육성시책을 대별하면 고품질 수출농산물생산



및 공급기반구축과 다양하고 지속적인 해외시장개척활동을 들 수 있다.

국내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는

첫째, 원예전문생산단지를 1997년의 28개 단지에서 2006년말 현재 149개 단지로 확대 지정하여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기지를 확보하였으며,

둘째, 수출컨설팅도 2004년 93회에서 2006년 307회로 확대하여 실시함으로써 생산 및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요인을 현장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하였다.

셋째, WTO에서 지원이 허용되는 수출물류비의 지원을 2004년 256억원에서 2006년에는 289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출자금융자도 2006년에는 3,353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수출관련 경영체의 자금부담을 크게 완화토록 하였다.

넷째, 국내외 수출관련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7개국 10개 해외 aT센터와 21개국 44명의 모니터로부터 입수되는 수출관련정보를 인터넷정보망인 KATI 와 FAX신문 등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적시에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해외시장 개척활동도 꾸준히 전개해오고 있다.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규모를 확대하여 직접적인 수출계약과 동시에 신규바이어의 발굴, 현지소비자의 선호도에 맞는 제품개발 등의 기회로 활용해오고 있다.

한국산 농산물의 세계브랜드화를 위해 수출농산물공동대표브랜드(Whimori) 사업을 추진하고 종래의 라디오와 빌보드 위주의 단편적인 홍보에서 현지TV와 인터넷 등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의 JUSCO등 해외의 대형유통업체와의 특판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농식품의 홍보 등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최근의 농산물 수출은 수출 상대국의 식품안전 규제 및 수입검역 강화,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일본, 동남아 시장에서의 시장경쟁 심화 등 수출애로에도 불구하고

하고 세계적인 경기 회복, 2002년 한·일 월드컵 및 한류열풍에 힘입어 우리나라 인지도 제고, 건강식품으로의 김치에 대한 관심 증가, 농산물해외시장개척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수출지원 예산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27,521	35,300	36,164	35,415	39,655	41,617	41,630
□ 농산물해외시장개척	8,440	9,345	9,559	9,994	10,773	12,735	12,748
○ 국제농산물박람회	3,011	3,108	3,542	4,098	3,953	4,105	4,105
○ 농산물수출활성화사업	853	1,025	879	1,100	1,045	1,300	2,961
○ 현지유통업체직수출	346	697	947	1,000	1,430	1,200	1,433
○ 수출홍보사업	3,429	3,458	3,250	2,755	3,195	4,780	2,858
○ 해외시장정보사업	801	1,057	941	1,041	1,150	1,350	1,391
□ 농축산물 판매촉진	19,081	25,955	26,605	25,421	28,882	28,882	28,882
(수출자금용자)	(4,135억원)	(4,043억원)	(4,596억원)	(4,526억원)	(4,639억원)	(3,395억원)	(3,423억원)

\* 2005년 수출자금 용자는 수산물이 제외된 수치임.

2006년 11월까지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8% 증가한 2,058백만불을 기록하였으며, 과실·화훼·김치 등의 신선농산물 등은 감소하였으나 가공식품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연도별 농식품 수출동향

(단위 : 백만\$, %)

구 분	2000	2001	2003	2004(A)	2005(B)	증감률 (B/A)
농림축산물 합계	1,531.9	1,579.9	1,859.8	2,085.0	2,221.5	6.5
○ 신선농림축산물	550.0	521.0	507.5	549.7	608.2	10.4
○ 가공농림축산물	981.9	1,058.9	1,352.3	1,535.3	1,613.3	5.2

(3) 수산물 수출진흥 대책

1997년 수산물 수출입의 완전자유화 이후 연근해수산물의 자원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01년을 기점으로 수산물 수출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2006년에도 계속적으로 주요 수출 어종의 국내 생산이 저조할 것이며, 국제적으로는 주력 수출시장인 일본의 경기회복 지연과 함께 원·엔화 환율 하락, 유가 상승 및 목표시장에서 중국 수산물의 공세 등으로 인해 수산물 수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며 다음과 같이 수산물 수출활성화 대책을 추진하였다.

첫째, 일본의 김 수입할당(IQ, Import Quota) 제도에 대하여 WTO에 제소하고 김 수출물량을 2015년까지 1,200만속까지 수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김 수출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으로 인해 중단된 한·일 무역실무회의 개최를 재개하여 한국산 수산물(9종) 및 다시마조 제품의 수입할당량 상향 조정 요구 등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통상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둘째, 수산물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및 우리 수산물 우수성과 식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로드쇼를 개최하였으며, 수입 바이어를 초청하여 수출촉진방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각종 지원활동을 강화하였다.

셋째, 우리수산물의 우수성을 대외에 홍보코자 국내 국제 공항 및 여객선터미널과 중국 및 일본 공항에서 우리 수산물 광고를 실시하였으며, 수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제품을 소개하는 수출상품 종합 카탈로그의 제작·배부 및 포장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였다.

## 나. 수입관리 대책

### (1)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관리

UR 농업협상 결과에 따라 그동안 수입을 제한해왔던 농축산물을 연차적으로 관세화 개방하면서 국내시장질서의 유지와 국내 농업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63개 품목에 대하여는 국내외 가격차에 해당하는 고율관세를 부과하였으며 물가 및 수급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일정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로 시장접근물량을 설정하였다.

저율관세가 부과되는 시장접근물량은 별도 수입 관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품목별로 지정기관배정방식, 수입권공매방식, 실수요자배정방식 등으로 관리방식을 구분하여 수입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가격등락이 심한 참깨, 고추, 마늘, 양파 등 17개 품목그룹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직접 수입하여 판매토록 하는 지정기관배정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밤, 대추 등 6개 품목그룹에 대하여는 누구나 공개경쟁을 통하여 수입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권공매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옥수수, 대두 등 40개 품목그룹은 국내 수요자가 과거의 수입실적 등에 따라 수입권을 배정받아 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실수요자배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지정기관배정방식 운용과정에서 생긴 판매이익금과 수입권공매방식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매납입금은 농업에 대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국내농업 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UR협상과정에서 합의된 시장접근물량은 1988~1990년 국내 평균소비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였으나, 그 후 국내여건 변화로 수급불균형이 발생하여 국내 생산이 부족한 품목은 저율관세 적용물량을 증량하여 관련 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상품목은 사료용 원료인 옥수수, 보조사료, 사료용근채류 등과 국민 식생활 안정을 위한 원료농산물인 대두, 팥 등 13개 품목이다.

(2) 관련법상의 각종 제도의 활용

(가) 할당관세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용 원자재, 사료용 곡물 등 특정 품목의 관세를 인하하는 할당관세를 운용하고 있다. 2006년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사료용 옥수수, 밀, 근채류, 요소, 농약원제 등 24개 품목이다.

(나) 조정관세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는 품목에 대하여는 조정관세를 적용하여 양허세율 범위 내에서 관세를 인상, 국내산업을 보호하였다.

2006년 조정관세 적용품목은 찹쌀, 바나나, 메주 등 7개 품목이며, 메주(20% → 18), 합판 등 목재품(13% → 12) 등은 축소 적용하였다.

(다) 특별긴급관세제도(Special Safeguard)

UR 협정상 관세화로 개방된 품목 중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급락한 품목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제도를 발동하여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2006년 10월말 현재 수입가격이 현저히 낮은 녹두, 팥, 낙화생 등 8개 품목에 대하여 부과하였다.

(라) 산업피해구제제도(Safeguard)

수입개방에 따라 특정물품의 수입 급증으로 관련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대중국 한시적 세이프가드조치(TSG)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에 따른 예외적인 세이프가드조치 발동의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였다.

### (3) 농축산물 밀수근절대책 추진

국내가격 보다 현저히 낮은 중국산 농산물이 국내에 밀반입 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세청과 협조 아래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매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의 저가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참깨, 콩나물콩 등 22개 주요품목을 대상으로 사전에 관세청과 협조하여 기준신고가격을 정하고 이 보다 낮게 신고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단속하고 있다. 또한, 수입품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요원(400명)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원산지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중국산 농산물의 휴대품 과다반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휴대농산물의 면세 한도량을 지속적으로 축소하였으며(80kg → 50), 2002년 1월부터 품목별 반입한도량(5kg, 잣 1kg, 쇠고기 10kg, 한약재 3kg)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 (4) 수산물 수입관리대책

1997년 수산물 수입자유화 이후 저가의 외국산 수산물 특히 중국산 수산물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 생산어업인 보호 및 수산업기반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첫째, 2006년에는 냉동민어, 활농어 등 10개 품목에 대하여 조정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저가 수산물의 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우젓, 활돔, 활뱀장어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종가·종량세(선택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WTO/DDA 및 FTA협상 등에서 무세화 또는 관세의 대폭적 인하가 논의 중이고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국에서 조정관세 철폐,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등 조정관세 유지에 어려움이 있으나 국내 수산업보호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통상마찰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부처와 협의·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FTA협상을 통해 일정한 수입량까지는 저세율을 적용하고 일정 범위를 넘는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율 할당

제도를 2006년 9월부터 도입·시행하였다.

셋째, 중국산 수입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01년 4월 「한·중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이후, 2004년 12월 「한·중 활어위생약정」을 체결,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활어는 등록된 양식장에서 생산되고, 위생안전을 보증하는 위생증명서가 첨부된 활어에 대해서만 수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태국으로 수입되는 수산물의 위생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6년 6월 27일 체결된 「한·태국간 수출·입 수산물·수산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약정」이 2006년 7월 27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태국으로 수입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넷째, 어류질병 감염으로부터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붕어, 잉어 등 낚시터에 방류하는 어종에 대하여도 수산동식물 이식승인 대상품목에 포함시켜 통관전에 질병감염 여부에 대한 검역을 받아야 국내에 수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안전한 수산물 공급 및 수산동물전염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외국으로부터 이식되는 수산동물의 질병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다섯째, 수입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새로운 위해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하여 기준규격을 설정함은 물론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여섯째,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검사제도 강화차원에서 2005년 1월부터는 선도보장이 가능한 냉동품, 염장품, 건제품 등은 정밀검사후 통관토록 하고, 부적합 이력이 있는 해당국가·해당품목에 대하여는 특별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검사를 강화하고 선통관을 금지토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1년 10월부터는 횃감용 수산물에 대하여 장염비브리오,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등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곱째, 2005년부터 수산물의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소비자에게 수산식품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물이력추적제를 도입하여 김(조미김), 넙치(상싱화), 굴(생굴) 등 3개 품목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확대 추진중이다.

여덟째, 수산물지리적표시제도를 도입하여 수입수산물과 차별화로 국내 수산물의 경쟁력 및 브랜드가치 상승으로 소비자의 수산식품위생안전 등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 6. 친환경농업의 육성

소비자들의 식품안전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유기농산물을 비롯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그간 증산위주의 농업정책 추진 과정에서 화학비료와 농약의 과다사용, 축산분뇨 발생증가 등으로 인해 농경지와 농업용수가 오염되는 등 농업환경이 악화되어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우리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우리농업을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1996년 7월 「21세기를 향한 농림환경정책」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친환경농업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97년에 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하고 2001년 1월에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01~'05), 2006년 2월에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06~'10)을 수립하여 친환경농업실천기반조성,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산림환경개선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였다.

2004년 4월에는 그간의 친환경농업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친환경농업육성과 농산물 안전성 확보대책」을 수립하였다. 이 대책에서는 2010년까지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 비중을 10% 수준까지 올리고, 2013년까지 화학비료와 합성농약 사용량을 현재의 60%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목표와 그 실천계획을 수립하였다.



2005년 2월에는 친환경농자재중 사용량이 많은 키토산·목초액·천적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토록 관련제도를 개선하여 실천농가의 자재구입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소비량증가 등의 여건변화에 맞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2006년 9월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개정·공포하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증종류 축소(4종류→3종류), 인증기관에 대한 유효기관 신설(5년)등 친환경농산물 인증사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이와함께 경종과 축산이 연계하는 자연순환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해 자연순환형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모델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 및 이용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확대를 위해 2005년 9월에 “자연순환농업팀”을 구성하였으며, 2006년 6월에 자연순환농업 추진대책을 마련하였다.

#### 가. 농업환경오염 경감대책 추진

농업환경은 농약과 화학비료의 과다사용, 축산분뇨 및 농약빈병·폐비닐·폐농기계와 같은 폐영농자재로 인하여 오염되고 있는데, 농사 중 발생하는 오염원별 대책은 다음과 같다.

##### (1) 농약 사용량 감축을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

우리나라 전체사용량은 1991년 27천톤으로 정점을 이룬 후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나 모든 농약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 사용할 경우에 사람을 중독시키고 농작물과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어 사용량을 최대한 줄여나가면서 안전사용 기준을 잘 지켜나가도록 지도하고 있다.

정부는 농약사용량 감축을 위해 병해충종합관리(IPM)기술개발·보급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병해충 정밀예찰을 통한 적기방제, 농약절감형 재배 기술지도, 천적 이용 기술 등의 보급과 함께 생물농약 등 독성이 낮은 농약을 개발·보급 중이다.

작물별로 농약사용량 추세를 보면 벼농사는 농약 사용량이 많이 줄고 있으나 시설원에 작물의 경우 농약사용량이 감소되지 않고 있다.

### (2) 시설원예작물에 대한 천적방제 지원

합성농약 사용량이 많은 원예작물 재배에 천적방제를 정착시켜 친환경·안전농산물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실천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농약살포 노동력 절감 및 농약피해 방지 등을 통한 우리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5년에 시설원예작물에 대한 천적방제지원사업을 도입하였다.

천적방제는 2013년까지 시설원예작물 전체 재배면적의 20%수준인 20천ha를 지원하고 정책과급효과를 통한 농가자체방제를 포함하여 50%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05년에는 원예작물 중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등 4개품목 639ha에 대하여 총사업비 22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06년에는 대상품목을 7개품목으로 늘리고 지원면적도 1,039ha로 늘려 73억원을 투자토록 하고 이중 38억원을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하였다.

천적방제 체제가 정착될 경우 그동안 수출과정에서 농약잔류기준 초과로 반품되는 사례가 현저히 감소되고, 우리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등 수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3)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위한 비료 지원체제 개편

1999년 화학비료 사용량은 성분량기준 약 84만톤으로 농촌진흥청이 추정한 적정 시비량 62만톤보다 약 30%가 더 사용되고 있어 농경지 토양에 염류가 과다 집적되고 있다. 비료를 과다 사용할 경우 농작물에 흡수되지 않는 잉여비료성분이 지표수에 유입되어 하천과 호수의 부영양화를 초래하는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게 된다.

이에따라 2013년까지 비료 사용량을 40% 절감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1991년부터 추진해온 화학비료 판매가격에 대한 정부

보조를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오다가 2005.7.1부터 완전 폐지하였으며, 대신 유기질비료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아울러 토양정밀검정에 의한 시비처방, 작물별 적정시비 기준설정, 주문형 배합비료, 축분퇴비 등 환경친화형 비료를 확대 공급함으로써 비료사용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4) 가축분뇨의 자원화

가축분뇨는 적절하게 관리되고 자원화(퇴비·액비)되면 유기물을 다량 함유한 유익한 비료로 이용이 가능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토양의 물리적 성질 개량 등에 기여하며 작물의 증수와 품질향상에 효과가 있다. 또한, 화학비료 사용을 대체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므로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고 경종농가에서는 가축분뇨 퇴·액비를 토양에 환원하는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한 시설자금을 지원하되 축사구조와 지역여건에 적합한 처리공법의 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경종농가가 이용할 수 있는 품질이 검증된 퇴비·액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농가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농가 스스로 악취 및 파리 등의 제거를 위하여 농장관리, 환경개선제 사용, 분뇨분리 등으로 악취저감을 유도하고 농촌진흥청,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이용과 지도체제를 구축해 나아가고 있다.

가축분뇨발효비료(액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축분비료유통센터(43개소, '05말)를 지정하여 액비 수거·운반·살포장비 등의 구입을 지원하는 한편, 경종농가들의 액비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액비저장조 설치를 지원('05, 666개소 → '06계획, 520개소) 하였다.

또한, 2004.4월부터 9월까지 환경부와 공동으로 축산분뇨관리·이용대책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을 위한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가축분뇨 발생단계에서부터 이용단계까지 체계적인 관리의 틀을 마련하고 관련기관별 세부추진과제를 분류하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의 일환으로 농림부내 식량정책국과 축산국,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연순환농업팀」을 차관보 직속으로 구성·운영('05.9)하고 있으며 이 팀에서는 앞으로 가축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양질의 비료로 만들어 다시 농경지로 환원시킴으로써 지력을 복돋우는 자연순환형 농업 형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 (5) 폐농기계, 농약빈병 등 폐영농자재 수집

농기계 보유대수는 2005년말 현재 2,503천대로서 이 중 약 0.5%인 12천대 정도가 폐농기계인 것으로 추정되며, 그 중 30%를 수거처리 하였으며, 나머지는 농가에서 부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유 중이다.

봄·가을 영농기 이전에 농업인의 적기 영농실현 및 농기계 수리불편 해소를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순회수리봉사시 시장·군수 책임하에 무단방치된 폐농기계를 집중 수거토록 하고 있으며, 시장·군수가 마련한 장소 이외에 폐농기계를 방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토록 하는 등 수거체계를 개선하였다.

농약빈병과 폐비닐은 2005년의 경우 각각 49백만개, 265천여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되는데 환경부 산하 환경자원공사를 통하여 수거해오고 있으나, 수거실적이 각각 84%, 62%수준이며, 폐비닐수거율이 낮아 이로인해 농촌환경이 오염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3월과 11월을 중점 수집기간으로 정하여 일제수집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수집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2004년부터 수거되는 폐비닐 연간 85~100천톤에 대하여 전액 보조로 매년 정액지원(30원/kg)을 하고 있다.

나. 농업환경의 유지·개량

(1) 토양개량사업

산성토양이나 유효규산함량이 낮은 농경지를 대상으로 석회와 규산을 주기적으로 공급하여 토양개량을 추진하고 있다. 1996년까지 보조 50%, 자담 50%로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였으나, 1997년부터는 전액 보조사업(국고 80%, 지방비 20%)으로 전환하였다.

1999년부터는 규산 5년, 석회 6년 1주기, 2001부터는 공급물량을 늘려 규산 4년, 석회 5년 1주기로 공급하였으며, 2004년부터 규산, 석회 모두 4년 1주기로 공급토록 개선하여 토양개량효과를 높여나가고 있다.

(2) 농업용수 수질관리 대책

농업용수원에 대한 수질오염 추이를 평가 분석하기 위하여 2년마다 전국 저수지 18천개소에 대한 수질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그 중 전국에 분포된 규모가 비교적 큰 주요 저수지·담수호를 수질측정망으로 선정하여 지점당 연2~4회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수질측정망은 1990년에 30지점, 1998년에 200지점, 1999년에 350지점, 2000년에 450지점, 2001~2005년에는 500지점을 선정·운영하는 등 수질측정망을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수질조사결과는 환경부, 시도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단속,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등 수질오염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요시설에 대하여는 명예환경감시원 활동, 저수지 주변 청소, 주민홍보 등을 통한 수질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업용수 수질기준(IV등급 : COD 8ppm)을 초과하는 시설 중 수질오염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999년에는 4개지구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였고, 2000년에는 이 중 3개지구에 대한 세부설계를 완료하였다. 2001~2003년에 전남 무안군 감돈지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준공하였으며, 2004~2006년까지는 시범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사업효과를 평가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2개지구에 대한 기본조사를 추진하였고, 2006년에는 기본조사 4지구와 세부설계 1지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업용수 수질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6년 8월부터 환경부와 “농업용수 수질개선대책 공동작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호소관리(농림부·농촌공사)와 오염원 관리(환경부·지자체)의 공동대응 등 농림부, 환경부, 농촌공사, 환경관리공단 합동으로 지구별 수질오염 발생 분석 및 수질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대처할 계획이다.

## 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육성사업 추진

### (1)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상수원 주변의 친환경농업실천이 가능한 지역에서 10농가 10ha이상의 집단화된 단지를 중심으로 토착미생물 배양·증식 및 유기자원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퇴비제조시설, 환경친화형 비닐하우스 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지구는 2005년말까지 742개소가 조성되었으며, 2006년에는 총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하여 78개의 지구를 추가 조성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지구는 장기적으로 2013년까지 읍·면당 1개소를 목표로 총 1,500개소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2)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효율적인 친환경농업 추진과 농업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광역화된 단위로 추진

할 필요가 있어 시·군단위 환경민감지역 등을 대상으로 축산과 경종이 연계하는 광역단위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2013년까지 시·군당 1,000ha정도의 단지를 총 50개 조성할 계획이며 2006년에 3개지역에 대해 총사업비 150억원(2007년 150억원 별도)을 투자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범사업 추진결과 등을 감안하여 2007년부터 본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05년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조사와 함께 사업추진 모형개발을 완료하였다.

### (3)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농촌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1999년부터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그 동안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규제지역내의 농경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기준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였으나 2002년부터는 수준 높은 친환경농업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전국의 저농약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감소분(유기·전환기 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천원, 저농약 524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10,400ha을 대상으로 매년 5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2년에는 5,274ha에 30억원을 지원하였고, 2003년에는 10,459ha을 대상으로 30억원, 2004년에는 12,827ha에 4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에는 21,887ha을 대상으로 10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에는 35,030ha을 대상으로 141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논인 경우에는 밭과는 달리 2005년까지는 논농업직접지불금에서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수준으로 지원하여 왔으나 2006년부터는 논과 밭으로 분리된 직불사업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으로 통합하고 논에 지급하는 단가도 인상하였다.

즉, 논 저농약의 경우 ha당 217천원을 신규지급하고, 논 무농약은 150천원에서 307천원으로 지급액을 인상하며, 논 유기의 경우에는 270천원에서 392천원으로 지급단가를 인상하였다.

#### (4)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추진

친환경농업의 확산으로 유기재배 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서 유통시설 확충, 구매자금 지원, 품질 인증 확대 등 판매지원대책의 추진을 강화하고 있다.

도시 소비자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전문판매코너 200개소를 설치·운영중에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코너의 운영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 계약·구매를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자금을 1999년부터 2004년까지 60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에는 229억원을 지원하고 2006년에는 직거래자금(200억원) 이외에 유통활성화자금 50억원을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에 따라 생산·유통 중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소비확대를 위해서 TV,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한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농협, 친환경농업단체 및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유통시설의 확충, 대량수요처와 직거래 확대, 소비자의 현장체험기회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품질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7. 농어가 소득안정 및 경영위험관리체계 구축

가. 직불제 확충으로 농어가소득안정

### 농업직접지불제 확충

#### (1) 직접지불제 확충 계획

직접지불제는 WTO체제 출범이후 과거 시장가격지지정책보다 소득효과가 크고 생산왜곡효과가 작은 것으로 평가되어 전세계적으로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경영이양직불제를 도입한 이후 연차적으로 직불제를 확대하여 현재 8종의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농업구조조정이 끝난 선진국과 달리 농업의 구조조정과 개방피해에 대한 농업인 소득보전을 병행하여 추진해야하는 우리 실정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단기간에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연차적으로 직불제 재정규모를 확대하여 2013년에는 농업투융자재정의 23%수준을 확보할 계획이다.

#### (2) 2006년 추진현황

2006년 직불제 예산은 19,441억원으로 농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6% 수준이며 전년에 비해 10% 증가하였다.

2006년에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의 고정직불금 단가를 ha당 70만원으로 인상('05:60만원/ha)하여 소득보전을 강화하고, 조건불리직불제의 본사업을 실시하면서 도서지역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119천ha, 332억원)하고, 친환경농업직불제는 논과 밭을 통합하여 운영하였다. 친환경축산직불제는 축산업등록농가(900호)를 시범사업을 계속하며, 다양한 환경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가의 선택폭을 넓혀 나갔다. 경영이양직불제는 단가는 2005년 수준으로 유지하되, 신청량 감소추세를 감안하여 사업량을 축소조정 하였다('05:8천ha→'06:5천ha).

### (3) 향후 추진 계획

농가유형별 맞춤형농정으로 정책을 전환하게 됨에 따라 다양한 직불제를 농가유형별 경영여건과 목적에 따라 농가소득안정형, 구조조정형, 공익기능 제고형으로 체계화해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는 논농업·쌀중심의 쌀소득보전직불제에서 밭농업, 과수, 축산분야를 포괄하는 직불제로 확대 개편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강화할 것이다. 구조조정을 위한 직불제는 경영이양직불제를 대상연령, 대상농지 등을 확대하고 연금식 분할지급방식으로 지급단가도 인상하여 ‘은퇴직불제’로 개편할 계획이다.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한 직불제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축산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 관련 직불제를 ‘(가칭)지속가능농업환경직불제’로 통합하고 하위메뉴로 제시하여 직불제간 연계성을 높이고, 새로운 하위메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프로그램을 풍부하게 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6년에 중장기 직불제 확충계획을 마련, 2007년에 농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후 세부추진계획도 수립하고 2008년이후에는 개편에 착수하여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15년까지 농가소득의 10%를 직불제를 통해 보전하고 투융자비중을 농림재정의 24%수준으로 유지해 나간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법령 정비, 조직개편 등 관련제도도 충실히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직불제 주요 추진현황

구 분	경영이양 (1997)	친환경농업 (1999)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2005) *	
			고정직접지불금	변동직접지불금
목 적	· 영농규모화 촉진 · 은퇴농업인 소득 안정	· 환경보전	· 논의 공익적 기능 유지	· 쌀값하락에 따른 소득보전
대 상	· 63세이상 72세이하 경영이양하는 농가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 실경작자	· 실경작자
사 업 규 모	8.3천ha	11,385ha,	998천ha	998천ha
대 상 농 가	2.1천농가	6천농가	· '98~'00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경작하는 자	· '98~'00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쌀을 생산한 농업인
요 건	· 경영농지 매도시 · 5년이상 장기임대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준수	· 비료·농약 적정 사용,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 목표가격보다 수확기 쌀값이 떨어질 경우
단 가	- 매도289.6만원/ha (만 70세까지 최장 8년간 분할지급) · 임대:297.7만원/ha	· 79.4~52.4만원/ha · 지급 0.1~5ha	· 60만원/ha(진흥·비진흥 평균)	· 목표가격과 당해년도 수확기 평균 쌀 가격 차액의 85%
'06예산	286억원	69억원	7,171억원	9,096억원

\* 논농업직불제는 고정직접지불금, 쌀소득보전사업은 변동직접지불금으로 변경

직불제 주요 추진현황

구 분	쌀생산조정제 (2003)	친환경축산직불 (2004)	조건불리지역 (2004)	경관보전직불 (2005)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감축을 통한 쌀수급균형 도모</li> <li>· 쌀 재협상시 입지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안전축산물 생산을 통한 소비자 신뢰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li> <li>· 지역사회공동화 방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경관의 이롭다움 유지·도시민의 여가 수요 부응 및 농촌 지역 사회 활성화</li> </ul>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경작 농업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축산 프로그램을 이행하는농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지면중 구분지표를 적용 선정된 법정리 거주 실경작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특한 지형을 나타내는 농경지 및 전통적 특성이 남아있는 농촌마을</li> </ul>
사 업 규 모	26천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우 200호, 젓소 300, 돼지 400, 닭 100</li> </ul>	32천ha	470ha
대 상 농 가	76천농가	900농가	35천농가	-
요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정체결 농지에3년간 벼,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않는 조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이행 여부 점검 및 이행기록 장부기장, 발생분뇨 환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협약 체결 및 마을공동기금 조성, 마을활성화 실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별로 경관보전 계획을 수립, 협약 체결 및 협약내용 준수</li> </ul>
단 가	· 300만원/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 1,300만원/호 한도</li> <li>· 인센티브 : 200만원/호 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밭 40만원/ha</li> <li>· 초지 20만원/ha</li> </ul>	· 170만원/ha
'05예산	791억원	58억원	123억원	6억원

수산물 직접지불제 도입 추진

(1) 배경 및 추진경위

수산분야의 보조금폐지와 관세인하를 포함하는 WTO 도하개발 아젠다가 2001년 11월 출범함에 따라 향후 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산자원관리 및 환경친화적 어업 육성 분야 등을 대상으로 직불제 도입을 추진중에 있다.

(2) 시행준비 및 시행과정

농업은 1994년 UR협상 타결이후 1997년 경영이양직불제, 1999년 친환경농업 직불제, 2001년부터 논농업 직불제를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수산업은 농업과는 달리 직불제 도입 연구범위가 광범위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산분야 직불제 도입은 농업분야의 사례를 감안하여 우선분야를 도출한 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먼저 수산분야 직불제 도입 타당성과 우선시행분야 선정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2001년 부터 2003년까지 한국 해양연구원(KMI)에서 수행하였으며, 2004년 처음으로 생사료 사용으로 야기되는 어장 환경악화 및 자원남획방지를 위해 친환경 배합사료직불제(50억원)를 시범실시하여 양식어장 148ha를 지원하였고, 2005년에는 100억원을 투입하여 282ha를 지원하는 등 2008년까지 총 1,150억원을 투입하여 전체사용량(1,553ha)의 80% (1,243ha)까지 확대 전환할 계획이다.

(3) 앞으로 남은 과제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근해 어업자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과잉 어획노력을 감축하는 새로운 형태의 어업자원관리방안으로 휴어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05년에 1.4억원을 투입하여 연근해휴어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지원조건,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에 관한 설계와 제도 법제화를 추진하는 한편, 도입가능한 다른 직불제도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 나. 다양한 농외소득원 개발

### (1)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활성화

주5일 근무제 실시, 교통망 확충, 노령연금의 정착 등으로 농촌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관광형태도 유명 관광지 위주의 대중관광에서 가족 중심의 체험관광 등 대안관광 형태로 변화되는 추세이며,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 인식확산도 농촌관광 수요증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러한 여건 변화를 이용하여 농업의 부가가치 증진 및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은 농촌을 도시민이 찾아와서 보고, 쉬고, 체험하고, 즐기고, 사가는 활력이 넘치는 체험·휴양 공간으로 조성하고, 친환경농업,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업부가가치 증진 및 농가소득 향상,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행사를 통한 농업·농촌 가치홍보 등으로 설정하였다.

도시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농촌체험 휴양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녹색농촌체험 마을을 2002~2005년까지 123개 마을을 조성하였으며 2006년에는 67개 마을을 조성 중에 있다. 농촌체험마을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6년에는 50개 마을을 대상으로 1촌1인 전문가 컨설팅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한편, 농촌체험 활동 중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보험가입 마을 수는 2006년에는 65개 마을로 증가하였다. 또한, 농산어촌 체험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06년에 100개소를 대상으로 마을사무장을 채용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체험프로그램개발, 운영 등 농산어촌체험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관련부처에서 추진중에 있는 농산어촌체험마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도 주5일 근무제, 전원생활 등 웰빙 문화 확산으로 농촌체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업생산 및 소득기반 약화로 농촌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2002년부터 시작하여 추진 중이다.

2005년까지 총 66개 마을을 조성하였고 2006년에 추가로 34개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민과 관련공무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총 55회 2,557명에 대해 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가주택 리모델링, 테마상품 브랜드화, 빈집활용 도시민농촌생활지원 등 사업 단계별로 추가 사업을 발굴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2009년까지 총 160개 마을을 집중 육성 지원할 계획으로 농산어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시군단위 지원체계 구축, 사업 성장단계별 매뉴얼 개발 지원, 마을 지도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품질관리 프로그램 강화 등을 통해 농촌전통테마마을이 도농교류 촉진과 농촌활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향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사업의 주체 역량 강화를 위해 '중장기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6년에는 동기화(입문)과정, 리더십과정, 사업주제별 특화과정 등 21개 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인원은 2005년 1,300명에서 2006년에는 2,000명으로 확대되었다.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휴양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사1촌운동, 농산어촌체험박람회, 여름휴가 농산어촌고향에서 보내기 캠페인, 농촌문화 체험기 공모, 도농생활체험캠프, 농업인이 뽑은 올해의 도농교류상 시상 등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였다.

1사1촌운동은 2004년부터 농협과 기업·단체 등 민간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범국민운동이다. 2006년 9월까지 12,666건의 1사1촌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교류가 추진되고 있으며, 2006년 실적으로는 농산물직거래 492억원, 일손돕기 158억원, 농촌체험 및 기증 142억원 등 총901억원 수준의 교류활동이 이루어져 도농간 교류

활성화에 큰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농림부를 중심으로 농협, 한국농촌공사, 전경련, 기업체, 마을대표, 학계, 언론계 등 각계가 참여하는 T/F 팀을 구성·운영하여 1사1촌운동이 범국민적 민간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비전 등 이론을 정립하고, 발전전략 및 참여 주체별 역할에 따라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하였다.

또한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를 사단법인으로 허가('06.3)하여 1사1촌 운동의 핵심 조직체로 육성하고 있으며, 농촌사랑지도자 연수원('06.2)을 개원하여 마을 지도자, 기업·단체임직원, 도시 주부 및 청소년 1만명 대상으로 농촌가치와 도농 교류활성화 필요성 등을 교육시켰다.

2007년에 도농교류 페스티벌(농산어촌체험박람회)을 2007.5.2~5.6 기간중 서울 무역전시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동 페스티벌을 개최함으로써 도시민에게 흥미있는 볼거리·체험거리를 제공하여 농업·농촌 문화와 가치에 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도농상생의 공감대를 형성할 뿐만아니라, 마을간·지역간·도시간의 정보 교환 및 벤치마킹 기회의 장을 제공하여 농촌의 농외소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코자 한다.

도시민들의 여름휴가를 농촌으로 적극 유도하기 위해 6~8월까지 농림어업 관련 기관과 함께 '여름휴가, 농산어촌고향에서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농촌에서 여름휴가를 보낸 도시민과 체험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시민의 79%가 깨끗한 자연환경, 주민친절, 체험 프로그램 등 농촌휴가에 만족하고, 재방문의사를 표명하였다. 농산어촌 체험마을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많은 관광객이 증가하여, 여름휴가 고향에서 보내기 공동 캠페인 및 홍보의 성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편의시설 부족, 교통안내 등이 불편함으로 지적되었다.

중·고·대학생,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농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이끌어 내고 농촌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제3회 '나의 농촌문화체험기'를 공모하는 한편, 도시·농촌 초등학교 학생들이 서로 교환 방문



하여 문화체험 함으로써 서로간의 이해를 증진토록 도농생활체험캠프를 운영하였다. 도농교류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등 농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도농교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도농교류 농촌사랑 정부포상을 시상하였다.

농촌주민 스스로 아름답게 가꾼 마을을 평가하는 마을가꾸기 경진대회를 5회째 추진하였으며, 도시민과 출향인사 등을 대상으로 ‘내고향 잠재 자원 개발 콘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농촌마을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민박의 편법운영 방지를 위해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등 관련법령을 정비하였다. 농어촌민박의 범위를 농어촌주민이 거주하는 단독또는 다가구주택으로 한정하고, 농어촌민박 지정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민박의 기준이 되는 규모를 당초 객실 7실이하 기준에서 면적기준 150㎡미만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33㎡이하의 주말주택 및 마을공동 농촌체험시설에 대하여는 농지조성비 감면대상에 포함되도록 농지법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 또한 도농교류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도농교류촉진법(가칭)제정을 검토중에 있다.

## (2) 어촌관광 등 소득원 개발

증가하는 도시민의 관광·레저수요를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부존자원의 개발효과가 기대되는 어촌지역으로 유치하여 환경친화적 생태관광을 통한 국민정서의 함양은 물론 어촌 유희노동력의 고용기회 창출과 어업외소득원 개발, 어촌지역개발을 도모하고자, 1990~1996년까지 67개소에 3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1998년부터는 안정적인 사업의 유도를 위하여 개소당 30억원씩 2개년사업으로 투자하는 어촌휴양단지조성사업으로 전환하여 2001년까지 전남 보성군, 신안군

등 2개소에 60억원을 투자하였다.

또한, 1998년부터는 전국연안 어촌지역의 사라져 가는 전통민속문화를 발굴·보존·전시하여 어촌주민의 정신적·문화적 혜택 제공과 지역간 균등발전을 도모하고, 어업의 발달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친수산, 친해양 교육의 산실을 마련코자 2005년까지 7개 지역에 개소당 60억원씩 3개년 사업으로 어촌민속전시관건립 사업을 추진하여 자연환경과 문화공간을 연계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및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2005년에는 다양한 해양생태와 문화, 수산자원 등을 갖추어 발전 잠재력이 있는 풍부한 어촌·어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어촌·어항법(법률 제7571호/5.31)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162호, 12.1)을 제정하여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2009년까지 추진하는 전국 24개소 어촌관광 거점지역 개발을 위한 기본설계(8개소/22억원)을 완료함으로써 관광 인프라 구축의 사업 착수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최근 어업여건의 변화로 어려움 속에 있는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소득원 개발 차원에서 어업활동의 장(場)인 어촌을 어업체험, 양식체험, 갯벌체험, 바다낚시 등 체험 중심의 21세기형 관광어촌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어촌체험관광마을은 어촌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환경, 인문자원, 산업생산과 연계하여 도시인에게 새로운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토착문화적, 환경친화적 관광마을로 조성하는 것으로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12개 마을을 선정·육성할 계획이며, 2006년에는 강원 속초시 장사동 사진마을 등 17개소에 69억원을 투자하여 관광안내소, 진입도로, 주차장 등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어업인 주도로 운영하게 하여 새로운 소득이 창출되는 활기 있는 선진 관광어촌으로 탈바꿈 시켜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2005년을 어촌사랑의 원년으로 정하고 100사 100촌 자매결연 행사를 계기로 2006년은 400사 400촌 자매결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목표달성을 위하여 수협에 어촌지원 T/F팀을 설치 본격적으로 운영, 자매결연 홈페이지 구축, 우수 추진사례 발굴,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자매결연 업·단체를 국가기관, 공기업, 대기업, 아파트 부녀회, 학교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3) 농공단지조성으로 농어촌지역의 고용확대 도모

2006년에는 28개소에 260억원을 투자하여 8개소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2007년에는 28개소에 314억원을 투자하여 6개소를 완공할 예정이다. 또한 특산물 가공 등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기업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특화단지의 지정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앞으로 지역특화단지의 지원단가 상향조정, 기술경영지도, 판로확보 지원 등을 강화하여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농공단지조성 추진현황

구 분	추진목표	2006까지	2007계획	2008이후
사업량(개소)	400	322	28(6)	72
사업비(국고, 억원)	10,006	6,619	314	3,073

주 : ( )는 완공지구

(4) 농산물가공·특산품 생산의 활성화

2005년말 현재 농산물가공업체 534개소, 특산단지 600개소가 운영중이며 가공업체의 전체 매출액은 2005년에 6,607억원을 기록하여 IMF직후인 1998년의 5,723억원에 비해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가공산업과 특산품 생산 분야에 대해서는 신규지원보다는 기존에 운영중인

업체와 단지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을 내실화하면서 향토성과 지역지명도를 상품화하기 위해 경영지도, 포장디자인 개발, 마케팅 활동 강화 등 소프트웨어 분야의 지원에 중점을 두어나갈 예정이다.

#### 다. 농업경영 위험관리 강화

##### (1)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 (가)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의 지속개선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은 자연재해시 농업인의 실질적인 보험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초기인 2001년부터 지속적인 상품 개선을 해오고 있다. 2006년에도 2005년 사업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 및 농업인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보장수준을 크게 확대하였다.

##### <2006년 보험상품 개선내용>

- 폭풍우 인정기준 완화 : 최대풍속 14m/sec이상 또는 최대순간풍속 20m/sec이상을 최대 순간풍속 14m/sec이상으로 대폭 완화
- 가을동상해특약의 보험기간 연장 : ('05) 11.5일 → ('06) 11.10(5일 연장)
- 단감 낙엽피해 보장기간 연장 : ('05)9월 말 → ('06) 10월 말(1개월 연장) 등

또한,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2005년과 같이 운영비의 100%, 보험료 50%(특별지원 8.4%별도)를 지속지원하고, 보험요율을 2005년 대비 1.06%p 감소한 8.19%로 인하하였다. 이에 2005년 26,335농가보다 3.8% 증가한 27,327농가가 가입하였으며, 가입면적(20,301ha)도 5.8% 증가한 21,469ha을 보험에 가입(가입률 24.5%) 하였다.

<2006년 농작물재해보험 실적>

(06.5.31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2005	2006(계획)	증감(%)
가입실적	가입농가(호)	26,335	27,327	992(3.8%)
	가입면적(ha)	20,301	21,469	1,168(5.8%)
	가입률(%)	23.4	24.5	1.1%P
지원율 및 지원액	순보험료(%)	61.2	58.4	△2.8%
	운영비(%)	100	100	-
	국고지원액	49,371	56,690	7,319(14.8%)

\*주 1) 기금출연금 200억원 별도

(나) 대상품목 및 대상재해 확대

근래 이상기후 현상으로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경영안정장치로서 농작물재해보험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농업인 등의 보험품목확대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2006년 5월부터 “뽕은감”에 대해 주산지인 전남 영암·광양, 경남 하동, 경북 청도·상주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뽕은감은 다른 품목에 비해 재배농가수, 전업화 수준 및 농업인의 보험가입의사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그동안 단감 품목의 보험운영 경험으로 손해평가 및 보험요율 산정에 있어 타 품목에 비해 수월한 부분이 있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05년 국가재보험제도 실시 등 사업안정 기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보험 확대를 위해 2006년 4월부터 농림부, 농업인, 품목별전문가, 보험전문가, 보험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품목개발추진단”을 구성·운영하였다.

“품목개발추진단”에서는 올해부터 “논벼(수도)”의 보험화를 위한 기초통계자료의 수집과 보험화 가능성 타진을 위해 철원, 평택 등 전국 논벼 주산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2006년 7월부터 도상연습을 시작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전 농작물을 대상

으로 보험가능 여부 및 품목별 보험도입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보험화 가능성이 높은 4~5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연구조사 및 상품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다) 농업관련 재해보험제도 일원화 추진

자연재해를 보상하는 농업관련 정책보험(공제)으로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축공제, 풍수해보험(소방방재청) 등이 있다. 위 정책보험들은 각 소관부처별·소관과 별로 구분하여 운용 중에 있어 업무의 효율성 및 시너지 효과가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2006년부터 정책사업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축공제 등 유사사업의 관리 일원화를 검토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론 소방방재청에서 실시 중인 풍수해보험의 농업시설부문에 대해서도 농작물재해보험으로 업무 이관을 협의·검토할 계획에 있다.

앞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작물, 농업시설, 가축 등 농업전반의 자연재해 위험을 관리하는 종합적 경영안정시스템으로의 발전을 검토하고 있다.

(2) 가축공제 확대 추진

가축공제는 안정적인 양축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써 태풍, 화재, 호우 등의 피해를 보는 농가를 중심으로 공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매년 가축공제 가입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축산농가의 가축공제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공제사업자인 농협을 통해 홍보·농가안내 등을 강화하고 2006년 지원예산도 2005년 대비 17.5% 증가한 24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축공제 가입률

(단위 :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P)
소	7.0	7.2	7.3	9.2
돼 지	43.4	49.9	57.6	64.3
말	2.1	1.9	4.9	5.5
닭	17.4	22.3	31.5	32.6

자료 : 농림부 축산국

정부는 가축공제가 축산업 경영 과정에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2006년에는 공제가입 대상 가축을 기존의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에 칠면조와 사슴을 추가하여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가금류에 대한 설해피해 보장 상품 개발 등 가축공제상품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제료 분납 실시 등 농가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면서 공제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축사전기안전점검 및 가축진료사업을 확대 실시토록하여 재해의 사전 예방에도 노력하고 있다.

### (3) 농가부채 경감대책

#### (가) 추진배경

2001년 제정된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부채경감법”이라 함)에 의한 중장기 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금리인하,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지원 등 종합적인 농가부채경감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수입개방 확대 등에 따라 농산물가격은 정체·하락하는 반면, 농자재가격은 급등하여 농가 교역조건이 계속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도·농간 소득격차도 1995년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기존의 부채대책의 상환기간이 비교적 단기여서 농업인이 소득으로 부채를 갚아나가기 어렵고 부채문제를 상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또한, 앞으로도 DDA 협상 등으로 농가소득의 감소·정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부채상환능력이 단기간내 향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과도한 부채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경영을 통해 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농가부채대책 수립 필요성에 따라, 정부는 2003년 4월 농민단체, 학계, 정부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농업인부채대책위원회」 및 「부채대책실무기획단」을 구성, 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장기화, 농업경영회생 프로그램 상설화 등 농업인에 대한 부채대책 추진과제를 논의하였다.

위원회는 농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총

15차례 회의(실무기획단 포함)를 통해 부채경감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2003년 6월 28일 농가부채에 관한 정책건의서를 채택하고 정부에 제출(2003.7.2) 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정부는 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농업인의 상환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능력에 맞는 상환제도를 도입하는 등 농가 스스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기회보장과 상시 경영회생 시스템 마련에 중점을 두고 부채대책을 마련, 국회에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2003.10.31).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부채경감법개정법률안과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동 법률 개정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정책자금의 금리인하시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2001 지원 상호금융대체자금 및 농업경영개선자금의 금리를 6.5%에서 3%로 3.5% 인하하는 내용 및 농업용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 7조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개정안을 수정하여 2004년 2월 16일 의결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되어 2004년 3월 5일 공포된 개정된 부채경감법에 따라 2004 농가부채경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나) 부채대책 내용

< 2004 농부채경감대책 주요내용 >

- ① 중장기 정책자금 금리인하(4%수준 → 1.5%) 및 상환기간연장(5년거치 15년 분할상환)
- ② 2001대책으로 지원한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 금리인하(6.5% → 3%)
- ③ 2001대책으로 지원한 농업경영개선자금 금리인하(6.5% → 3%)
- ④ 2001대책으로 지원한 연대보증피해해소자금 상환기간연장(3년거치 7년 →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⑤ 농업용 상호금융 대체자금 추가 지원(5%, 7조원)
- ⑥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연이율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04지원 2,000억원, '05지원 3,000억원)
- ⑦ 정상상환 및 조기상환 인센티브 지원 확대
  - 정상상환 인센티브 : 정책자금을 부채대책에 의해 상환연기 하지 아니하고 정상상환시 그 상환액에 대하여 납부한 1년치 이자액의 40% 환급(종전 20%)
  - 조기상환 인센티브 : 부채대책으로 상환연기한 자금과 지원받은 자금을 약정당시 상환 기일보다 1년이상 조기상환시 그 상환액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40% 환급(종전 30%)



(다) 부채대책 추진

정부는 농산물 시장개방,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부채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된 부채경감대책 중 농업인의 신청이 필요없는 중장기 정책자금의 금리인하, 2001년 지원 상호금융 대체자금 및 농업경영개선자금의 금리인하는 2004년 3월 5일자로 일괄 조치하였으며, 시행초기에는 2004년 농가부채경감대책을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농업인에 대한 안내문 발송, 농업전문지에 광고게재, 조합별 프랑카드 게시, 리후렛 제작 배포(100만부), 포스타(6,000부) 부착 등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였다.

또한, 보다 많은 농업인이 부채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업인 신청기한을 당초 2004년 5월 31일까지에서 2004년 12월 20일까지(연대보증피해 해소자금 신청은 2004.12.31까지) 연장하여 추진하였다.

아울러, 부채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는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5월 중 일선 현지점검, 정책고객대상(PCRM) 설문조사 등을 통해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04년 5월 29일 2004년 농가부채경감대책 시행지침을 개선·보완하였다.

시행지침 주요 보완내용은 첫째, 농업인이 농업용으로 사용했다는 증빙을 해야 하는 경우를 총부채 1억원초과에서 지원금액 1억원초과로 변경하였고 둘째, 금융자산 확인대상을 배우자와 동일세대내 직계존비속에서 본인 및 배우자로 완화하였으며, 지원금액이 5백만원이하 소액인 경우는 금융자산의 확인을 생략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신청 농업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3개 읍·면 이상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조합의 경우는 지소에서도 부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부채대책 지원금액 5천만원까지는 시·군지부까지 가지 않고도 일선조합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등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심사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2004년 9월 30일에는 상호금융대체자금(7조원) 추가 지원과 관련 그동안 신청 현황에 대한 분석결과 신청후 포기자, 비농업인 신청자 등을 제외할 경우 신청액의 70~80%가 지원되는 과거 사례 등을 감안, 지원대상을 확대 하는 등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농업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부채경감대책 지원기준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였다.

첫째, 상호금융 대체자금 지원대상금액('03년말 대출잔액~'99년말 대출잔액)이 1,000만원 이하인 농업인에 대하여 지원한도를 70%이내에서 100%까지로 확대 하고 지원대상금액 1,000만원~1,750만원인 농업인은 형평성 차원에서 1,000만원 초과 금액의 30%를 추가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과거 부채대책자금(상호금융대체자금·농업경영개선자금) 지원을 받지 못했던 농업인은 2000~2003년 중 대출받은 농업용 상호금융 대출금 2003년말 잔액의 70% 까지를 추가 지원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한편, 농업경영회생자금(계획 2,000억원, 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지원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대상 농업인 자격완화 및 지원대상 자금범위를 확대하는 시행지침 개정을 하였다.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대상 농업인의 자격(영농규모, 부채규모)를 전업농 규모의 2/3이상인 농업인에서 1/2이상인 농업인으로, 농업용 총부채 5,000만원이상인 농업인에서 2,500만원이상 농업인으로 대폭 완화하였으며,

지원대상 자금범위를 농업인 신청일 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2년전부터 상환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에서 신청일 기준 상환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으로, 향후 1년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원리금에서 향후 2년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원리금으로, 자금 지원 신청인인 연대보증인이 2002.1.1일 이후 대위변제한(할) 농업용 자금에서 2001.1.8이후 대위변제한(할) 농업용 자금으로 확대 하였다.

또한,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은 일선조합에도 경영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농업인에 대한 신속한 심사·지원이 이뤄지도록 시행지침을 보완하였다.

2004년 개정된 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법에 따른 부채경감대책자금 대출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다. 당초 대출기간은 2005년 8월 31일까지였으나 농민단체, 대출취급기관의 건의를 수용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중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농업인에게 한하여 2005년 10월 31일까지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연장하였다. 농가부채대책 지원자로 선정된 농업인중 기존의 연체자금해소 및 각종 서류 미비로 인해 2005년 8월말까지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에 실질적인 경영회생 기회를 주었다.

부채대책 자금별 농업인 신청 및 지원 현황(2005.10.31일 기준)

(단위 : 천건, 억원)

대 상 자 금	지원규모	신청 현황		지 원 결정액	지원액 (C)	비율(%)	
	(A)	건수	금액(B)			(B/A)	(C/B)
계	153,435	954	158,822	97,985	81,810	103.5	51.5
정책자금 상환연기	80,409	422	79,801	47,802	40,187	99.2	50.4
2004상호금융대체자금	66,500	513	73,731	45,335	37,925	110.9	51.4
연대보증해소자금상환연장	4,526	14	3,303	2,938	2,059	73.0	62.3
농업경영회생자금	2,000	5	1,987	1,910	1,639	99.4	82.5

쌀협상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2006년 농가부채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김우남, 김낙성, 유선호의원이 각각 농어업인부채경감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여 2005년 11월 2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위”라 한다)에 상정하였다.

그러나 2005년 11월 25일 농해위 법률심사소위에서 3개법안을 폐지하고 농해위 위원회 대안으로 2001년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의 상환연기를 채택하여 농업인들이 과도한 부채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경영을 통해 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농해위 대안으로 상정된 부채경감법은 신속하게 법사위 의결('05.12.7) 및 국회 본회의('05.12.8)에 상정되어 의결을 거친 후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05.12.15)되었다.

정부는 국회에서 이송된 부채경감법을 2005년 12월 20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심의를 마친 후 2005년 12월 29일 공포하였다. 개정된 부채경감법에 따라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5.6조원에 대하여 부채경감대책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6부채경감대책 주요특징은 2001년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의 원금 10%이상을 상환기일까지 상환할 경우 5년 분할상환(3%), 그 외는 3년 분할상환(5%) 조건으로 연장되며, 부채 상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상·조기상환할 경우 인센티브를 병행하여 제공하고 있다. 다만, 예금 등 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부채경감법 및 시행지침에 명문화하여 그 동안 부채경감대책은 무분별한 지원이라는 비판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

정부의 농가부채경감대책을 몰라 신청을 못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전 대상농가에 개별안내장 발송 및 전화안내, 조합별 프랑카드(4,050개) 게시, 리후렛 및 소책자 제작 배포(100만부), 포스타(20,000부) 부착, SMS(문자메세지)송신 등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였다.

또한, 부채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5월초 일선 지역 현지점검을 통해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인의 입장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한편, 2006년 부채대책 추진유공자를 엄격히 선발하여 장관표창을 수여하는 등 부채대책추진에 진력한 결과 2006년 11월 30일 현재 순지원대상 37,944억원중 37,039억원이 신청되었으며, 이중 92%가 5년 분할상환 조건을 선택하고 있다.

#### (4)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실시

농지은행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은 연체로 농지가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혀있어 경매 등을 통하지 않는 한 매각이 어렵고, 담보농지 경매시 유찰, 저가 낙찰되어 재산상 손실이 불가피한 농가에게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연체, 재해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갚은 후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써, 매입농지는 당해 농가에 장기 임대하고, 임대기간중 환매권을 보장한다.

지원대상은 농업재해(피해율 50% 이상) 또는 연체(50백만원)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촌공사 지사에서 경영위기정도, 회생가능성, 영농규모 등을 종합평가하고, 농지은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여 매매·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매입대상은 논, 밭, 과수원 등 농지로 매입가격 및 환매가격은 감정가격으로 정하며, 매입농지의 임대기간은 5년(3년 연장가능)이며, 임대료는 매입가격의 1%이내에서 매입단가에 따라 차등 요율을 적용한다.

또한, 지원농가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실태를 파악하고, 경영회생능력 제고를 위해 지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원리금 상환유예 및 금리인하 등 현행 금융위주의 지원방식으로는 연체농가의 실질적인 회생에 한계가 있어 농지은행제도의 일환으로서 2006년에 시범사업을 실시중이다.

연체로 농지가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혀있어 경매 등을 통하지 않는 한 매각이 어렵고, 담보농지 경매시 유찰, 저가 낙찰되어 재산상 손실이 불가피한 농가에게 경영회생의 기회를 줄 걸로 기대된다.

#### (5) 산림재해공제제도 도입 추진

1998년 이후 대형산불의 빈번한 발생으로 피해규모가 대형화되어 임업인의 경영 불안의 주 요인으로 대두 되고 있다. 이러한 경영불안 요소를 해소하여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기하고자 임업분야에 산림재해공제 도입을 위해 산림청에서는 보험개발원 등을 통하여 정책보험으로서의 산림재해공제의 제도화 가능성 분석 및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또한 제도의 안정적 도입과 차질없는 준비를 위하여 산림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산림조합, 학계, 임업계, 보험업계 등을 망라하는 「산림재해공제도도입준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그러나 2003년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도입준비위원회의 검토과정에서 보험성립의 필수요건인 피해율 및 입목표준 금액 산정 등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추가 보완용역을 실시하고 산림재해공제의 단계적 도입을 위해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2005년에는 밤의 농작물재해보험 도입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밤의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타당성과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시행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며, 2006년에 뚝은감 주산지 5개 시군(광양, 영암, 상주, 청도, 하동)을 대상으로 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6) 어가경영안정대책 추진

새로운 해양질서 정착과 WTO-DDA협상, FTA 체결 확산에 따른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수산물의 국내 수요가 늘어나 수입이 증가하는 한편, 국제 유류가의 급등으로 어업용 유류가격 또한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어업비용이 크게 상승하여 우리나라 수산업의 경영여건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나 자원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 및 개발이 필요한 실정에 있다.

이와 같이 국내·외적인 요인들로 인해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2001년에 연리 6.5%('04.3.5부터 3.0%), 5년 후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원된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을 지원받을 당시 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면 그 잔액에 대해 연리 3.0%로 앞으로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정상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 연리 5.0%로 3년간 분할 상환토록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05.12.29)」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어업인으로부터 신청받아 연장 처리하고 있다.

또한, 시중은행의 저금리 기조에 따라 어업 경영안정을 위해 2006년 1월 1일부터

연리 3.0%를 초과하는 종전 4.0%~5.5%의 수산정책자금 대출금리를 어업인은 연리 3.0%로, 비어업인은 연리 4.0%로 인하하였고, 태풍·호우 등 재해복구용 융자금에 대해서는 연리 1.5%(종전 4.0%)로 대폭 인하·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리 15~18%로 적용해 오던 수산정책자금의 연체이자율을 2006년 8월 1일부터 연체 기간에 따라 그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연리 12%를 적용하고, 31~90일까지는 13%를, 91일 이상은 14%를 적용하도록 연체 기간별로 차등하여 인하·시행하였다.

자연재해 및 어·패류 질병 등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2006년에도 수산업경영회생자금 200억원(연리 3%, 3년 거치 7년 상환)을 지원하고, 출어경비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영어자금을 2005년 보다 1,000억원 늘어난 1조 5,05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차보전금 843억원을 활용하여 출어자금, 재해복구 및 부채대책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등 금융비용 부담경감을 통해 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 (7) 어업인 정책보험사업 운영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제도 도입

##### (가) 어업인 정책보험사업 운영

2004년에는 정책보험 도입 초년도로서 어업인의 보험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고 유가인상 등에 따른 출어경비의 증가 등으로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느껴 소형어선의 보험가입율이 저조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시행 초년도 발생한 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의 보완을 위하여 “어업정책보험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일시조업에 따른 단기가입제도, 당연가입 기준의 재설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어업인의 보험료에 대한 부담경감을 위해 10톤미만의 순보험료 국고보조율을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고 운영사업비의 국고보조율을 60%에서 70%로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국고보조율은 톤급에 따라 4~8% 확대되어 어업인들이 부담하는 부담액은 경감되었다.

(나) 양식재해보험제도 도입 추진

양식수산물은 1990년대 이후 양식기술의 안정화 및 양식어가의 대형화로 사회적·경제적 비중이 점차 높아져 가는 추세이며, 정부에서는 태풍과 적조 등의 어업재해가 발생시에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수산생물에 대한 복구비는 종묘대금 등으로 지원됨에 따라 원상회복에 한계가 있다. 또한 양식수산물은 천재지변에 의한 자연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피해예측이 곤란함에 따라 시장경제하에서의 보험도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책보험제도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가가 관여하는 양식재해보험제도 도입을 위하여 2002년 3월부터 2004년 7월까지 2개년에 걸쳐 「양식재해제도의 도입 및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06년에는 양식재해보험의 위험률 검증 및 도입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가로 실시하고, 어업인 및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 후 「(가칭)수산물양식재해보험법」을 2007년 상반기까지 제정할 계획이며, 2008년부터는 일부어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도입할 계획으로 있다.

## 8.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 지속추진

2006년에는 시범사업 2년차 계속사업으로 그 동안의 사업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한 사업단에 인센티브를 배정하고 시범사업에 따른 사업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평가 시 드러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사업단에 통보하는 한편 차질 없는 예산집행과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점 지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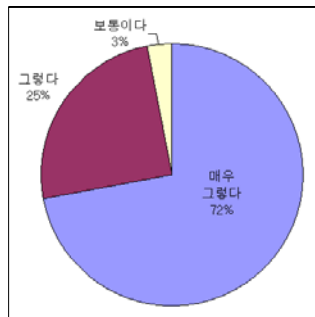
2006년도 사업추진 상황

일 시	내 용	비 고
'06.2.13~2.14	○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단 혁신활동 평가 - '05년 사업추진 절차 및 내용위주로 평가 실시	
'06.3.28	○ 지역농업클러스터 중장기 발전방안 협의 - 도 농정과장 및 중앙농산업혁신전문가위원회 위원 등	
'06.5.1~5.2	○ 지역농업클러스터 워크숍 - 도 농정과장 및 20개 사업단장 등 140여명 참석 - 사업단별 추진실적 및 '06 사업계획 발표 등 본격적 사업추진 점검 및 독려	
'06.6.21~6.22	○ 지역농업클러스터 실무 워크숍 - 농림부, 농관원, 20개 사업단 실무자 등 50명 참석 - 사업추진 점검 및 사업비 집행 독려, 평가방향 및 사업 발전방안 등 논의	
'06.9월	○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단 중간평가 - 사업 추진 준비 및 집행과정의 충실도 평가	
'06.6월, 10월	○ 클러스터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지도	
'06.11월	○ 농업인의 날 행사 및 지역혁신박람회 참가·홍보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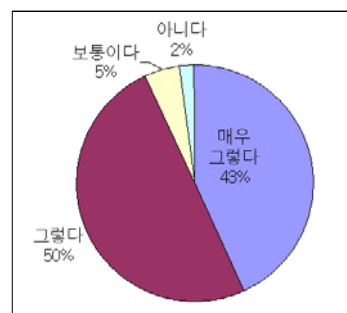
지난해 국무총리실의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농림사업 중 클러스터 사업이 최우수 평가를 받은 바 있고 20개 시범사업단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설문조사를 실시('06.3)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단이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필요성>



<타 사업과의 차별성 여부>



클러스터 사업의 사업추진상황을 일제 점검하여 활발한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시범사업단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단의 혁신활동, 사업추진역량과 농가 조직화를 통한 산·학·연·관 네트워크구축 실태를 평가하여 인센티브(20.9억원)을 추가로 지원하였다.

= 평가결과 =

- 최우수 : 영동농산업포도클러스터 사업단(6.4억원)
- 우수 : 경북한우, 안성마춤(7억원/3.5억원×2개소)
- 장려 : 보성녹차, 하동녹차,강원한우하이록 (7.5억원/ 2.5억원×3개소)

사업단별 연차별 지원 계획

(단위 : 백만원)

도	사업명	연차별 지원계획				비고
		2005	2006	2007	합계	
경기	안성마춤클러스터	550	1,000	1,506	3,056	
	전통한과마을클러스터	550	570	119	1,239	
강원	한우 하이록클러스터	600	780	969	2,349	
	백두대간농업포럼클러스터	600	600	883	2,083	
충북	포도 농산업클러스터	550	660	760	1,970	
	친환경 청정고추클러스터	550	860	824	2,234	
충남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클러스터	550	760	801	2,111	
	한산모시 클러스터	550	630	606	1,786	
전북	장수 Mt.Apple Power 클러스터	550	690	668	1,908	
	돌고도는 환원순환농업클러스터	550	750	1,070	2,370	
	낙농(치즈)클러스터	550	1,000	1,457	3,007	
전남	보성녹차클러스터	550	1,100	1,623	3,273	
	과학농업클러스터	550	670	683	1,903	
	친환경쌀 클러스터	600	1,060	1,318	2,978	
경북	경북 한우클러스터	700	1,650	2,000	4,350	
	풍기 인삼클러스터	550	870	860	2,280	
경남	친환경쌀 클러스터	600	890	1,004	2,494	
	하동녹차클러스터	550	1,170	1,105	2,825	
	양돈산업클러스터	600	1,140	1,296	3,036	
제주	감귤클러스터	700	550	748	1,998	
	용역비, 중앙·도청 경상비	450	600	500	1,550	
	인센티브	-	2,000	2,100	4,100	
합계	20개 사업단	12,000	20,000	22,900	54,900	

주) 도 경상비는 가 도에 30백만원 배정, 단 제주는 10백만원 배정

정부에서는 시범사업단 모두가 성공하기를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사업추진 속도나 추진상황을 감안하면 사업성과가 3년차('07)부터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금년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매년 11.11)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의 지역혁신박람회('06.11.7~11, 광주)에 클러스터 사업단별 부스를 설치하여 그 동안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 주었다

#### ● IV. 품목별 경쟁력 강화 시책

1. 쌀산업 대책 추진 .....	159
2. 채소·원예산업 .....	165
3. 축산업 .....	170
4. 임업 .....	188
5. 수산업 .....	224

## IV. 품목별 경쟁력 강화 시책

### 1. 쌀산업 대책 추진

#### 가. 양정제도 개편

WTO출범이전에는 국내생산량의 30% 수준에 달했던 정부수매량이 WTO농업협정의 국내보조감축 이행계획에 따라 크게 줄었으며, DDA농업협상 이후에는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DDA·쌀협상으로 식량정책의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 개정』('05.7.1시행)하여 50년간 지속되어 오던 추곡수매제(국회동의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등 국내외적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장상황에 맞는 정책으로 제도를 전환하였다.

또한, DDA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며, 현재의 쌀관련 직접지불제와 추곡수매제로는 쌀값하락에 따른 농가소득안정에 한계가 있어 『쌀소득 등의보전에관한법률』을 전면개정('05.7.1 시행)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쌀값이 하락할 경우 목표가격과 당년 쌀값과의 차이의 85%를 보전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시행하여 쌀값 하락시에도 쌀농가의 소득 안정을 유지하게 되었다.

고품질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고품질쌀 판별능력이 부족한 점과 밥쌀용 소비자 시판 등을 감안, 양곡표시제도 강화 등 시장관리를 통해 고품질쌀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시장여건을 조성하였다.

#### 나. 수급전망 및 정책방향

2005년 양곡연도말 재고량은 대북지원(국내산 278만석), 특별재고처리(주정용) 등으로 2004년말보다 약 23만석 감소한 567만석 수준('04 : 590만석)으로 전망되며,

앞으로 소비감소 등의 영향으로 공급과잉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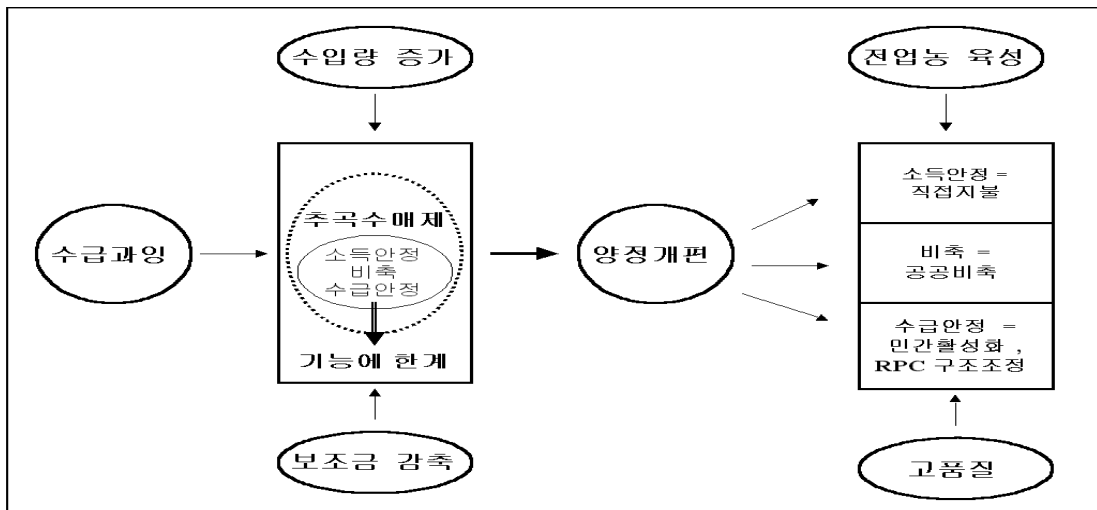
또한, 2004년 쌀협상에 따라 의무수입물량(TRQ)은 2005년 225천톤에서 2014년 408천톤까지 증량되고, 그 중 소비자시판은 2005년 TRQ의 10%에서 2010년까지 30%로 증가되어 시장개방폭은 앞으로 더욱 확대된다.

정부에서는 2005년도가 양정제도 개편 첫해임을 감안 농업인의 수확기 벼 판매가 원활히 되도록 하기 위하여 수확기 시장안정대책 추진하였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① 공공비축 매입물량을 기존 계획보다 100만석 많은 400만석으로 확대하고 비축 물량의 100만석 추가매입·격리조치, ② 2006년 정부 일반공매 지양 공표, ③ 2004년산 지역농협 재고(63만석)를 시장으로부터 격리 및 재고축소(당초 재고전망 1,060만석→567만석으로 축소) ④ 공공비축 물량중 산물벼 또는 포대벼를 농가희망 대로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최근의 쌀 소비량 감소, 쌀 재고증가 등의 국내 수급여건 변화와 대외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하며 농가소득을 안정시키는 한편, 당면한 미곡유통의 안정화를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강구·추진할 계획이다.

### 양정제도 개편

- ◇ 쌀농가의 소득안정, 식량안보목적의 비축, 수급조절 기능을 추곡수매제도가 담당해왔으나,
- ◇ 앞으로는
  - ① 소득보전방안을 통한 직접지불로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고,
  - ② 식량안보목적의 비축은 공공비축제로,
  - ③ 수급조절은 민간 수급조절기능 활성화로 달성할 수 있도록 양정제도를 개편하였다.
- ◇ 아울러, 전업농의 규모화와 쌀 고품질화로 쌀산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다. 민간유통기능 강화

벼의 수집·건조·저장·가공 및 포장과정을 자동화시설로 일관처리 함으로써 처리비용 절감과 미질 향상 등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1991년부터 미곡종합처리장(RPC : Rice Processing Complex) 사업을 시작한 후 2005년말 까지 총 8,432억원을 투자하여 쌀 주산지에 RPC 328개소, 건조·저장시설(DSC : Dry and Storage Center) 689개소를 설치하였다.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은 관리비용·노동력 절감 및 지역별 특색에 맞는 쌀 브랜드화 촉진, 민간유통기능 활성화를 통한 수확기 쌀시장 안정 등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RPC간 과당경쟁·원료곡의 고가매입 및 경영효율화 노력 부족 등으로 적자 RPC가 증가하는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2002년부터 신규 RPC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부족한 건조저장시설(DSC)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사업자의 DSC 지원조건을 2004년부터 융자지원에서 보조지원으로 전환하여 생산 자단체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2006년도에는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을 균특회계에서 농특회계로 전환 하고 사업량을 2005년에 50개소에서 2006년도는 110개소로 대폭 확대함과 지원 단가도 4.5억원에서 5.5억원으로 민간사업자에 대한 보조율도 30%에서 40%로

향상하는 등 지원조건을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RPC 부실 경영이 지속될 경우, RPC의 벼 매입능력 저하로 인한 수확기 가격하락 및 농가의 벼 판매 어려움 등 쌀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미곡종합처리장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다.

2004년부터 RPC에 대한 정부지원을 선 평가, 후 지원체제로 개편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정부지원을 원하는 모든 RPC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영우수 RPC 및 구조조정 RPC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2005년부터는 경영부실 RPC는 자율적인 통·폐합을 유도하여 규모화 및 책임 경영 체제 확립을 통한 RPC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통합RPC에는 정부 지원을 집중하여 조기 경영안정을 유도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RPC 경영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RPC 경쟁체제 강화, 수탁제 시범실시, 시설확충, 쌀 브랜드 육성대책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 라.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 촉진

1990년대 후반부터 쌀 소비량 감소는 지속되는 반면, 소비자의 고품질·안전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 쌀의 완전미율 향상, 단백질 함량 저하 등 품질은 향상되고 있으나, 정부보급중 공급비율이 35% 수준으로 낮고 수확후 건조·저장·도정 및 유통관리 미흡 등으로 대외 품질, 가격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농업인들의 더 많은 노력들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 따라 쌀 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2002년부터 고품질 쌀 생산·유통대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동안 우리쌀 품질 향상을 위해 재배관행을 개선하고, 가공·유통단계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도 지역브랜드 수준이며 같은 품종을 같은 지역에 재배할 경우에도 품질에 차이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추진한 대책을 바탕으로 2005년부터는 본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2010년까지 고품질 쌀 생산·



유통대책 road map을 정하고 단계별, 분야별 사업을 추진기로 하였으며, 고품질 쌀 생산·유통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진청, 지자체, 농협 등 관련 기관·단체와 「고품질 쌀 생산·유통 대책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고품질쌀생산팀 등 6개반의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쌀 품질고급화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수입쌀 시판대응으로 고품, 운광벼 등 최고품질의 종자 25톤을 필리핀 소재 국제미작연구소에서 해외 증식하여 2006년에 농가에 조기 보급하였고, 최고품질 품종을 2009년까지 9~10품종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계 최고수준의 품질기준을 설정하여 2005년부터 탐라이스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성공시키는 등 고품질 쌀 생산기술을 중점 보급하고 있다

#### 마. 쌀소비 촉진 전개

쌀소비촉진 홍보사업은 2001년까지 연이은 풍작으로 쌀 재고량이 증가하는 반면, 식생활의 서구화로 쌀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미래의 쌀소비 기반을 구축하고 쌀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충격 완화와 국민건강관리 차원에서 쌀중심 전통식단을 권장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전개하게 되었다.

쌀소비촉진 홍보는 쌀 소비 잠재력이 높은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20~30대 젊은 주부를 주대상으로 하여 쌀의 이미지제고를 위한 공익적인 광고와 쌀소비촉진 캠페인을 중심으로 하는 단기성 홍보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쌀과 밥에 대한 인식변화 유도를 위해 젊은층을 대상으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유명축구선수와 방송 아나운서, 문화계의 대표적인 장인 등을 러브미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TV-CF 공익광고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였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지속적·집중적으로 실시한 러브미광고로 젊은층과 주부들에게 우리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었고, 러브미로고가 국가 브랜드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러브미 홍보는 2002년 정부업무평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2003년에는 대한민국 광고윤리대상 우수상, 일간스포츠 광고대상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였다.

2003년부터는 러브미 공익광고와는 별개로 시중유통 브랜드 쌀 평가, 농촌체험 캠프 실시 등 단기 쌀 소비촉진 홍보 캠페인을 다양하게 전개하였다.

2003년에 처음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실시한 시중유통브랜드쌀 평가는 쌀의 인지도, 판매량 등을 기준으로 시·도에서 51개 브랜드를 추천받아 주요미질 구성요소인 품위·품종혼합율·식미 등 품질을 평가하고 소비자패널에 의한 소비자만족도를 평가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우리쌀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대하고 브랜드쌀의 품질향상을 촉진시켰다.

2006년에는 시·도, 곡협, RPC협회 등에서 50개 브랜드를 추천받아 4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품종혼합율 및 소비자만족도는 전년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성적이 우수한 12개 브랜드를 선정하였다.

<12개 우수브랜드>

- ① 한눈에반한쌀(최우수/전남) ② 상주풍년일품쌀골드(우수/경북) ③ 김포금쌀(경기)
- ④ 왕건이탐낸쌀골드(전남) ⑤ 동강드림생미(전남) ⑥ 에머니티서천쌀미감쾌청(충남)
- ⑦ 의성황토쌀(장려/경북) ⑧ 안성마춤쌀HeadRice(경기) ⑨ 사계절이사는집(전남)
- ⑨ 프리미엄호평(전남) ⑪ 생거친천쌀(충북) ⑫ 청원생명쌀(충북)

또한 우리쌀 서포터즈 가족쌀사랑체험교실을 실시하였다. 가족쌀사랑체험교실은 도시거주 초등학생 자녀를 둔 도시가족 80가족 326명을 대상으로 1박2일간 실시하였으며, 가마솥밥짓기, 인절미만들기, 짬궁예, 전통놀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한편, 지역단위로 특색있는 쌀소비촉진 홍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자체 홍보사업을 평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KBS 설 특집다큐멘터리 “세계인의 건강 밥상 쌀” 방영과 “대한민국 대표에너지 쌀”이라는 제목으로 TV를 통한 방송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그 밖에도 전문가단체에 의해 한국인의 식미와 건강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 2. 채소·원예산업

### 가. 품목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 수립

지역별 생산기술이나 경영능력이 높은 우수농가를 발굴, 자료를 축적하여 일반 농가들이 쉽게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배·시설 채소·꽃 등은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며, 감귤은 생산자 조직을 통한 생산조정 및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고추·마늘·양파 등은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육성하여 생산비 절감 및 자율적 수급조절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 나. 품목별 주요 추진계획

#### (1) 채 소

##### (가) 노지채소

노지채소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199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채소수급안정 사업을 시행 초 무·배추 품목에서 고추, 마늘, 양파, 당근 등으로 품목을 확대하였으며, 현재 전체 채소생산량 10% 수준의 계약재배 사업물량을 원활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농협 등에 자금 지원을 확대해 향후 2013년까지 23% 수준으로 계약재배 물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노지채소 계약재배 물량에 대하여 운용해 오던 최저보장가격제도는 개방화시대에 맞는 계약재배안정화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시범사업('06~'07)을 실시하고 있고, 계약재배사업 주체를 사업농협중심에서 가공업체, 대형유통업체 등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생산계획 단계부터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주요 농축산물 28개 품목에 대한 관측정보를 제공하고, 관측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표본농가 11,451호 및 모니터 요원을 1,155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품목별 수급모형 및 단수예측 모델

개발 등 과학적 선진 관측기법을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농가의 생산·출하 의사 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를 적기에 제공토록 하고 있다.

또한 2000년부터는 생산자단체의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조금을 조성하는 품목별 생산자단체에게는 정부가 일정률(1:1 매칭펀드)의 자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시행 초년도 2개 품목이던 것이 2006년 21개품목으로 확대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자조금 단체수를 늘려 정부 주도의 수급조절 제도에서 생산자단체가 주도적으로 농산물 판로 확대와 수급조절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나) 시설채소

1990년대 초반부터 시설현대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시설원에 작물의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시설채소를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1997년 38백만불에 불과하던 채소류 수출이 2005년 138백만불로 증가하였다.

기 지원된 시설원에 경영체들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농업기반공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시설원에 중앙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기술·경영정보를 제공하고 현지순회 지도로 시설원에 경영체의 기술 및 경영능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등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해가고 있다.

또한, 다양한 지역별 기후 및 작물생육에 적합한 10여종의 온실표준설계도를 개발·보급하고 산·학·관·연 합동으로 현장위주의 실용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오이, 파프리카, 토마토 등 수출유망 품목에 대해 일본을 수출전략 시장으로 중점 개척하며 수출물류비 및 수출 수매지원 자금을 확대하는 등의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하고 있고,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서 적극적인 시장개척과 해외 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시설채소류의 생산과잉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2001년부터 오이, 호박, 가지 등

시설 채소에 대해서도 수급안정제도를 도입한 후 2002년에는 토마토, 풋고추를 추가하는 등 연차적으로 대상품목과 사업규모를 확대하였으며, 2006년 자금규모는 2,222억원이다.

## (2) 과 수

1994~1999년까지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을 통하여 동일 과종 재배면적 20ha이상인 생산자조직 및 회원농가에 관배수 시설, 고성능 방제기, 비가림시설, 품종갱신, 키낮은 밀식사과원조성 등 생산기반시설과 저온저장고, 집하장, 선과장 등 산지유통시설 기반확충을 지원하여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을 도모하였으며, 2000년부터는 그동안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산지원되던 원예특작분야 사업을 통합하여 농업경영체 스스로의 필요와 판단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사업으로 전환하여 농업경영체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업체계를 개선하였다.

고품질 과실 생산 및 과실판매촉진사업 지원을 통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판매촉진행사의 확대로 해외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수출시장 다변화 등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추진과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한 해외시장 정보수집과 수출협의회를 통한 수출업체 애로해소 등 수출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5년 과실 수출은 처음으로 1억불 넘어서 121백만불을 기록하였다.

1990년대 후반까지 총생산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보여 왔으나, 최근 과잉생산, 소비감소 등으로 정체상태이며, 과수농가 247천호 중 전업농 수준인 1.5ha이상 농가는 7.3%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겸업농으로 호당 평균 0.7ha의 영세한 영농규모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며, 과수는 타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편이나 농가간 재배기술 수준의 편차가 커서 품질에 따른 가격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농가간 소득격차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산과실의 소비는 과채류

등과의 소비대체로 정체상태인 반면 과실 수입은 증가하고 있어 공급과잉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칠레 FTA, DDA 등 개방에 대비하여 과수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최적 영농규모와 기술력을 갖춘 농업인이 고품질생산을 주도하고, 품목별 생산자조직이 산지유통 및 자율수급조절의 핵심주체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향후 7년간 조성될 FTA기금 1조 2천억원을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과수농가 및 조직에 집중지원하고 고품질 생산과 유통을 주도할 핵심 생산자조직을 집중 육성하여 성공모델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투융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특성이 반영되도록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품목별 조직화가 촉진되도록 개별농가 단위의 분산지원 보다는 조직 중심으로 고품질 생산·유통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기본계획의 구체적 실현방안은 첫째, 생산과 유통을 주도할 품목조직을 육성하고, 산지유통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전문농협 육성과 품목연합회 활성화 등을 뒷받침할 수 있게 추진하고, 소비패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장교섭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지유통의 규모화·전문화·시설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의 권역별 산지유통시설 배치계획에 따라 거점산지유통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공동마케팅 등 유통조직화를 통하여 현대화된 생산·저장·가공·유통을 실현토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품목조직 중심의 자율 수급조절체계 정착을 위해 품목조직 자율의 유통협약과 명령제를 적극 지원하고, 자조금과 유통활성화 자금지원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소비촉진 및 출하조절 등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둘째,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안전 생산을 뒷받침할 시설 및 기술을 보급한다.

품질로써 경쟁이 가능하도록 키낮은 사과원, 포도 비가림, 참다래 방풍시설, 관배수시설 등 품목별 핵심 고품질 생산시설에 중점지원하고, 품질보증 우량규격 묘목의 생산 및 유통체계가 정착되도록 묘포장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정보 등 다양한 관련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품목별 기술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애로를 해소할 기술개발 및 보급체계를 상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고품질 과실의 안정적인 수출체계를 정착시킨다.

과실원예전문생산단지 57개소의 생산과 출하 기반을 정비하고 물량보다 품질위주의 고가전략으로 수출국 주류시장을 개척하며, 동 단지에 대하여 수출컨설팅,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최적영농규모를 갖추고 기술농업을 실천하는 선도농을 육성한다.

한·칠레 FTA발효로 관세가 철폐될 시설포도·복숭아·키위 재배농가중 희망농가에 대하여는 폐업을 지원하고, 수급분석을 바탕으로 적정재배면적이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규모화를 위해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선도농가에는 장기저리자금을 지원하고, 재배보험을 확대하여 경영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 (3) 화 훼

일관 생산·선별·수송·수출이 가능하도록 집단화된 화훼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산지유통전문조직을 통해 생산·출하 등을 자율 조절토록 유도하고 있다.

대도시 법정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을 활성화하며, 규격출하품 포장재 지원 등 규격출하를 확대하고 화훼공판장에 유통정보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유통정보 수집 및 분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전자상거래 확대 등 유통의 효율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고품질 품종개발 및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3. 축 산 업

#### 가. 한우산업

농가의 경영안정과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및 품질고급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한우 의무자조금제를 시행하여 국내산 한우의 우수성 홍보와 소비촉진 활동을 추진하였다.

##### (1) 한우번식기반 유지·강화

2001년 생우 및 쇠고기의 수입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소값 안정 및 한우번식기반을 유지하여 개방이후에도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06년에는 121천농가, 722천두가 가입하여 전체 가임암소 사육두수의 약 90%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 (2) 한우고기 품질고급화

수입쇠고기와의 품질차별화를 위하여 혈통등록, 도체정보수집 등 한우 개량자원 확대와 효율적인 개량정보의 수집·활동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초음파 단층촬영 기술”, “유전자 분석기술” 등 첨단기술의 현장 적용을 통한 한우고기의 품질고급화를 촉진하고 있다.

아울러 농가의 거세확대를 통한 품질고급화 촉진을 위해 2000년 지원한 거세장려금(20만원/두)은 2003년 6월까지만 지급하고 2004년 7월부터 품질고급화장려금으로 전환하여 1등급이상 등급판정을 받은 거세우를 대상으로 10~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규모화·전문화된 생산조직을 중점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농·축협 조합, 영농조합법인 등 전문 경영체를 브랜드축산물 생산·유통사업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고, 소규모 사육농가는 브랜드 경영체를 중심으로 조직화하여 체계적인 가축개량과 통일된 사양관리프로그램으로 고품질의 균일한 한우고기를 생산하도록 유도함과 아울러, 유통업체 등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경영안정 도모를 추진하고 있다.

### (3) 소비홍보 및 산지소값 안정대책

국내산 한우고기의 소비를 촉진하고, 한우농가에 대한 정보 제공 등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우 의무자조금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거출된 한우자조금을 활용하여 TV 공익광고 제작·방영, 114안내 활용 광고, 소비촉진 이벤트행사 실시, 유통감시단 설치, 한우농가 계도·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한우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였다.

한편,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라 산지소값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하여 홍수 출하 및 송아지 입식자제 등 홍보와 교육을 병행 추진하였다.

## 나. 낙농산업

우유 수급안정을 위하여 원유 생산 쿼터제 지속 정착 유지와 소비촉진 활동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 (1) 사육여건 및 사양기술 향상 등으로 생산성 증가

생산비가 2004년 481원/kg에서 2005년 469원/kg으로 2.5% 감소된 반면, 사양관리 개선과 젖소개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05년 두당 산유량은 8,097kg으로 전년에 비해 2.6% 증가하였다.

앞으로도 휴경농지에 사료용 총채보리·호맥 재배를 확대하는 등 조사료 생산 기반이 확충되도록 하고, 젓소 산유능력 검정 참여율 확대 등 젓소 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 (2) 우유수급안정 추진

원유 생산량이 정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시는 우유’의 소비감소로 인해 공급 과잉구조가 지속되고 있어 원유 생산 쿼터제가 점차 정착됨에 따라 원유 수급은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2,229천톤의 원유가 생산되어 1,906천톤은 원유로 직접사용(백색시유 1,327, 가공시유 217, 유제품 362)하고, 나머지 323천톤은 분유로 가공하여 전년 보다 잉여량이 3.6% 감소하였으며, 낙농진흥회의 경우 601천톤을 집유하여 489천톤은 정상가격으로 유업체에 계약 공급하고, 나머지 121천톤은 치즈·분유 등 용도별로 공급함으로써 잉여량이 전년 보다 7.4% 감소하였다.

한편, 2005년 1월부터 낙농진흥회 농가가 납유한 원유의 체세포 검사성적이 2회 연속 75만개/ml를 초과할 경우 당해 유대 정산기간인 원유단가를 잉여원유차등 가격제시행규정에 의한 잉여원유 판매가격 중 탈지분유용 판매가격을 적용토록 하는 체세포 페널티 강화 조치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전체 납유량 중 1등급은 43.2%로 2004년에 비해 5.8% 증가하였고, 평균 체세포수는 2004년의 307천개에서 2005년에 261천개로 감소(15%)하는 등 위생성적이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원유의 만성적인 공급과잉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위적인 방법에 의한 생산조절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따르고 있다. 또한 원유거래 및 유통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덤핑판매 등 유통질서가 문란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낙농가·유업체간 형평성 문제가 고질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유의 근본적인 수급안정을 기하기 위해 낙농산업발전종합대책(시안)을 마련하였다. 낙농대책의 중점추진과제는 ①전국단위 원유 수급조절체제 구축으로 원유수급의 안정성 확보 ②생산쿼터의 공정·투명한 관리로 원유 수급조절 효율화 ③학교급식 확대, 새로운 수요개발 등으로 우유 소비기반 확충 ④목장시설 자동화·현대화 추진 등으로 전업농 집중육성 ⑤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사양관리 체계 개선으로 낙농생산성 향상 ⑥깨끗한 목장가꾸기 운동 추진 등에 의한 원유 품질·위생수준을 향상하는 것 등이다.

낙농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각 이해주체가 공감하고 동참하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세미나·심포지움·간담회·워크숍 등을 수차에 걸쳐 개최함과 아울러 농가교육, 문답자료·해설자료 배포 등을 통해 낙농대책(안)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였다.

또한, 낙농자조금 등을 활용하여 우유 소비확대를 위한 TV·라디오 공익광고, 다큐멘터리 방영, 낙농체험목장, 3대 가족소품 등의 이벤트 및 인터넷을 통한 우유 테마송 공모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이밖에도 우유의 우수성을 교과서에 반영하기 위해 교사용 학습지도서 개발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산 유제품 개발 및 수출확대를 위해 면역활성 발효유 개발 등 6개 과제의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소규모 목장형 유가공 기술교육을 3개교(중부권 2, 남부권 1)에서 실시하였다.

앞으로 낙농대책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도록 할 계획이며, 그동안 낙농현안으로 대두되었던 낙농진흥회 집유선 직결전환도 낙농대책의 기본 틀 안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중장기대책과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단위 수급조절체제 구축을 통한 원활한 수급조절, 생산자단체 자율에 의한 계획생산체제 확립, 원유 거래방식 개편을 통한 유통 합리화, 가공유 한도수량제 도입을 통한 계절별 수급완충 등을 중점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낙농산업의 안정성장을 위해서는 우유 소비기반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그동안 임의자조금으로 추진하였던 낙농자조금을 의무 자조금화하여 낙농가의 자구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조금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분석 및 대 농가 홍보를 강화하여 낙농자조금사업의 조기 정착을 유도함은 물론 우유 소비촉진 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우유 급식사업 대상과 급식인원 확대, 우유의 우수성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활용 등을 통해 우유소비 저변이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자 생산자 자율에 의한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토록 하고, 집유장·유가공장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등을 통해 원유의 품질 및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산원유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다. 양돈산업

생산여건이 어려워 짐에 따라 국내산 공급이 감소하여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고돈가 행진이 지속되고 있다. 양돈 의무 자조금 정착과 농협등 생산자단체의 민간 자율적인 수급 및 가격조절 기능이 향상되고 있으며, 돼지고기 수출 확대를 위한 각종 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 (1)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

돼지 사육두수는 2006년 9월 현재 903만두로 작년 동기 879만두에 비해 2.8% 증가하였으며, 양돈 농가수는 전년동기의 12천 농가보다 0.8% 감소한 11천 농가로 규모화가 더욱 확대되었다.

산지가격은 지난 5년간 돼지고기 소비 성수기(3~9월)와 비수기(10~12월)로 구분되어 가격등락을 반복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2003년 미국의 광우병 발생 및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으로 인한 대체 수요 증가와 돼지 호흡기질병(PMWS)

등 소모성 질환 발생으로 인한 공급량 감소로 인하여 2004년 이후 산지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

돼지고기 수입개방('97) 이전에는 수매비축 및 방출을 통한 수급조절이 가능하였으나 수입개방 이후에는 정부의 직접적인 수급안정 대책 추진이 어려우므로 민간 자율적인 수급조절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생산자단체의 자조금사업과 자율수급조절 사업을 통하여 돼지고기 소비홍보 확대사업, 조사 및 연구사업,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자조금 사업을 통해서도 국내산, 위생 및 안전성, 저지방부위(등·안심, 후지등)를 컨셉으로 TV홍보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2) 돼지고기 수출 추진

구제역('00, '02) 및 콜레라('03, '04)가 발생하여 돼지고기 대일 수출이 중단됨에 따라 수출량이 급감한 이후, 러시아, 필리핀, 태국 등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수출을 추진 중이다. 러시아의 경우 국내 소비가 많지 않은 등심·후지 등이 주로 수출되고 있으며, 태국과 필리핀은 값이 저렴하고 동남아국가에서 선호하는 부산물(스킨, 지방, 간 등) 위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대일수출 재개를 위하여 질병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수출이 가능한 열처리 가공품의 대일수출을 위한 위생조건을 2005년 7월 일본과 체결한 바 있으나, 국내 돼지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고 일본의 위생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추가적인 시설이 비용이 소요되어 수출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실정이다. 하지만, 향후 국내 돈가가 예년 수준으로 하락할 경우 열처리가공품의 수출이 증가할 전망이며 부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하여 물류비 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 라. 양계산업

2006년 9월 양계 3만수이상 전업규모 농가는 1,700호로 전체 사육농가 14만호 대비 1.2% 수준이나 사육두수 점유율은 74%로 다른 축종에 비해 기업화·규모화가 상당히 진전되었다.

### (1) 닭고기 수출입동향 및 수출촉진을 위한 홍보강화

2005년 닭고기 소비량은 36만톤으로 이중 수입량이 5만9천톤으로 자급율은 84%수준으로 2003년 76%보다 크게 상승하였다. 1997년 7월 1일에 냉동닭고기의 경우 관세 30.5%로 수입개방된 이후 매년 관세 감축과 함께 수입물량이 증가하였으나, 2004년에는 미국, 태국 등 주요 수입국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수입규제로 전년보다 수입이 크게 감소한 것이 주요인이다. 2005년 5월 이후 수입 재개 등으로 2006년 9월 현재 닭고기 수입량은 5만7천톤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2003년말 국내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2004년 닭고기 수출량은 735톤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2005년 3월 대일 수출재개로 2006년 9월 현재 수출량은 2,173톤으로 크게 증가하여 역대 최고 수출량을 기록한 2005년(2,478톤)보다 닭고기 수출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대형닭(수출규격) 생산시설 지원 및 컨설팅, 해외 닭고기 시장조사, 가축전염병 예방 등 수출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일본식품박람회 참가, 할인판매 행사 및 대미 닭고기 수출협상 등 해외시장 개척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다.

### (2) 양계산업 안정대책 추진

생산자단체, 소비자, 농가, 학계 등으로 구성된 가금수급안정위원회를 통해 양계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지속 홍보하여 양계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있다. 양계분야 자조금을 활성화하여 생산자 자율적인 수급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종계데이터베이스(D/B)화를 통해 양계농가가 생산량을 예측하여 병아리 입식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또한, 근본적인 양계수급 안정을 위해 종계 수입물량을 국내 수요와 연계시키도록 종계 수입업체간 자율적인 합의로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다.

양계농가에 대한 사양관리, 경영개선 등 컨설팅지도 업무를 농협 컨설팅지원실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닭고기·계란 등급제를 점차 확대하여 품질향상에 힘쓰고 있다.

## 마. 축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 (1)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 및 운영활성화

축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낙후된 축산물 유통체계를 선진국 수준의 유통체계로 발전시키고자 축산물종합처리장(Livestock Packing Center : LPC) 건설사업을 1994년부터 추진하였다.

2002년까지 축산물종합처리장 9개소를 완공(이중 2개소는 부도로 인해 제3자가 인수 운영)하여 국내산 축산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냉장·부분육 유통구조 및 유통단계 축소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재 전체 도축두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LPC의 도축가동율과 점유율은 매년 상승하고 있으나, 높은 위생수준 운영에 따른 설비(Utility) 유지비용이 과다 소요되며, 원료확보 경쟁에 따른 일반 도축장과의 도축수수료 경쟁심화 및 IMF 당시 건설비 증가액을 고금리 차입금으로 충당함에 따라 원료구매·판매망 확대 등에 필요한 자금조달 능력이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경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2004년 10월부터 2005년 2월까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의 “LPC 경영평가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2005년에 LPC 건설자금 2년 순연 조치 및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에 따른 도축장 운영자금을 차등지원(578억원, 상위등급 0%, 중위등급 3%)하였으며, 도축장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 유도를 위해 통폐합 자금 지원, HACCP 사후관리 강화 등을 추진중에 있다. 앞으로도 LPC 등 시설이 우수하고 위생수준이 높은 도축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이 시장에서 우대받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유통되도록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2) 우수 축산물브랜드 육성

DDA협상과 FTA 등의 개방확대에 대응하고 우리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2006년 2월 “축산물브랜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확실히 추진하고 있다.

우선, 브랜드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2006년까지만 브랜드사업 대상 경영체를 선정키로 하여 총 80개(한우, 돼지에 한함) 내외의 우수브랜드를 선정·집중 육성하기 위해 2006년에는 24개 브랜드경영체를 신규로 선정('06.5.30)하여 지난해까지 선정된 49개 경영체 포함한 전체 73개 경영체에 대하여 1,043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였다. 지원된 운전자금은 품질 고급화 및 균일화, 규모화, 마케팅 등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는데 활용되어 경영체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04~2005년 기 지원 경영체(49개)의 연간 사업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경영체에게는 무이자 인센티브 자금을 200억원 지원하였고, 브랜드경진대회를 실시하여 무이자 인센티브자금 100억원을 지원하였다,

둘째, 사양·경영·브랜드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를 확보한 민간 브랜드컨설팅 전문업체 10개소를 4월초 지정하고, 11개의 브랜드경영체에 대한 컨설팅을 위한 경쟁입찰(5~6월)을 실시하여 생산·경영·재무와 마케팅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컨설팅할 수 있도록 경영체별로 1억원(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을 지원하였다.

셋째,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2004년 7월 소비자시민의모임 주관으로 실시하는 우수 브랜드 인증사업은 2006년부터는 한우·돼지에서 육우·육계까지 4개 축종으로 확대하였으며, 금년 4월부터 인증기준 마련, 신청, 서류심사, 현지실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12월중에 2006년 인증 브랜드를 발표할 계획이다.

넷째, 차별화된 “우수 축산물브랜드전시회”를 코엑스에서 개최('06.9.7~9)하여 우수 브랜드의 판로 개척과 소비자 신뢰도를 높였다. 이번 행사에는 식육기술 경연대회, 축산물요리솜씨대회 등 부대행사를 병행하여 할인판매, 추석선물 예매와 후계소비자인 대학생 관심유도를 위한 행사 등 다양한 홍보행사를 통하여 올해의 전시



회가 소비자와의 만남의 장, 판매촉진, 생산자들의 축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였다. 이번 전시회는 111개 업체에 317부스 규모로 전시되었으며, 55천명이 참관하였다.

브랜드 육성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2013년에는 한우의 경우 전체 사육두수의 50%('05:29%), 돼지는 70%('05:47%)가 브랜드화 되어 시장에서 거래 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며, 브랜드 사업을 통하여 브랜드 주체가 위생·안전성·품질·방역·환경 등 축산현안에 대해 모든 것을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 (3) 축산물등급판정 수수료 징수 및 사업확대

축산물등급판정 수수료를 2003년부터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등급판정 신청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2005년은 등급판정수수료 징수 3년차로 당초 수수료단가(소 1,600원/두, 돼지 300원/두, 계란 0.5원/개)에 의거 징수하고 있으며, DDA/FTA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양축농가의 여건을 감안, 등급판정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2006년부터 수수료단가를 조정(소 2,000원/두, 돼지 400원/두, 계란 1원/개)하여 축산물등급판정사업의 재정자립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축산물 부분육 등급표시 사업은 소·돼지·계란과 같이 등급판정 수수료를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징수하기 시작하였다.

### 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부존자원 활용 확대

국내 부존사료자원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46% 수준에 머물고 있는 조사료 급여비율을 60%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 (1)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신규 초지조성이 어려우므로 기성초지를 보완하거나 답리작, 사료포 등 사료작물 재배에 중점지원하고, 총체보리 재배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남는 논·밭을 이용한

사료작물 재배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며, 용수원 개발, 목로개설 등 조사료 생산성 증진을 위한 기반을 개선하였다.

조사료 생산·이용확대를 위해 사료작물 및 목초종자 공급을 확대하고 벧짚의 암모니아 처리 및 생벧짚 곤포사일리지 제조비용 지원으로 벧짚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조사료 생산확충에 기여하고 있으며, 조사료 생산·이용기술교육으로 농가의 조사료 생산·이용효율 확대 등 조사료 생산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 (2) 부존사료지원의 활용 확대 등

반추가축용 섬유질가공사료(조사료 위주)를 확대 공급함으로써 부존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양축농가의 사료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3년부터 섬유질 가공사료 시설 및 장비구입비를 지원하기 시작하여 1993~1998년까지 131억원을 1999~2004년까지 264억원을 지원 한 바 있으며, 2005년에는 9억원을 지원하여 농산부산물 등 부존자원의 이용증대를 도모하였고, 2006년에도 1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사.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저해요인을 최소화하여 친환경축산업을 구축하기 위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농가 및 단체에 가축분뇨의 퇴비화·액비화 등 자원화시설과 정화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 (1)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자금 지속 지원

환경에 대한 관심증대로 가축분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03년말 설치대상 농가의 96.6%가 시설을 설치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있다. 2005년에는 2,174개소에 333억원의 가축분뇨처리시설자금을 지원하였다.

##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그동안 가축분뇨는 수질오염 방지에 주안점을 두고 정화하여 하천 등으로 방류하는 정화위주의 법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운영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가축분뇨를 우수·분뇨와 분리하여 친환경 개념을 강화하고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등으로 자원화 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및 자원화 방안을 강화하고 환경과 조화시키면서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및 자원순환형 농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06.9)하였고 관련법령 제정을 추진 중이다.

## (3)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인프라구축 지원

경종농가의 가축분뇨 퇴비·액비 이용을 확대하고 환경오염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종농가에 대한 액비저장조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축분뇨의 유통활성화를 위해서 「축분비료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2005년에는 액비저장조를 660기 설치하였고, 저장된 액비가 영농에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축분비료유통센터」 5개소에 액비의 운반·살포에 필요한 차량과 부대장비를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경종농가와 연계한 자연순환형 농업기반 구축을 위하여 「자연순환농업팀」을 구성·운영함으로써 가축분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아울러, 앞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건설한 시공과 축산농가의 설계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축산 등 여건변화에 맞게 환경친화형 축사의 표준설계도를 설정·보급할 계획이다.

## (4)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우리나라 축산업의 특수상황과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경비 및 기술상의 취약점을 감안하여 가축분뇨의 발생량 기준과 가축단위 설정, 작물별·계절별로 축분 퇴비·액비의 사용기준 및 살포경지면적 기준설정 등 우리 실정에 적합한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 및 이용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 아. 축산물 위생 및 가축방역 체계의 강화

### (1)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가축 사육단계에서부터 최종 축산물의 판매단계에 이르는 축산물 생산·공급체계의 모든 과정에 대하여 각 단계별로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가축사육단계에서는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을 통해 유해물질이 축산물에 잔류되는 것을 방지하고, 가축사육농장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사료에 혼합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종류를 대폭 감축하고, 사료공장에 HACCP제도를 시행하는 등 사료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도축장·축산물가공장 외에도 집유장·축산물 보관·운반·판매장에까지 자체위생관리기준(SSOP)을 의무적으로 작성·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도축장에 대한 HACCP 전면시행과 더불어 축산물 가공장·보관장·판매장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HACCP 적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식육 등 축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와 병원성 미생물 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축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의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소비자·생산자단체의 소속직원들을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축산물작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확대함으로써 사후감시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한편, 영업자의 위해축산물에 대한 자발적 회수(Recall)제도를 활성화하고, 의무적으로 축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하도록 하며, 가축사육농장에 대한 HACCP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우리 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 (2)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방역 대책

구제역 방역은 매년 재발 가능성이 높은 3월부터 5월까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여 관계부처와의 공조체제하에 범정부적 차원의 국경 검역 및 국내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국경검역은 공·항만 X-ray 검색, 구제역 발생국 여행객 휴대육류 집중검색·검역탐지견 배치강화 및 미신고자 범칙금 처분, 해외 여행객 신발소독, 수입건초 및 나포·피항어선 소독, 외국인 농업연수생 등 관리, 해외 여행객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을 하였으며, 국내 방역은 신속한 신고체계 확립, 구제역 예찰 모니터링 검사, 지역 예찰담당관 지정,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 축산농장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및 방역교육 강화 공동방제단 운영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특별대책기간 이후에도 “평시방역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구제역은 2002년 6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돼지콜레라는 2001년 12월 1일에 전국적으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전면 중단하고 청정화 선언이후 5개월만인 강원도 철원군에서 2건의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였으며, 2002년 10월 7일 인천시 강화군에서 다시 발생한 것을 시발로 하여 2002년 12월 21일까지 인천 강화·서구, 경기 김포·이천 등 4개 지역에서 총 11건이 발생하였다. 2003년에는 3월20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하여 10월까지 7개 시·도, 26개 시·군에서 총 72건이 발생함에 따라, 돼지콜레라 발생양상이 전국적이고 동시 다발적인 점을 감안하여 돼지콜레라를 조기차단하기 위하여 2003년 3월 19일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전국적인 예방접종 실시로 동 질병의 발생이 현저히 감소하여 2004년 9건, 2005년 5건, 2006년 8월말까지 2건이 발생하였다.

한편, 광우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사료업체의 제조라인을 구분하고 사료 공장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도입함으로써 동물성 원료를 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고, 위험축군에 대한 광우병 집중검사 및

검사물량을 확대(2004년 2,323건 → 2005년 4,154건) 해 나가는 한편, 발생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내년부터 도축되는 소 전두수를 검사하기 위한 시설 및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머리·내장 등 특정위험물질(SRM) 제거시설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조류인플루엔자는 2003년 12월 10일 충북 음성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2004년 3월 20일 경기 양주를 마지막으로 7개 시·도 10개 시·군에서 총 19건(닭 10, 오리 9)이 발생하였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모든 발생지역에 대한 위험지역(3km) 및 경계지역(3~10km)을 설정하여 동 지역내의 가금류에 대한 이동통제 및 살처분 등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조치를 민·관·군 합동으로 추진하였다.

정부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시방역 강화대책”에 따라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및 축산농가의 가축 방역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있으며, 가축방역대책의 추진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질병별 시기별 발생 양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사전 예방위주의 가축 방역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 방역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인수공통전염병 예방과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질병관리본부, 수의과학검역원 등이 합동으로 「인수공통전염병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부루셀라, 광우병 등을 중점관리하고 입국자 소독, 해외 여행객에 대한 홍보 등에서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시 국경검역, 국내방역과정에서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하는 등 범정부적 대응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우선 2005년 말까지 가축사육업의 등록완료, 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단위면적당 사육밀도를 완화해나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가축방역에 취약하거나 밀집사육으로 환경부하가 큰 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밀도 완화, 축사신·증축 억제 의무 부여 등 특별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동북아 등 가축방역여건이 열악한 국가들과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경검역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검역탐지견 투입을 늘려 공·항만 해외여행자 휴대품 검색을 강화하고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외국 방문시 축산농가 출입자제 등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련 업무 폭주 등으로 현장방역인력이 현저히 부족해짐에 따라 시·도, 시·군 등 일선 방역인력을 확충(232명)해 나가고, 방역현장에서 절대 부족한 수의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수의사가 3년간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방역복무를 대체해 주는 「공익수의관제」도 도입하기로 하였다.

#### 자.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시범사업 실시

광우병 발생 등에 따라 식품의 위생·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고조되어 정부는 이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이 제도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가공·판매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의 이력정보를 DB화하여 위생상 문제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가 가능한 제도로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이며, 소비자 피해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소비자들의 알권리 충족 및 둔갑판매 방지 등으로 국내산 쇠고기 소비 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다.

##### (1) 그동안의 추진실적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은 2004년 10월 9개 우수 브랜드경영체를 선정, 시범사업에 착수하였으며, 2005년 8월에는 시범사업 실시상황을 자체 평가하여 ①지역 단위 추가, ②소 귀표체계 개편, ③연계사업장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일환으로 2005년 12월부터 2006년 시범사업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브랜드경영체 5개소와 참여를 희망하는 3개 지역(파주·김제·김해)을 추가 선정하여

생산단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였고, 2006년 7월에 또다시 시범사업 규모 확대를 통해 소비자 인지도 제고 등을 목적으로 참여를 강하게 희망하는 6개 브랜드경영체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 2006년 9월부터 생산단계 전산입력, 11월부터 유통단계 사업실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2006년 10월 기준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 규모는 20개 브랜드경영체, 3개지역의 8,700여 농가가 참여하여 약 182천두의 소가 전산시스템에 등록, 이력추적이 가능한 상태이고, 이들 참여대상과 연계한 도축장·가공장·판매장은 시범사업 초기 각 10개에서 도축장 17, 가공장 19, 판매장 62개소로 확대되었으며, 2006년 말에는 약 200천두가 이력추적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며, 이는 우리나라 총한우 사육 두수의 약 10%를 상회하게 된다.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시행기관 운영비, 전산시스템 구축, 귀표·라벨 프린터·귀표리더기 구입비, DNA동일성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예산: '04 14억원 → '05 4억원 → '06 10억)하고, 참여업체 운영비 및 판매장 홍보용 터치스크린 등은 자부담으로 충당토록 하고 있다.

## (2) 각종 전시회, 언론보도, 기고·특집기사 등을 통한 사업홍보

동 사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 및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TV, 라디오 등 공중파 방송 및 중앙일간지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시범사업 시연회('05.3), 국제혁신박람회('05.5), 국제축산박람회('05.8), aT센터 창업박람회('06.3), 축산물브랜드전('05.10, '06.9) 등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행자부 주관하여 정부 광화문청사 1층에 마련된 「정부혁신-전자정부 전시관」에 농림부 대표 혁신사례로 선정되어 2006년 9월부터 전시중임과 아울러, 2006년 농림부 부처 혁신과제로 선정되어 활발하게 추진중에 있다.

이 외에도 축산관련 각종 대회 및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여 대국민 인지도



제고에 힘쓰고 있으며, 각종 전문지, 월간지, 홍보전단 등을 통해 동 제도의 취지 및 추진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 (3) 향후 추진계획

2004~2007년까지는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평가하면서 브랜드경영체 및 지역단위로 단계적 확대를 기하고, 특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등 법령과 제도를 완비하여 2008년 이후 전국단위로 실시할 예정이다.

즉('04~'05) 9개브랜드, 59천두 → ('06) 14개브랜드 및 3개 시, 110천두(초기 계획) → ('07) 도단위 및 시군 확대, 400천두 → ('08) 전국단위, 2,000천두 → ('09) 젓소 포함 국내산 소 전두수 이력추적관리 의무화라는 추진일정을 설정하고 시범사업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2007년에 2008년 전면시행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참여 규모를 대폭 늘려 도단위(1~2개소), 시·군 확대(도별 3~4개) 및 육우 브랜드(2개소)를 포함하여 시범사업 참여 소 전체두수가 약400천두로서 국내산 전체 소두수의 약 20%이상이 이력추적관리가 가능케 될 전망이다.

쇠고기 이력추적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 관련 유사정책사업간 정보연계를 통해 생산단계 정보입력 간소화 및 효율화를 기하고자 개체식별번호(귀표)를 이용한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고, 각종 축산관련 정책에 대한 통합관리프로그램인 Agrix를 통해 정보 활용의 효율화, 능률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철저한 개체관리를 위한 귀표관련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국제표준에 맞는 개체식별번호체계 변경·귀표 디자인 개선 등 개선안을 마련, 정책에 반영하였고, 한우 유전자(DNA) DB 구축 및 검사방법의 표준화를 위해 동 과제를 산·학·연 핵심연구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효율적인 추진체계 설정 및 각종 제도·법령 마련 등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 4. 임 업

### 가. 아름답고 가치있는 산림조성

#### (1) 산림용 우량 묘목생산을 위한 기반정비

조림정책은 그동안 황폐했던 국토에 우선녹화와 경제적 기능을 강조하여 용재생산을 주요 목적으로 단위 면적당 목재생산량이 많은 침엽수 위주의 조림을 추진하였으나, 최근 국민이 원하는 산림에 대한 욕구의 다양화로 지속가능한 산림생태계 유지, 휴양·문화기능 활성화 등 다양한 산림기능의 조화와 최적 발휘를 강조하는 경향에 맞춰 조림정책도 경제적·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조성·육성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최소한 350만ha의 산림을 경제림으로 육성하고, 산림생태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활엽수림의 비율을 60%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산림자원조성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산림자원 조성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림자원의 근간이 되는 우량한 산림 종자와 묘목의 생산·공급이 필요한 실정이며, 이를 위해 2006년 산림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업무를 추진하였다.

첫째, 우량한 산림용 종자공급을 위한 채종원, 채종임분 확충·관리로서 검증된 산림용 종자사용으로 형질우량목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채종원을 확대 조성하고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채종원 종자 수급이 어려운 활엽수에 대하여는 OECD에서 정하는 채종림 구비조건(OECD/CFRM)에 맞는 채종림을 확대 지정하여 정부에서 채취한 종자를 묘목생산자에게 공급하여 종자국가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종자공급원 조성실적

구 분	면적(ha)	개소수(개소)	본수(본)
채종원	702	205	206,370
채종림	286	64	63,151

둘째, 관련 법령정비 및 산림용 종묘의 유통관리체계 구축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목의 품질·규격, 생산공정 및 산림용 종묘의 조사·검사규정을 마련하였고, 특히 종자채취에서부터 묘목을 생산·유통되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산림용종자유통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시범운영하여 불량종자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노력하였다.

셋째, 종묘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2002년부터 지역실정에 맞는 우량·건전묘목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에 묘목생산기반조성사업(간이온실, 관정시설, 묘포지 토양개량 사업, 종자저장고 시설)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고용창출과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우량묘목생산을 위한 기반정비계획 및 실적

구 분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이후
관 정	82공	20	20	22	10	10	-
간이온실	80동	16	14	17	9	9	15
묘포지 토양개량	341ha	-	96	98	62	51	34
양묘장비 구입	47조	-	-	10	10	16	11
종자저온 저장시설	8동	-	-	1	1	-	6

※ 2006년까지 보조금액(국비) : 754백만원

- \* 채종원이라 함은 우량한 조림용 종자를 지속적으로 생산·공급할 목적으로 수형목의 종자 클론(clone)에 의해 조성된 1세대 채종을 목적으로 조성한 인공포지
- \* 채종림이라 함은 채종원산 조림에 필요한 소요량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부족한 종자수요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지정된 우량임분을 말한다.

(2) 산림의 다양한 기능증진을 위한 조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산림의 경제·사회·환경적 다양한 기능들이 발휘 될 수 있도록 지역특색에 적합한 맞춤형 조림을 추진하고, 조림정책 품질향상과 지역발전 및 산주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용재수 생산 및 경제소득수종 조림을 8천ha,

리기다 소나무림의 친환경적 벌채 및 적지적수 조림 4천ha, 생활권 주변 큰나무 공익조림 3천ha 등의 다양한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였다.

재해에 강하며 생태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단기소득 증대를 위하여 자연복원력을 이용한 맹아(옴짝)갱신을 2천ha 추진하였으며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유희토지 조림 228ha를 추진하였고 농산촌의 관광과 산림소득을 연계하고자 다양한 산림경영 모델숲을 2005년 12개소에서 16개소로 늘려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위해 경제림육성단지에 산림자원 조성 및 육성을 집중 실행하고 있으며 임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산업발전을 도모코자 2006년부터 산림·산촌 클러스트 사업을 신규사업(기본설계 5개소)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년 조림사업은 생태적으로 안정되고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조림을 추진하고자 유망 활엽수 등 용재·소득수종 조림과 생활권 공익조림을 추진하면서 조림대상지의 지형, 토질, 지세 등을 고려한 적지적수 맞춤형 조림프로그램을 개발 보완중이며 내년 이를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리기다갱신 모델림을 각 도마다 조성하고 있으며 금강소나무를 육성하여 향토수종인 소나무를 브랜드화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조림방법의 다양화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증진 될 수 있도록 경제수 조림, 활엽수 밀식조림, 용기묘 조림, 과종조림, 경관조림, 수원함양조림, 현금보조조림, 산불 복구조림 등 다양한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림사업 실적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계 획	실 적	사 업 비
계	19,219	19,219	61,291
경제수조림	8,200	8,200	16,401
리기다 벌채 갱신	4,266	4,266	7,893
수원함양조림	1,301	1,301	4,120
큰나무공익조림	2,746	2,746	12,908
금강후계숲조성 등	339	339	7,714
국유림조림	1,507	1,507	6,264
산불피해지조림	860	860	5,991

## (3) 경제림 단지 육성

우리 산림은 30년생 이하의 어린나무가 62%를 차지하는 청년기 산림으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숲가꾸기를 통해 우량 산림자원으로 가꾸어 주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조림지의 사후관리 및 성장이 불량한 산림은 수종갱신을 통해 새로운 수종으로 조림하고, 우량 천연림은 적극적으로 보육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는 240만ha의 인공림을 조성하고, 우량활엽수림, 소나무, 참나무 등 천연림 110만ha에 대한 숲가꾸기를 실시하여 전국에 350만ha의 경제림을 확보할 계획이다.

2006년에는 제4차 산림기본계획의 핵심과제로서 1999년부터 추진해온 경제림 육성단지의 법적 근거가 2005년 8월에 공포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마련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에 450개 단지 292만ha(국유림 : 105개 단지 58만ha, 사유림 : 345개 단지 234만ha)를 최종 확정하여 산림자원 조성·육성 분야에 선택과 집중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경제림육성단지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GIS 수치지도 구축을 완료하고 지자체, 지방청 등 경제림육성단지 관리기관의 관리 편의성 증진을 위해 관리기관별로 경제림육성단지 도면(25,000분의 1지형도)을 제작·배포하여 활용하고 있다.

한편, 경제림육성단지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단지별, 관리기관별로 관리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2006년 경제림 시범관리계획 수립 예산 252백만원을 확보하여 8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2007년에는 45개 경제림 단지의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 945백만원을 반영하여 시·군 및 국유림관리소별로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 (4) 숲가꾸기로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증진

산림청에서는 1998년부터 산림정책의 기초를 ‘심는 정책’에서 ‘가꾸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산림을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자원으로 육성함은 물론 국민들의 다양한 공익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숲가꾸기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새로운 산림 자원관리의 국제적 패러다임으로 정착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원칙에 입각하여 산림의 생태환경적인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산림이 갖는 경제·사회·환경적인 다양한 기능들이 조화롭게 발현될 수 있도록 기술적·생태적인 숲가꾸기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숲가꾸기 사업은 인공조림지 및 우량 천연림의 건전한 생육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간벌(숙아베기), 덩굴류제거, 천연림 보육(天然林保育), 천연림개량(天然林改良), 산물수집 등으로 구분한다. 숲가꾸기 사업은 투자수익률이 낮고 국토자원 보전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주에게 사업비의 90%를 보조하고 있다.

그동안 추진된 숲가꾸기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산림정책의 기조를 ‘심는 정책’에서 ‘가꾸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정착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숲가꾸기사업에 시민 단체와 함께 숲가꾸기 모니터링, 시범림 조성사업 등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시민 단체와의 파트너십 강화 뿐만이 아니라 산림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숲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하여 산림청 훈령으로 ‘지속가능한 산림 자원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숲의 기능별, 목표생산재별로 차등화된 숲가꾸기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2년 공공근로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전문기능인에 의한 기술적인 정책 숲가꾸기사업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공공근로사업이 중단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산림을 가꿀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숲가꾸기 사업 확대에 따른 사업 부실 방지를 위해 각종 제도적·법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동안 100만ha의 숲을 가꾸는 ‘숲가꾸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근로사업에서 탈피하여 숲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높여 나가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

(단위 : 천ha)

구 분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1,000	154	175	210	227	234
공익림	300	38	51	65	72	74
경제림	500	76	84	105	115	120
방재림	200	40	40	40	40	40

자료 : 산림청 자원정책본부

2003년에 수립한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과 2004년에 제정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산림청 훈령)’에 따라 산림의 다양한 가치와 기능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산림을 기능별로 분류하고 그 기능에 맞는 기술적·생태적인 숲가꾸기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06년은 1,584억원(국고)의 예산으로 18만ha의 숲을 가꾸어 나갈 계획이다.

숲가꾸기 사업의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집단을 활용한 설계·감리 제도를 2003년부터의 시범사업을 통하여 추진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여 2006년 8월 5일부터 50ha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전면시행하였다. 또한 이를 위하여 금년 중에 설계·감리지침 및 표준품셈과 표준시방서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며 숲가꾸기 분야의 품질 혁신을 위한 정책기틀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숲에 내재된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진단과 치료를 위한 현장 지원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현장지원팀을 구성하여 구성하여 현장토론회 실시 등 ‘숲가꾸기 현장대응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숲가꾸기 기술을 한층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현장지원팀인력을 전국단위로 확대(129명)하여 구성하고, 인재풀을 각 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DB화 하였으며, 컨설팅과정외에 각 작업별로 현장에 맞는 트레이닝과정을 신규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

단체의 숲가꾸기 모니터링의 추진 등을 통해 숲가꾸기 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나. 산림재해방지와 건전한 산림생태계 보전 강화

#### (1) 산불예방 강화와 초동진화 체계 구축

2006년에는 산불방지 총력대응으로 『대형산불 없는 한 해』 목표를 달성하였고, 8월말 현재 341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예년평균 478건 대비 29% 감소하였으며, 산림피해는 231ha로 예년평균 1,810ha 대비 87%가 감소하였다.

기상여건의 불규칙한 변화, 산림내 지피물 등 연소물질 증가,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산행인구의 증가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산불피해가 예년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은 일선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산불방지 노력과 함께 동해안산불관리센터 운영, 『산불현장 통합지휘지침』에 의한 지휘체계 일원화, 공중진화 방법 및 절차 개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마련 등 산불대응 능력의 향상과 산불방지 협정제도를 통한 자원의 활용도 증진에 의한 것으로 평가된다.

#### 2006년(1.1~8.31) 산불현황

구 분	5년평균동기 (8.31 까지)	2006년 (2006.1.1~8.31)	5년평균대비 증(△)감
발 생 건 수 ( 건 )	478	341	△29%
피 해 면 적 ( ha )	1,810	231	△87%
건 당 피 해 면 적 ( ha )	3.78	0.67	△82%
건조일수당피해면적 ( ha )	25.56	4.13	△84%

금년 산불조심기간에는 시·군, 관리소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4천명에서 6천명으로 확충 및 전문화하여 전문인력에 의한 산불관리 역량을 강화하였고, 내화수림대 조성, 산불진화진입도로 및 소화전 설치 등 산불취약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산불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산불에 대응하는 한편 17개 관련 기관과의 공동대응체계인 『동해안 산불관리센터』를 가동하여 대형산불 Zero화 및 산불최소화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2) 산림병해충의 적극 방제로 산림자원 보호

지구상의 약 60만여 종의 곤충 중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산림병해충은 2,500여 종이며, 그 중에서 비교적 피해를 많이 끼치고 있는 산림병해충은 소나무재선충병,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잣나무넓적잎벌, 솔나방, 흰불나방, 푸사리움가지마름병, 참나무시들음병 등 20여종이다.

최근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생하여 1997까지는 발생속도가 둔화 된 상태였으나 경남 함안, 진주지역으로 확산되면서부터 급속도로 확산 되어 현재는 전국 53개 시·군·구에 발생하여 피해면적은 7,811ha, 피해목 제거본수는 220만그루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공포('05.9.1)하고,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비상대책('05.10.24)을 수립·시달하였으며, 2005년 11월부터 감염목 무단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2006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하기 위하여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솔잎혹파리는 1988년 327천ha 발생면적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4년에는 73천ha까지 감소되었으나 2005년에는 발생면적이 149천ha로 증가하여 다시 확산추세로 반전이 우려되므로 앞으로 방제예산을 확대하여 집중방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솔껍질깍지벌레는 우리나라 해안 우량 해송림을 고사시켰으나 꾸준한 항공방제와 나무주사로 회복 추세에 있으며, 1983년 솔껍질깍지벌레로 판명된 이래 1996년에 가장 많이 발생(16천ha)하여 서남부 해안지역에 큰 피해를 주었으나 점차 감소하여 2005년에는 12천ha가 발생하였다.

돌발해충은 겨울의 날씨 변화에 따라 발생 증감 폭의 변화가 있으나 최근에 들어 지구온난화 및 고온다습한 기후영향 등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참나무시들음병, 참나무잎벌 등 신규로 발생하는 병해충의 조기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피해 지역 확산이 우려된다.

산림병해충 현황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발생면적	370,147	377,765	371,187	361,720	339,988	336,528	292,266	254,190	243,035	315,607
방제면적	254,451	280,586	240,449	248,233	270,042	262,823	240,161	205,010	181,471	170,183
투 자 액	46,445	58,518	50,033	50,085	57,400	46,878	46,152	42,175	33,038	54,539

(3) 산사태방지를 위한 사방사업 확대 및 제도개선

산림 모양의 대부분이 풍화침식이 쉬운 화강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산지의 경사도가 급하며, 연평균 강수량 약 1,300~1,500mm의 60%가 여름 장마철인 6~9월에 내리는 자연조건과의 전쟁에 의한 피해와 남별, 화전,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1950년대 우리나라 산림은 전체산림면적의 10%인 68만ha가 황폐되었다. 이러한 황폐산지를 사방사업을 통해 복구하여 치산녹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지속적인 사방사업을 추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5년 사방사업 실적

산지사방	예방사방	해안침식지 복구	야계사방	사방댐
132ha	33ha	9km	59km	197개소

한편, 최근에는 엘니뇨(El Niño) 현상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게릴라성 집중호우 및 많은 비구름을 동반한 태풍도 빈발하고 있어 산사태 피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근래의 사방사업 시공은 재해방지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주요계곡과 경사면 등에 사방댐 및 야계사방 등 예방사업 위주로 시행하고 있으며, 산사태가 하류의 농경지와 주택, 도로 등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 점을 감안하여 올해도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댐 175개소, 야계사방 50km 등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산림유역 전체를 대상으로 다단계 사방시설을 설치하고 산림의 녹색댐 기능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개념의 재해예방사업인 산림유역관리사업을 2004년 시범실시 3개소에 이어 2005년 5개소를 시공하고 올해 7개소에 대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2006년에 추진할 사방사업의 종류별 물량은 다음 표와 같다.

2006년 사방사업계획

산지사방	예방사방	해안방재림 조성	야계사방	사 방 댐	사방댐 준설
100ha	30ha	10ha	50km	175개소	245개소

※ 산림유역관리사업 7개소는 별도임

아울러 2004~2005년 동안 추진한 “GIS를 이용한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되어 시스템이 구성됨에 따라 산사태위험지를 과학적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고 산사태위험예보 발령 및 사방댐 등 사방사업시행 예정지 선정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상청의 기상예보와 연계시킨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은 재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대국민 서비스함으로써 재해예방업무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일로 평가된다.

(4)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태계 관리강화

21세기는 생물다양성 보전시대라고 한다. 지구온난화와 생물종 다양성 감소 등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가진 세계 각국은 지금 생물자원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 즉, 어느 나라가 얼마만큼의 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자원을 얼마

만큼 실용성 있게 개발하고 활용하는가 등 지속가능한 이용의 연속성을 유지하느냐의 여부가 곧 국가경쟁력의 평가로 이어지는 시대이다.

우리나라는 높은 산, 구릉지대, 깊은 계곡 등 복잡한 지형·지세와 4계절이 뚜렷한 기후대 등 자생식물의 생육조건이 다양하여 온대지역 국가 중 상대적으로 식물종이 풍부한 국가이다. 우리나라 식물자원 현황은 고등식물이 5,285종, 하등식물 3,609종으로 전체 식물자원은 8,894종이며, 고등식물 5,285종 중에서 목본·초본 등 관속식물이 4,594종, 선태류 등이 691종이며, 규조류, 편모조류, 담수녹조류, 윤조류, 해조류 등으로 구성된 하등식물이 3,609종이다.

산림청은 21세기 생물자원확보 경쟁시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대비하고, 우리나라의 자생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목원조성 및진흥에관한법률」을 제정('01.3.28)하고 이어서 식물종 다양성의 수집·보존·이용기반 구축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등 수목원의 역할 강화를 목적으로 수목원의 확충 및 육성 등에 관한 국가차원의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였다.

동 계획은 향후 5년간('04~'08) 정부의 수목원 정책에 대한 기본 목표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수목원의 확충과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 계획이며, 시·도지사 및 국립수목원장은 본 기본계획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도록 수목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식물유전자원의 현지 외 보전기관으로서 수목원 본래의 기능 및 국민의 여가선용과 자연학습 공간으로서 문화적,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등 새로운 수목원 문화의 창달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도 식물자원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보전·확보·이용과 자원화를 위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목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우리나라 수목원 현황(2006현재)

구 분	합 계	국 립	공 립	사 립	학 교
개소수(개)	44	1	20	17	6
비 율(%)	100	2	43	40	15

또한 산림사료의 영구적인 보전 및 전시와 홍보를 통하여 산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산림사료에 대한 학술연구의 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국 국·공립 수목원 내에 산림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다.

※ 산림박물관 건립 : (2002) 6개소 → (2006) 9개소

그리고 지구상에 식물종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현실과 생물유전자원 확보경쟁시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생물종 다양성의 보존, 식물 자원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사업 추진,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존전략 수립 등 국내 자생식물자원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한 생태숲 조성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 생태숲 조성 : (2002) 6개소 → (2006) 16개소

그 밖에도 생물자원에 대한 탐색·수집·이용 및 산업화를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나라의 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전통적인 고유경관을 회복하고 우리 식물의 중요성과 우수성을 홍보하여 국민적인 관심제고 및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자생식물산업을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자생식물 식재(단지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자생식물 식재(단지조성)사업 추진 현황(16개 시·도)

구 분	합 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사 업 량(km, 개소)	363	32	50	55	61	55	55	55	1
투자액(백만원)	26,927	2,286	3,572	3,928	4,357	3,928	3,928	3,928	1,000

#### (5) 5대강유역 산림 특별관리로 산림의 녹색댐 기능 제고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에 따라 용수개발을 위한 수원함양림 조림과 숲가꾸기 사업을 전국의 댐 유역과 5대강 유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원함양림 조림은 넓은 면적의 모두베기(개벌)를 지양하고 소구역 조림과 수하식재, 천연갱신 등으로 복층림 조성을 목표로 한다. 수자원 함양기능 및 수질 정화 기능을 높이도록 뿌리의 양이 많고 깊게 들어가는 상수리, 굴참 등 참나무류, 자작나무 등 심근성 수종을 조림하고 초본류, 관목류 등 하층식생의 생육을 촉진함으로써 녹색댐 기능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지역특성에 맞는 적지적수 조림사업 추진과 5대강 및 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수원 함양 기능 제고를 위한 관리대상 산림을 지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수질오염과 수량부족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고 깨끗한 물의 지속적인 공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2006년 산림가꾸기 사업은 5대강·동강 등 유역산림 종합관리 사업에 우선 반영하였다.

수자원 함양기능 및 수질정화기능이 양호한 활엽수 중 상수리, 굴참나무 등 참나무류 조림은 ha당 5,000본을 식재하고, 상수리 파종조림은 ha당 5,000상을 파종하는 등 다양한 조림사업을 추진하였다.

2006년 숲가꾸기 전체 사업량은 18만ha이며 수원함양림 숲가꾸기는 전국의 댐과 5대강 유역 산림 27,015ha이다. 유역별 산림관리는 수질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관리대상 산림을 지정하고 단계별·연차별로 적극적인 산림사업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5대강유역 수원함양 산림종합관리계획('00~'07)에 따라 산림의 녹색댐 기능 강화를 위한 관리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6) 국유림 대부지 운영 및 사후관리 철저

2004년말 현재 국유림대부·사용허가·분수림설정 현황은 14,507건 89,381ha 이고, 2005년말 현재 국유림대부·사용허가·분수림설정 현황은 38건, 12,380ha가

감소한 14,469건 77,001ha로 그 허가 및 사후관리는 다음 기준에 의거 운영하고 있다.

대규모 산림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광업·골프장·스키장 등의 용도에 대한 국유림대부·사용허가와 백두대간보호지역 및 도서지역 등 산림생태 및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산지전용을 전제로 한 대부·사용허가를 억제하고 있으며, 기존의 대부지 등은 그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사업추진이 부실한 경우는 대부 등을 취소하고, 산림으로 복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리하고 있다.

한편, 국유림을 자연친화적으로 이용하면서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용도는 확대하여 농산촌주민이 산촌개발사업이나 약초·산채·버섯재배 등의 용도로 국유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경영여건 악화로 방치되고 있는 조림대부지 및 분수림내 사유입목에 대한 별채를 억제하고, 그 입목을 국가에서 연차적으로 매수('05년 10,582ha 매수)하여 자연친화적인 산지관리가 가능한 국가 직영입지를 확대하고 있음으로 국유림대부 및 분수림설정 면적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다. 산림사업의 경쟁력제고 대책 강구

##### (1)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구축 및 관리강화

임도는 임업의 생산비용 절감 및 기계화를 위한 산림경영기반시설이다. 아울러 산촌의 단기소득과 산촌마을을 연결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며 산불·병해충방제 등 산림피해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탐방로·산악 레포츠·산책로 등 국민의 보건·휴양목적으로 그 효용이 인정되는 등 임도의 다목적 활용이 증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임도는 1968년 국유림 내 입목 매각지 3개소에 15km를 설치한 것이 최초이며, 1984년부터는 공·사유림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민유임도를 개설하기 시작

하였으며, 2005년말까지 총 사업비 844,504백만원을 투자하여 임도 총 시설거리 15,825km, 임도밀도 2.47m/ha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ha당 2.47m/ha의 임도 밀도는 선진 임업국인 일본 5m/ha, 미국 12m/ha, 독일 44m/ha에 비교하면 아직도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하지만 과거 부족한 임도망을 조기에 확충하고 임도밀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빨리 끌어올려야 한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품질” 유지보다는 “수량” 확대에 치중하였으며, 또한 낮은 시공단비에 따른 안정구조물이 부족한 결과 장마철 집중호우시 일부 임도가 유실되고 토사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1999년부터는 산림상태, 토양특성 등 현지 산림여건에 따라 피해방지·경관유지 등 가능한 공종을 반영하여 설계·시공토록 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녹색 임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또한, 2002년부터 구조개량사업 5개년계획(2002~2006)을 세워 기존 낮은 단비로 시공되어 안전성과 경관성에 문제가 있는 임도에 대하여 대대적인 구조개량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2005년말까지 7,013km의 구조개량사업을 실시했으며 경관저해 및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임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구조개량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 산림법령을 제·개정하여 “간선임도설치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설치하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임도 노선 선정기준” 및 “임도의 타당성 평가제도”, “시공감리”를 법제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녹색임도 설치를 위해 노력해가고 있다.

## (2) 임업기계화 촉진

산업화로 인한 농산촌 인력난 해소와 임업생산성 향상, 벌채작업시 산지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업기계화가 필수적이지만 임업기계가 고가이고 지리적 여건, 자원분포 상황, 임도 미비, 전문기술인력 부족 등으로 임업기계화가 부진한 실정이다.

그러나 임업노동인력의 노령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 인력에



의한 작업능력의 비능율성을 극복하고, 산림자원의 양적·질적 증가로 점차 늘어나는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임업기계화는 중요한 임업정책중에 하나이다.

이에 따라 1995년에 '임업기계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제4차 산림기본계획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임업기계화를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실정에 맞는 임업기계장비를 개발하고 이미 개발된 장비에 대한 문제점을 개량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임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과 기계를 조작하는 운영자(Operator) 양성 등 임업기계화 관리·운영체계와 생산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말 현재 임업기계 보유실태를 보면, 지방산림청이 3,866대(14%), 지방자치단체가 9,837대(36%), 산림조합이 13,669대(50%)를 보유하여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 임업기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는 수요가 많고 실용성이 높은 임업기계가 개발되어야 한다. 트랙터 윈치, 굴삭기 윈치 등 기존의 트랙터나 굴삭기 등에 부착용으로 장비를 개발하여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기계톱·예블기 등 수요가 많고 저렴한 장비는 자체 개발 또는 기존 보급장비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적용이 가능한 타워야더 등 외국의 고성능 임업기계를 선별하여 시범사업용으로 도입한 후 적용시험을 거쳐 실용성 높은 기종은 벤치마킹을 통해 국산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민간부분에 대하여는 산림조합을 중심으로 독립가, 협업체 등에 기계장비를 보급하고, 산림경영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장비를 대여·수리할 수 있는 '임업기계지원센터'를 2005년까지 6개소(진안 임업기능인훈련원, 양산 임업기술훈련원, 강릉 임업기계훈련원, 순천시 산림조합, 평창군 산림조합, 청주·청원 산림조합)를 설치하였고 2006년에는 산청 산림조합에 설치 중에 있다.

국유림을 관리하는 지방산림청에는 임업기계화 시범단지 5개소 12,370ha를 지정·운영함으로써 민유림 임업기계화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청별로

고성능 임목생산 대형장비를 보유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 세제지원에 있어서는 임업 기자재 구입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종을 2001년 6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였으며, 임업용 기계·장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기종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

2003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임업용 임업기계장비 10종에 대한 면세 석유류 2003년 1,256kl, 2004년 3,012kl, 2005년 2,918kl를 공급하였으며, 2006년에는 3/4까지 2,218kl(휘발유 1956kl, 경유 261kl, 윤활유 1kl)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현장에서 산림작업을 담당하는 임업기능인에 대한 교육훈련과정에 기계장비 교육을 강화하고 강릉, 양산, 진안 등 3개 훈련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습림 경영 사업을 활성화하여 현장실습 교육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임업기능인영립단과 기계화영립단의 기준을 강화하여 여건이 갖추어진 관리소별로 기계화영립단을 육성하여 산림사업 물량을 집중적으로 배정토록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각종 산림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이들 기계·장비를 조작할 운영자(Operator)를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임업기계화를 앞당기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임업은 대표적인 3D업종으로 농산촌의 노동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여 높은 노동부담과 생산비용의 경감이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또한 앞으로 농산촌에서 양질의 노동력을 얻기란 더욱더 어려워 질 것이며 더 이상 인력에 의존한 산림작업을 수행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므로 노동의 안전성, 효율성, 수급성을 위해서는 임업인이면 누구나 임업기계화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본다.

국유림을 중심으로 임업기계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지방산림청 영립단에서는 기계가 없으면 임목생산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장비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기계장비 업체에서도 임업

기계에 관심을 가지고 각종 기계개발·보급에 나서고 있어 임업기계화의 발전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앞으로도 숲을 잘 가꾸고 자연친화적으로 임목생산을 위해서 임업기계화율을 더욱 높이는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펴나가고자 한다.

### (3) 숙련된 전문 임업노동력의 안정적 확보

앞으로의 기능인 양성은 산촌주민을 중심으로한 기능인을 선발·육성하여 산림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산촌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임업기능인 중·장기양성 계획’에 따라 영림단을 연차별로 조직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신규로 32개단 384명을 조직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조직된 영림단의 조기 정착과 기존 조직된 영림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장비지원비로 566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소득의 불안정과 안정적인 고용제도가 정착되지 않는 등 임업노동력의 안정적 확보 및 산림작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산림사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임업기능인의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현장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임업기계의 운전조작 기술 및 점검·정비능력을 배양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전문직업인으로서 영림단 임업기능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충분한 작업물량을 확보하고 시기별로 적정 배분토록 하는 한편, 상조회 운영을 통해 구성원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2004년부터 임업기능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등 복지증진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01년부터 임업기능인의 기능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임업기능인 경진대회’를 매년 개최하여 임업기능인의 축제의 장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종목을 개발하여 종합적인 산림작업 기술능력이 향상되도록 추진하여 임업기능인의 전문 직업 의식을 고취하며, 당해 경진대회에서 ‘임업기능왕’으로 선발된 임업기능인에 대하여는 해외연수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임업기능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4차 산림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산림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업노동력의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임업기능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신기술 보급 등으로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며, 임금을 체계화하고 복지후생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이들이 산촌에 정주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4) 다양한 단기소득원개발로 산림경영 장기성 보완

임업의 장기성(40~60년)을 보완하고 산주에게 실질적인 산림에서의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산림자원화와 산림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단기소득원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말 임산물 총생산액 3조 471억원 중 단기 임산물 생산액이 1조 9,267억원으로서 임산물 총생산액의 63%에 달하는 등 단기 소득원개발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단기임산물 생산액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99	2001	2003	2004	2005
단기임산물 생산액	10,471	15,467	17,081	18,328	19,267

임업을 소득이 높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단기소득임산물 육성 방안 및 고소득 품목인 밤, 표고 등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품목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고, 매년 40백만\$ 정도를 수출하는 밤의 경우는 우수품종 개발 보급, 노령목 갱신, 병해충 방제 및 친환경 밤생산장비 지원, 작업로 개설을 적극 지원하여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다양한 임산물을 단기소득원으로 개발하여, 임업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별 전략 특화품목을 선정하여 현재까지 밤, 표고, 산채류 등 60개의 지역특화품목 단지를 주산단지로 지정하고, 지정된 주산단지에 대해서는 각종 정책 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집단화·규모화 유도 및 저장·가공·유통시설을 주산단지와 연계 시설하여 주산단지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단기임산물 품목별 주산단지 지정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밤	대추	호도	잣	표고	송이	머루	산채	장뇌	수액
주산단지	60	7	4	1	1	22	10	3	10	1	1

한편 목재생산 중심의 한계성 및 장기성을 보완하고 산림 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목재생산과 단기소득사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함으로써 산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산림복합경영사업지 188개소에 대하여 지원하였고, 고품질 무공해 임산물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연차적으로 매년 30개소에 대한 산림복합경영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 산림복합경영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4까지		2005		2006	
	개 소	금 액	개 소	금 액	개 소	금 액	개 소	금 액
산림복합경영	188	10,391	128	7,121	30	1,635	30	1,635

청정임산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추·호도, 산채류, 송이 등의 주산지를 집단화·규모화하여 고소득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6년에는 12개 단지에 대하여 산약초 등 임산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고소득 전략품목 육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상품성 제고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저장·가공·포장시설 지원 및 임산물 가공분야의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전문조합 육성, 생산자 협업체 육성, 출하조절 및 직거래 자금 지원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조경수, 분재, 자생란 등 산림관상자원과 최근 청정임산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산채류 및 산약초·약용수종, 건강음료로 각광받고 있는 수액 등을 새로운 고소득 전략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재배기술 개발보급 및 상품화를 추진

하고 있으며, 분재·야생화·자생란 등 우리 자생식물 관상자원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금지원과 식물자원 수요·소비촉진을 위한 각종 전시회·박람회 지원을 지속 추진하여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최근 농산물 수입개방이 가속화되는 현시점에서 안전한 먹거리 등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국내 생산 밤, 표고, 산채류 등 청정 임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친환경 임산물 생산 임가를 중심으로 친환경토양개량 등 기반조성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청정 임산물의 지역특산품 유도를 위한 생산자별 고유 브랜드화 추진 등으로 우리 임산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 (5) 국산재 이용 및 폐목재 재활용 촉진기반 조성

우리나라 산림은 가꾸어 주어야 할 30년생 이하의 어린나무가 전체 산림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목재자급률은 2005년말 현재 8.8%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나무는 주로 간벌 소경재로서 보드류용, 펄프·칩용, 표고자목용 등 대부분 저급 용도로 이용되며 낙엽송 원목 일부가 건축 내장재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 2005년 목재수급실적

구 분	용도별·형태별 현황
수 요	제재가공용 25%, 펄프·칩용 41%, 합판·보드용 24%, 기타 10%
공 급	국내재 8.8%(2,350천m <sup>3</sup> ), 수입재 91.2%(24,369천m <sup>3</sup> )

목재 자급률 향상과 국산재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목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고, 목재생산비용을 절감해야하며, 품질과 가격면에서 수입재보다 경쟁력을 확보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우선 국산목재의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2005년

부터 산업용재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목재업계에 공급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합판용, 보드용, 칩용, 토평용으로 155만<sup>m</sup>을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목재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1993년부터 국산원자재 구입 자금, 목재이용가공시설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국산재 만을 사용하는 목재유통센터 여주사업소와 동해사업소를 1997년과 2004년에 각각 설치하여 국산재 이용 및 유통의 중심으로 육성 하고 있다.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산재 우선구매 제도를 2002년에 도입하였고, 국산재로 만든 책·결상을 198개 초등학교에 7,729조를 보급하는 한편, 공공기관, 자연휴양림 등 시설 공사나 내장제품에 간벌재 등 국산재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국산목재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개발 하고, 다양한 용도를 개발 하기 위해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목질자원의 순환이용을 위해 폐목재 구입자금을 2002년에 최초 지원한 후 2005년까지 총 10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폐목재를 원료로 이용 하는 보드류 산업 시설현대화를 위해 1994년부터 지원하여 폐목재 재활용 촉진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그동안 국산재 이용 및 폐목재 재활용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여 「국산재의 신수요 개발」 「국산재·폐목재를 이용한 건축자재 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폐목질 자원의 재활용 기술 및 시스템 개발」, 「국산재의 건축부재 이용」, 「리기다소나무의 토평·건축용 이용」 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 라. 살기좋은 산촌 육성 및 산림휴양·문화공간 확충

### (1) 산촌을 산림경영과 녹색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

1995년 농산어촌현대화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산촌개발사업은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착수하고 3개 산촌마을에는 사전 설계비를 지원하였다. 지암리의 경우 1년 사업으로 추진하여 산촌개발비(50억원),

연관사업비(31억) 등 총 81억원을 투자하였고, 충북 영동, 전북 장수, 경남 거창에 대해서는 2년 사업으로 추진(설계 1년, 조성 1년)하였다.

지암리 산촌마을 개발을 시작으로 1996년 3개 마을, 1997년 5개 마을이 설계되어 1997년까지 도별 1개 마을씩(전남 2개소) 9개 마을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고, 1998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결과 2005년까지 총 1,629억원을 투자(지방비, 용자포함)하여 118개 마을을 조성하고, 2006년 현재 53개 마을에 대해 개발 중에 있으며 제4차 산림기본계획이 끝나는 2007년까지 153개 마을의 개발을 완료하고 이후 계속사업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산촌개발사업 대상지 예비선정을 통하여 마을주민 및 리더의 사업추진 능력을 함양토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산촌개발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주민소득 증대에 보다 비중 있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산촌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1999년에는 1997까지 개발완료된 시범개발 마을(9개소)에 대한 평가를 하였고, 2000년에는 2년차 조성 산촌마을(22개소)에 대한 중간평가를 2001년에는 2000년까지 개발완료 또는 완료예정인 산촌마을(59개소)에 대하여 평가하고 2003년에는 사업단계별로 31개 마을(계획 10마을, 결과 12마을, 성과 9마을)을 추출하여 평가하였다.

산촌은 목재와 식·약용 목초본 등 임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지이고 국토경관 보존, 수자원 함양, 맑은 공기 공급처로 국토보전과 21세기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지역이다. 이에 산촌개발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틀과 산촌진흥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이러한 산촌을 진흥하기 위하여 산림청은 산촌의 소득증진을 도모하고 산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산촌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산촌진흥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산촌진흥기본계획은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개발 계획의 기본틀과 조화를 이루면서 정주권개발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 정보화마을사업 등 타부처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산촌진흥을 위한 장기적인 발전계획과 이의 추진은 전국 산촌기초조사 결과를 기초로 시·도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거쳐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는 산촌의 산림자원 조성·경영기반 확충 등 산림의 종합정비에 관한 사항, 농림수산물의 생산·가공·판매 및 산림휴양자원을 활용한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산촌의 도로·주택·상하수도 등 주거 환경의 조성·정비에 관한 사항, 산촌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도시와의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산촌의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이 반영된다.

산촌개발사업이 완료된 마을이 본 궤도에 들어서기까지 사업완료 후 3~5년간은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컨설팅 등 사후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산촌개발사업 완료 후에도 생산기반시설 이용 및 저온저장고, 임산물판매장, 버섯재배사, 산촌휴양시설 등 소득기반시설의 유지·관리·운영 등을 위해서는 사후관리가 필요하나 재정 여건이 열악한 산촌주민 자력으로는 이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기투자된 시설물의 정상 운영과 이를 통한 주민소득 제고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며 이를 위해 예산지원 및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하여 각종 시설물의 보완사업비 지원, 아름다운 산촌마을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우수마을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산촌마을 공동사업 운영을 위한 전문요원 육성지원,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촌주민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소득원의 개발 보급과 산촌마을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전파할 수 있도록 연찬회 등을 개최하고, 복합산림경영 등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소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산림경영 마인드와 지역개발 역량 함양을 위하여 주민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촌은 넉넉한 인심, 울창한 산림과 맑은 물, 조용함과 평화로움, 산촌 고유의 경관 등 다양한 유무형의 녹색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도시민이 과밀과 공해에서 벗어나 조용하고 쾌적한 휴식처에 대한 동경과 산촌의 생활문화와 자연생태를 체험

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산촌지역의 녹색관광 개발 잠재력은 매우 높다. 실제로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의 농산촌 지역에서는 지역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녹색관광이 추진되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도시와 산촌의 교류를 촉진하고 녹색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산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네트워크화된 정보는 산촌지역주민이 산촌개발사업을 쉽게 이해하고 관심이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고, 다른 지역지구와 비교 분석할 수 있어 사업시행기관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국민에게 산촌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산촌지역과 도시와의 교류로 녹색관광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산촌개발마을에 녹색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특히, 산촌 이미지에 부합되는 주택개량 및 먹거리를 제공하고 도시민들이 산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현장체험교육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시민들이 산촌생활을 체험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도·농교류의 촉진을 위하여 도시민들이 산촌에 오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무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도시민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 마을의 자연조건과 관광자원, 역량 등을 고려하여 축제 등 각종 이벤트를 발굴·지도하고 농산촌의 공간을 활용하는 주말농장, 시민농원, 낚시터, 조깅코스 제공, 교육과 문화적 교류를 위한 지역축제, 지역문화학교, 숲 속의 교실 등 산촌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대한 주민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시와 농촌의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1사 1촌 자매결연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청 및 소속기관이 농산촌마을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상호교류를 통한 이해증진으로 도농간 상생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 (2) 휴양공간 확충·서비스개선으로 휴양만족도 증진

1980년대 급속한 산업화·도시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으로 야외휴양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자 정부는 휴양수요를 산림에서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산림휴양시책을 전개하였다. 산림경관과 임상이 좋은 산림지역에 국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함양을 위해 조성하는 자연휴양림, 도시지역의 산림에는 도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산림욕장, 일반국민과 청소년들에 대한 산림교육시설로 숲속 수련장 조성을 추진하였다.

자연휴양림의 경우 1988년 유명산, 대관령, 신불산폭포 자연휴양림 조성을 시작으로 2005년말까지 전국적으로 총 98개소의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른 휴양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자연휴양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1990년에 「산림법」을 개정하여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5년 8월 4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산림문화·휴양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근 자연휴양림은 쾌적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자연휴양림 이용자 수가 1995년 208만명이던 것이 2005년에는 508만 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2001년 한국갤럽조사 결과 일반국민은 자연휴양림조성 사업이 치산녹화사업 이후 산림청에서 추진한 사업 중 가장 성공한 사업 중의 하나이며, 21세기 산림청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할 정책 중의 하나로 평가하였다. 자연휴양림에 대한 국민인지도는 1997년 52%에서 2001년에는 63%로 증가하였으며, 자연휴양림 재 방문 의사(88%), 이용만족도(68%)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휴양림 지정 및 조성운영 현황(2005년말) (단위 : 개소)

구 분	지 정 현 황		운 영 현 황	
	개소 수	면적(ha)	개소 수	면적(ha)
계	215	181,200	98	118,896
국유 자연휴양림	80	153,897	31	101,876
공유 자연휴양림	84	20,693	50	15,178
사유 자연휴양림	51	6,610	17	1,842

자료 : 산림청 산림이용본부

자연휴양림 이용자 추이

(단위 : 천명)

구 분	계	2000까지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44,029	21,906	3,818	4,076	4,345	4,808	5,076
국유 자연휴양림	9,764	4,523	863	886	1,004	1,117	1,371
공유 자연휴양림	29,751	15,364	2,511	2,744	2,827	3,211	3,094
개인 자연휴양림	4,514	2,019	444	446	514	480	611

자료 : 산림청 산림이용본부

산림욕장의 경우 도시근교에 위치하고 도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림에 산책로, 자연관찰로, 간이 체육시설 등 산림욕에 필요한 기본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2005년 말까지 총 102개소가 조성 운영 중이며 2006년에는 전국 7개소에서 조성 중에 있다.

숲속수련장은 대부분 국유 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2005년말까지 총 20개소가 조성되었으며 주요시설로는 단체숙소와 실내강의실, 야외강의장 등이다.

2005년말까지 조성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 산림휴양시설과 2006년 조성계획, 2007년까지 장기 조성계획은 다음과 같다.

산림휴양시설 운영 및 계획

(단위 : 개소)

구 분	계	2005년까지 운영	2006년 운영계획	2007이후
계	333	220	13	100
자연휴양림	140	98	6	36
산림욕장	150	102	7	41
숲속수련장	43	20	-	23

자료 : 산림청 산림이용본부

주 40시간 근무제와 여가문화의 다양화에 대비하여 산림청은 ‘산림휴양·문화진흥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등산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등산로 조성·보전·관리, 자연휴양림 시설의 확충 및 전문화, 도시근교의 산림욕장 확대, 산림휴양시설 타당성평가제도의 도입 등이다.

### (3) 다양한 산림교육 및 문화행사로 산림문화 진흥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주5일 근무제의 정착 및 여가문화의 발달에 따른 산림에 대한 교육 및 문화적 수요가 대폭 확대되고 있다. 특히, 격주 5일제 수업의 정착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산림을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지자체별로 유지하고 있는 산림관련 문화 행사는 국민이 보다 쉽게 산림 교육·문화 행사를 접할 수 있게 하였다.

과거 운영되었던 산림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대중과 획일적 집단을 대상으로 운영되었다면 현재는 대상이 가족, 학생, 소외계층, 장애인 등 다양화되어 가고 있고 프로그램 역시 세분화되는 추세이다. 현재 산림청에서 운영중인 교육·문화 프로그램으로는 푸른숲선도원 선발육성, 청소년 백두대간 산림생태탐방 프로그램, 산림문화작품 공모전, 산악스키·오리엔티어링 등의 산악레포츠 대회,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산림학교 운영, 숲속음악회, 숲과 문학의 만남 행사, 자연과 산림 관련 전시회 개최 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산림문화 진흥과 창달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임업인의 결속과 화합의 장인 ‘산의 날’ 행사는 제5회를 이어오면서 산림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그 밖에도 KBS 열린음악회, 숲 올림피아드 등을 통해 국민과 보다 가까워지는 산림문화 행사를 개최·후원하였다.

산림청은 이러한 정보와 서비스의 질 향상과 양질의 산림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휴양포털사이트([www.san.go.kr](http://www.san.go.kr))를 산림청의 대표브랜드로 선정하

여 전면적으로 재편하였다. 산림휴양포털사이트 ‘숲에On’은 국민에게 맞춤형 산림휴양과 백두대간·100대명산 등의 산악정보, 산촌관광 및 산악레포츠 관련 정보 뿐 아니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e-산림생태학습방」을 비롯 눈높이에 맞춘 산림교육과 그리고 각 지역 및 테마별 각종 문화행사를 안내하는 산림문화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숲에On’은 국내 뿐아니라 기구축된 영문사이트와 PDA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산림교육·문화 뿐 아니라 산림휴양 전반에 관한 세계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산림청은 2007년까지 연평균 200천명의 일반인과 청소년의 산림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2006년부터 시행되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통해 푸른숲선도원, 숲해설가 육성 등 산림교육·문화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다양한 산림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산림은 단순한 휴양공간의 역할 뿐 아니라 교육·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까지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산림교육·문화의 원년이 될 2006년을 기반으로 청소년을 위한 숲교육 전문기관인 녹색교육센터를 운영, 숲해설 및 등산안내인에 대한 인증제 실행으로 산림교육·문화 전문가의 자질 향상과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산림청은 지자체 및 관련 단체 등과 협조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산림을 통하여 교육과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산림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를 개발 보급함으로써 산림의 교육·문화 활성화를 도모해나갈 것이다.

#### (4) 등산인을 위한 서비스 기반 구축

등산은 우리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여가활동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갤럽 조사(2001)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75%가 연간 1회 이상 등산을 하였고, 연간 10회 이상 등산한 사람도 31%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한국리서치의 ‘주 5일 근무에 따른 야외생활 패턴 변화 조사’에서도 등산활동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 우리 국민들의 등산열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등산관련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형태의 등산로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대부분 무관심과 예산부족 등으로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주5일 근무제의 시행으로 등산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주말이나 봄·가을철 등 등산 성수기를 중심으로 이용이 집중되면서 많은 등산로가 훼손이 심화되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우리나라에는 1,067개의 산에 2,386개 노선, 8,953km의 등산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약 38%인 3,414km의 등산로가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등산로 바닥의 침식이나 바위의 노출 등으로 등산로가 훼손되면 이용객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고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주변 산림환경에도 많은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히 등산객들은 통행이 불편할 경우 등산로 주변으로 통행하여 등산로가 넓어지거나 샛길로 만들어 과도한 등산로가 생성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산림 식생의 파괴와 산림내 서식하는 많은 야생동물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환경 조성을 위해 2003년부터 백두대간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등산로를 대상으로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까지 국유림 지역의 등산로 154km를 정비하였다. 2006년부터는 민유림 등산로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하였으며 2006년에는 총 76km의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이다.

등산로 정비시 친환경적인 복원을 위해 가급적 인공시설물 설치는 최소화하고 지형지물을 충분히 활용하며, 경관보전과 산림생태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등산로 정비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전 현장 토론회 등을 통해 등산관련 민간단체나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건전하고 올바른 등산문화의 정립과 확산을 위해 2003년부터 (사)한국산악회와 공동으로 등산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청소년, 일반, 공직자 등

4개 과정 1,18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여름방학기간 중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백두대간 산림생태탐방을 실시하여 백두대간 전역 7개 구간에서 한국산악회 전문등산가이드, 산림청 공중진화대원 등 지도강사 108명의 인솔하에 전국에서 212명의 학생이 산림생태탐방에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등산지식과 백두대간 및 우리 산림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다.

또한, 전국 등산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하나로 '숲길조사원' 55명을 선발하여 전국 국유림관리소에 배치하였다. 이들은 전국 67개 주요 산에 대한 등산로 현황과 훼손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 자료는 등산로 관리계획 수립, 등산로정비 사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금년 8월 5일부터는 등산로관리계획 수립, 등산로조사, 등산로 휴식년제 등의 내용을 담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산림청, 지자체 등 등산로관리청은 매 10년마다 등산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체계적인 등산정책의 추진을 위해 등산기본계획의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리대상 등산로를 지정하는 것과 훼손 등산로에 대한 휴식년제 시행 등 노선별 관리방향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지방청, 시·도, 등산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말 확정할 예정이다.

#### (5) 자연친화적인 수목장 제도 도입

현재 국내의 묘지면적은 전국토의 1%인 998km<sup>2</sup>로 서울시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여의도 면적의 1.2배인 9km<sup>2</sup>의 묘지가 매년 새로 발생하고 있다. 매장 중심의 우리나라 장묘제도는 산림의 감소뿐만 아니라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왔다. 이러한 묘지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가에서 화장을 새로운 장묘방식으로 권장하여 화장율은 매년 증가하여 2005년 50%를 상회하고 있으나 묘지의 새로운 대안이었던 납골당이 대형화·고급화에 따른 폐해와 사치성으로 인해 최근 기존의 묘지 이상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됨에 따라 늘어나는 화장수요를 수용하고



자연친화적인 장묘제도의 정책적인 보급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스위스와 독일 등에서 시작하고 있는 장사문화의 한 형태로 산림경영을 하면서 기존 장묘문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목장은 2006년 KBS 여론조사 결과 화장 희망자 72%중 62%가 수목장 이용 의사를 표명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으며, 언론 및 민간단체에서도 수목장에 대한 관심이 점차 확산 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산림담당 부서인 산림청에서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인 수목장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산림 관계법령도 정비를 추진하게 되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06년 10월 18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법률은 산림내 조성된 자연장구역을 수목장림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목장 관련 국가종합 계획 수립 및 수목장림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과 수목장림의 설치·운영 권한을 관계전문기관·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반영기로 하였는데 그 세부내용은 사설수목장림의 종류별 면적 등 설치·운영사항과 수목장림 관리는 산림 관련부서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 수목장림 조성시 산림관리 기술자 고용 관련 사항 등을 명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관계 법령 정비 추진상황을 보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4항제4호에 산림의 환경기능증진을 위하여 녹색자금으로 수목장림의 조성·운영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2005년 8월 4일 제정하였으며, 「산지관리법」(안) 제12조제1항제3호에 보전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개선하여 임업용산지에서 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입법예고 '05.10.6, 법제처 심사 '05.11.28, 국회 제출 '06.5.11) 이와 같이 산림청에서는 2007년까지 새로운 장묘문화인 수목장림을 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묘지 관련 재단법인에서 수목장림에 대한 조성 기준 등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나, 운영 경험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목장림을 성급히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많은 실정이다. 이 경우 수목장림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나타나

오히려 산림의 파괴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할 소지가 크므로 이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에서는 2006년에 국유림내에 모델 수목장림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에 1개소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교육·홍보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자연친화적으로 수목장림이 조성·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 등을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올바른 수목장 문화 확산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개최 및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최 할 계획이며, 제5차 산림기본계획 수립시 수목장림 조성 계획 등 반영은 물론 GPS 등을 이용한 수목장림 관리 방안 및 DB체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수목장을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장묘제도로 정착하기 위하여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 마. 국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체제 구축

##### (1) WTO/DDA 협상에 적극 대응

DDA(Doha Development Agenda)협상은 2004년 7월 기본골격/framework)에 대하여 합의하고, 세부원칙(modalities)에 대한 후속 협상결과 ① 2005년 12월 까지 협상시한 연장 ② 농업협상에서는 구간별 시장접근방식, 민감품목 인정, 국내보조시 조화방식, 수출 경쟁분야 등에 대한 틀을 제시하였으며 ③ 비농산물협상(NAMA)에서는 비선형방식에 의한 관세감축, 분야별 관세인하 방식, 개도국 우대(S&D), 최빈개도국(LDC) 우대 문제 등을 합의하였다.

이후 세부협상을 진행하여 2005년 12월 제6차 홍콩각료회의를 개최하여 ① 농업협상의 경우 수출보조금 철폐시한(2013년), 국내보조 감축구간(3개), 관세감축구간(4개), 개도국 민감품목 인정, 특별품목 선정 등을 ② 비농산물협상의 경우 관세감축공식, 개도국 우대, 증가세 전환문제 등을 협의하였으나 일괄타결에는 실패하였고 ③ 2006년말 타결을 목표로 제네바 차원의 협상을 지속키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2006년 들어서도 수출국과 수입국간,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해관계 대립

으로 인해 협상의 진전이 없다고 판단한 파스칼 라미 WTO사무총장은 결국 2006.7월 DDA협상의 잠정 중단을 선언하여 논의자체가 중단된 상황이다.

그러나 산림청은 농업협상에서는 개도국 지위의 확보와 민감품목 신축성 확보에 협상력을 집중하고, 비농산물협상에서는 원목의 수출세 및 수출규제 비관세장벽(NTBs) 철폐, 민감품목의 일본, 대만 등 공조국가와 공동대응, 임산물 분야별 무세화(sectoral liberalization) 반대, 관세 감축 폭 최소화 등을 추진하고 임업계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임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 (2) 해외조림 확대

장기·안정적인 목재 공급원 확보를 위하여 2050년까지 100만ha의 해외조림을 달성하여 국내 목재 수요의 50%를 충당할 계획으로 1993년부터 해외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말 현재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7개국에 7개 업체가 사업에 참여하여 118천ha를 조림하였다.

그동안, 해외조림 확대를 위하여 조림 및 육림사업비를 2005년까지 512억원을 융자지원 하였고, 2000년부터는 해외조림목의 수확이 시작되어 펄프용 칩 238천 BDT을 국내로 반입하였다.

특히 2006년 8월 1일 「한·인니 산림투자 및 CDM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로 인도네시아에서 조림지 50만ha를 한국의 상업적 해외조림사업과 A/R CDM 사업 추진을 위해 제공하기로 협력하였고, 2006년부터 해외조림조사비 지원과 융자금리 인하(3%→1.5%) 등으로 해외조림 투자여건이 상당히 개선되었다.

해외조림사업은 이제 목재자원의 공급원 확보뿐만 아니라 기후변화협약 교토의 정서 발효에 따라 향후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을 대비한 탄소배출권 확보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다소비 또는 목재 다수요 업체 등의 해외조림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및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해외조림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3) 양자 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단기간에 산림녹화에 성공한 모델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반면 아직까지 30년생 이하의 가꾸어 주어야 할 나무가 약 62%로 목재의 91%('05 기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주요 산림 보유국인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등 8개국과 양자간 임업협력 약정을 체결하여 목재의 안정적인 확보와 해외조림을 위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목재 자원 확보만이 아닌 산림자원 보호 및 생태관광, 불법벌채방지, 산불 및 병해충으로부터의 산림보호 등을 의제로 임업협력을 다각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2005년 7월 인도네시아에서 제17차 임업협력위원회를 가진 바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임목개량 양묘장 조성사업과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복구를 위한 인도네시아 망그로브 숲(해안림) 복원 사업 추진을 위해 현지에서 산림청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국제협력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06년 5월 대통령의 몽골방문을 계기로 정부차원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사막화방지 조림사업 지원에 합의하고 2007년부터 향후 10년동안 10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으로 년차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오는 11월에는 호주와 제4차 임업협력위원회를 가질 계획이며 해외조림, 임산물 교역, 불법벌채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산림분야의 국제적인 논의는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SFM)을 달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유엔산림포럼(UNFF)에서 세계 산림에 대해 산림의 경제적·생태적·사회적·문화적 측면을 포괄한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2월 제6차 유엔산림포럼(UNFF) 총회에서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이행을 위한 범지구차원의 4가지를 설정하였다. 아울러 자발적 이행지침(Voluntary Instrument)을 개발하고 이를 통한 국가별 이행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년간 작업계획(MYPOW)을 제7차 총회(2007.4)에서

결정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그리고 제7차 이후 유엔 산림포럼(UNFF) 총회는 2년마다 개최하기로 하였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을 통해 수확된 열대목재에 대한 무역증대가 무분별한 산림벌채 및 황폐화를 막을 뿐 아니라 가치 있는 목재거래를 통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기여한다는 국제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제열대목재협정(ITTA)이 1983년 설립되었다. 동 협정은 특성상 일정기간마다 재협상을 통하여 연장하거나 수정하여야 한다. 1994년 협정은 2006년 1월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4차 개정협상회의에서 새로운 협정을 타결하였다. 동 협정은 열대목재 생산국과 소비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소비국은 직전 3년간의 평균 수입량을 기준으로 의무분담금이 결정되어 왔다. 이번 협상주요 결과는 먼저, 소비국의 부담이 약 2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열대목재 생산국은 기반조성사업을 통한 능력배양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를 높여왔으며 이번 개정협상을 통하여 새로운 협정에 반영되게 되었다. 다음으로, 소비국의 의무분담금 배부 기준이 이전 5년간의 열대목재 수입량 기준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새로운 국제열대목재협정은 2008년 2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동북아 지역의 사막화로 인한 황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간 국제기구, 유엔 사막화방지협약(UNCCD), 차원에서 국제 공조를 통한 동북아 지역 사막화방지 사업을 지원하여 왔으나 2006년부터는 산림청 전문가를 동 협약 아시아지역 사무소에 파견하여 보다 실질적인 황사방지를 위한 동북아 사막화방지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은 황사방지에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협조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중·일·몽 4개국 산림분야 기관장이 참여하는 동북아 산림네트워크 구축을 준비 중에 있다. 중국과 몽골에 사업지원 및 운영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네트워크는 유엔 사막화방지협약(UNCCD) 산하에 사무국을 설치할 계획이며 내년 제1차 설립 준비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 5. 수산업

### 가. 연근해어업

#### (1)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 추진

연근해어업은 최근들어 어업자원의 감소, 주변국가의 EEZ선포, 해양오염 심화 등 주변의 어업환경 변화와 IMF의 영향으로 인한 어업경비의 증가로 대부분 어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어업환경 변화에 맞도록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을 보완 발전시키는 등 개혁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동사업을 국정 100대과제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연안어업은 시·도지사가 책임지고 지역실정과 어업자원 수준에 맞게 허가정수 조정 등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앙정부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이와 별도로 유사업종 통폐합 등 어업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실시하고 자율관리 어업정착 등 어업자원관리를 강화하여 연근해 어업자원을 보전하여 어업 경영 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1999년 9월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 및수산업발전특별법”에 따라 한·일 어업협정과 관련 영향받는 어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동 협정과 관련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에 대하여 1999~2002년까지 총 1,308척을 감척하였으며, 한·일, 한·중 어업협정 관련 영향이 없는 어선은 “일반감척사업”으로 1994~2004년까지 근해안강망 등 634척을 감척하였고, 2005년에 연안어선 748척을 감척하였다.

앞으로, 연안어선은 전체 어선의 10%인 6,300척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감척하고, 근해어선은 전체 어선의 30%인 1,130여척 2007년부터 감척하여 WTO/FTA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연근해어업의 구조를 EEZ 체제에 맞추어 종합적으로 개선하고자 2002년 12월 “연근해어업 구조개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연근해어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동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자원관리형 어업을 실현해 나감은 물론, 경쟁력을 갖춘 미래형 식량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동 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2003년에는 근해어업 조업구역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업계, 정부, 관련기관 등이 참가하는 자율협의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 대한 오랜 분쟁을 자율적 합의를 통해 해소한 바 있으며, 2004년에는 유사한 연근해어업의 통폐합 및 어구·어법 정비 등을 통해 체계적인 어업관리를 실현하고, 어업인 편의도모 등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며, 2005년에는 수산자원회복 제고 등을 위하여 어구실명제 및 어구사용량 제한제도를 도입하였다.

## (2) 주변수역 자원보호 및 관리강화

UN해양법 발효와 일본, 중국 등 주변국가의 EEZ선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 EEZ수역에서 어업자원을 능동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어업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등에 대한 주권적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 1997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주변수역의 어업자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한·중·일 3국의 자원전문가 협의회 구성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연근해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2005년까지 6,856억원을 투자하여 인공어초 187천ha를 시설하였고, 2006년에도 402억원을 투자하여 인공어초 5천ha를 시설중에 있으며,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2005년까지 90여종의 종묘생산기술을 개발하였으며, 현재 15개 국·도립 배양장에서 연간 7억마리를 생산하여 분양 및 방류하고 있으며, 민간 배양장에서 생산한 종묘를 정부에서 매입하여 2005년까지 780백만 마리를 방류하였다. 2006년에도 국·도립 배양장에서 지역특산 종묘를 생산하여

분양 및 방류할 계획이며, 정부에서 약 9천만마리를 민간으로부터 매입하여 연안 바다에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증강시켜 나갈 계획이다.

UN해양법협약에 따라 EEZ체제에 맞는 21세기 신해양시대를 맞이하여 선진 어업 질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공어초, 종묘 방류, 바다목장화 등 어업자원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자원관리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원남획과 어업질서를 문란 시키는 불법어업이 근절되어야 하기 때문에 2003년 5월부터 범정부 차원의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05년에는 범정부차원의 강력한 지도단속과 병행,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 관한특별법」을 제정, 불법어선 1,788척에 대한 매입·정리를 추진하여 지난 50여 년간 고질적으로 지속되어 온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을 근절해 나가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획기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법어업이 잔존하고 있고, 어업 허가를 받은 일부 어선들이 단속을 피해 야간이나 기상악화시 은밀하게 불법어업을 자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어렵게 마련된 어업질서 확립 기초가 전 어업분야로 확대 되어 조기에 선진 어업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고자, 제2단계로 허가어선에 대한 불법 어업 근절계획을 마련하여, 6.1일부터 강력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허가어선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2006년에 800여척의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을 추가로 매입 정리하고, 어업질서 선도마을 발굴 조성과 함께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선 추가 지정 등을 통해 어업인 의식이 제고되어 불법어업 근절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여 나갈 계획이다.



## (3) 친환경어선대체 및 장비설비개량

2005년에는 연안어선을 대상으로 영세어업인의 안전조업과 생계유지를 도모하고자 소형 노후어선, VHF무선설비 및 기관대체 등에 48억원을 투입하여, 16~21년 이상의 노후어선 160톤(59척)을 대체 건조하고 어선과 일반선박간 통신수단 구축을 위해 268대 설치와 연료과다 소모형 저효율 기관 7,045마력 대체 및 노후된 어선 16척의 장비·설비를 개량하였으며, 어선용기계에 44대를 해당 200만원한도 내에서 국고로 지원하였다.

2006년에도 영세어업인의 노후어선의 안전조업 및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소형 노후어선의 친환경어선대체 33톤(8억원)을, VHF무선설비(2억원), 기관대체 6천마력(7억원), 장비·설비 개량 8척(3억원), 어선용기계 공급 50대(2억원)를 지원중이다.

## 나. 해면양식어업

2006년에는 어류, 김등 안정생산을 요하는 품목이나 재해상습지역에 대한 어장개발의 금지와 관리가 부실한 어장의 재개발 금지 조치로 양식어업의 경영안정 정책에 역점을 두었다.

특히, 김양식시설의 규모현실화 및 굴양식의 수하연 줄수등을 규정, 밀식에 의한 과잉생산 방지와 품질향상을 기하고자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05.3.31) 하여 양식시설시기부터 각각 적용하도록 하였다.

양식기반시설 확충분야에 2004년 39억원에 이어 2005년에 43억원을 투자하여 소파제시설 1개소, 개량부자 28만개 및 양식장소독제 28톤 등을 시설토록 지원하여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및 질병예방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해면양식장 개발에 2004년 60억원에 이어 2005년에 56억원을 투입, 변화되는 시장여건을 감안 고부가가치 중심의 갯지렁이 양식장 10개소, 키조개 양식장 1개소를 개발하도록 지원하여 영세어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였다.

양식장의 규모의 경제효과에 의한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조성중인 양식단지조성 사업 등은 정상 추진중이나, 최근의 양식업계의 경영악화에 따라 일부 용자사업 및 단지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산 활어 수입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특별영어자금 115억원, 중간종묘 매입방류 160톤(7억원) 등 총 127억원을 투입하고, 민간참여를 통한 종묘방류사업 확대를 위해 불교계(원로협의회)의 참여를 유도함과 아울러 양식어장정화 부문에 총 95억원을 투입, 부산 등 10개 시도의 양식어장 12천ha 청소, 전남 가막만, 경남 한산-거제해역, 진동만 등 특별관리어장 5천ha를 정화하였다.

양식재해예방을 위해 2006년 8월 6일부터 8월 29일까지 23일간 남해안 일부 지역에 걸쳐 발생한 유해성 적조방재를 위하여 민·관·군 등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총력대응으로 최근 10년간 평균피해금액(40억) 대비 최저(73백만원) 수준으로 적조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재해피해복구를 위한 총 267억원을 양식시설 및 생계비 지원 등에 투입하여 피해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다.

2006년에는 양식장 개발, 양식기반시설 및 기자재 공급, 배합사료직불제, 해면 양식시설에 총 18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양식어장 구조재편 추진을 위해 2007년에는 어류, 김, 전복 등 10개품종의 양식어장 신규개발을 금지하는 동시에 면허유효기간이 만료된 김·어류양식어장을 동일품종으로 재개발시 기존 면적의 5~20%를 축소 개발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6년에 96억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에 101억원을 지원 하는 등 고효율 저오염 배합사료 개발 등을 통하여 생사료 공급관행을 배합사료 위주의 공급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양식질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질병D/B구축, 이동병원 등 어병 방역센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다. 내수면양식어업

내수면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원 개발과 정부의 맑은 물 공급

시책에 부응한 환경친화적인 양어장 시설을 1993년부터 2005년까지 153개 양식장에 29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에는 13개소에 35억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에는 60억원으로 확대 지원함으로써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 라. 원양어업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주요 연안국들의 자원자국화 정책과 국제수산기구의 공해 조업 규제조치로 조업어장이 축소되고, 연안국 EEZ내 어획쿼타 감축, 입어료 및 어로경비 상승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원양정책자금을 2006년에 2,280억원(영어자금 800, 원양어업경영자금 1,480)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간 어업협정을 통해 양자간 어업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연안국들과는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주요 수산자원을 보유한 페루, 브라질 등과도 새로운 어업협정 또는 수산협력약정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해외 어장을 확대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외국어선의 단순입어를 허용하지 않는 주요 연안국가를 대상으로 현지투자·합작 등 상호 호혜적 입어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해외어장 자원조사를 통한 새로운 어장개발을 추진하여 해외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주요 국제수산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어장의 지속적인 확보는 물론 어업규제 움직임에도 책임있는 조업국으로서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에 따른 어업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우리 어선의 조업이 불가능한 어업에 대하여는 원양어업 구조조정을 통한 감척사업을 추진하여, 1998~1999년에는 북해도 트롤어선 6척, 2000년~2003년에는 풍치 봉수망 10척, 오징어채낚기어선은 2002년~2004년 기간중 24척을 감척하였다.

또한 노후원양어선의 신조대체 계획에 따라 수산발전기금 사업으로 2004년에 115억원을 투입하여 참치선망어선 1척(2천톤급)을 건조 완료('06. 2월)하였으며, 2006년에도 사업비 100억원을 확보하여 노후 참치어선의 신조대체에 지원할 계획이다.

● V.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증진 시책

1. 기초생활환경 개선 .....	233
2. 교육여건 개선 .....	246
3. 농어업인 연금제도 지원 .....	248
4. 농어촌 의료여건 개선 .....	249

## V.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증진 시책

### 1. 기초생활환경 개선

#### 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최근 들어 소득증가, 주5일근무제 시행 등 여건 변화로 농촌을 단순 식량생산공간이 아닌 전원주거·휴양·전통문화 등 기능을 갖춘 쾌적하고 농촌다움을 지닌 미래형 복합 생활공간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농촌개발수요에 대응하여 농촌어메니티 자원과 지역개발을 연계시켜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농가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종합개발사업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지방화·분권화시대에 맞게 주민·지자체가 스스로 지역발전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강화 차원에서 실천을 통한 학습형 지역개발 추진방식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따라 2004년부터 상향식의 주민참여형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생활권이 같은 소권역(3~5개 법정리)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권역발전5개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초생활환경정비, 경관개선, 소득 기반시설확충,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사업대상지 선정시부터 지역주민이 스스로 해당 지역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 공무원, 지역내 전문가 등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사업으로서 소권역별 잠재자원을 발굴·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유형의 농촌공간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권역당 3~5년간 총 70억원(국고 80%, 지방비 20%) 범위내에서 권역의 크기, 가구수, 기본계획상의 사업내용, 유사정책 사업 지원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계획수립 시 단계별로 전문가의 평가·자문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 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지역주민, 지자체 및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상향식 추진 등 새로운 방식의 지역개발모델을 창출하기 위하여 초창기 계획수립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계획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 지자체 등과의 협의과정이 필요하고, 지역주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교육 등을 병행 실시 하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평가단이 기본계획안에 대해 3단계(구상·중간·최종)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2005년부터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권역범위 설정의 적정성, 지역자원 및 활용가능여부, 지역주민·지자체의 사업추진역량, 예비계획의 검정성 및 파급효과 등을 조사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신설하여 시·도지사가 신청한 권역을 대상으로 농업기반공사 조사팀과 외부전문가가 공동으로 조사하고 사업시행의 타당성이 있는 권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2006년에는 총 467억원을 투입하여 2005년에 착공한 36개 권역의 계속시행과 2005년에 선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40개 권역중 20개 권역에 대한 세부설계를 수립한 후 착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7년에 착공을 목표로 20개 권역을 선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계획수립시 다양한 형태의 농촌지역 활성화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잠재자원을 최대한 살려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유도하고, 사업권역별 '마을개발협의회'와 자문위원회 및 전문가 등을 적극 활용하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방향 점검 등을 통해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개발을 이끌어 나갈 리더와 지역전문가 등 지역의 주체역량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마을지도자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살고싶고 찾고싶은 농촌모델이 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주공간 조성을 위해서 생활에 불편이 없는 수준의 도로, 상하수도 등 인프라를 농촌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고, 활력이 넘치는 지속가능한 농촌이 되도록 소득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자원을 격조있고 특성있게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역주민과 농촌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파트너십(partnership)을 견지하면서 지역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 나. 농어촌생활환경정비

1990년 이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농촌지역의 정주여건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농촌인구는 1990년 25.6%에서 2000년에는 20%, 2005년에는 18.5%로 감소하였고, 2004년의 농촌지역의 노령인구 비율은 도시지역의 6.7%를 크게 상회하는 15.6%를 나타내고 있는 등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따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농촌지역주민의 기초생활환경수준을 제고하는 한편, 도시민의 농촌유입촉진으로 농촌인구를 유지하여 지역활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지원하고 있다.

정주기반확충사업은 1990년부터 2004년까지 780개면·구에 대한 1단계 지원을 완료한데 이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2단계로 800개면·구에 대하여 마을안길 정비, 상·하수도, 주민편익·복지시설과 주택정비 등의 농촌기초생활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전원마을조성사업은 도시민 또는 도시이탈자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06년에는 농촌생활환경정비를 위해 총 2,321억원(국고 2,160, 지방비 161)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주기반확충사업은 300개 면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전원마을조성사업은 25지구를 신규착수하여 2005년 이전에 착수한 30지구를 포함하여 총 55

지구를 추진하는 한편, 2004년 이전에 착수한 문화마을 7지구는 2006년에 지원을 완료하고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그간에 추진되어온 생활환경정비사업이 주로 관 주도로 추진되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었으나 앞으로는 정주기반확충 및 마을조성 등 지역 개발사업 추진 시 지역개발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주민합의에 기초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할 계획이며, 장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문화마을조성사업이 주택용지 조성 후 분양하는 공급자 중심의 사업으로 입주민의 의견반영이 미흡하고, 지역주민에 우선 분양함으로 인하여 기존주민의 참여가 저조하였다. 이에 사업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입주예정자가 계획수립단계부터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체제형 주말농원, 은퇴농장 조성 등 메뉴를 다양화하여 농촌지역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농업인은 물론 도시민도 농촌에 함께 정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다. 전원마을조성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역사회 유지, 교육·복지 등 사회 인프라 유지가 어려워지는 한편, 전원생활을 즐기고자 농촌에서 살고자 하는 도시민이 늘어나고 있다. 2005년 10월 도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도시민 중 56.1%가 농촌 이주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년 이내에 귀촌하기 위해 준비 중인 도시민도 10.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 인구를 유지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원마을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림부는 2006년에 국고 260억원을 투입하여 55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까지 총 300개의 전원마을이 조성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호 이상의 가구가 농촌지역에 전원마을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에도,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등 마을기반시설을 정부가 보조지원하는 사업이다. 마을의 규모에 따라 정부에서는 10~20억원(국고 80%, 지방비 20%)을 지원하며, 마을부지확보 및 주택건축 등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주택건축비에 대해서는 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5년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저리(농업인 3%, 비농업인 4%) 융자지원도 하고 있다. 사업지원 대상은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면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도시민이 농촌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와 인터넷(www.nongchon.or.kr)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06년 10월 12일~15일 기간중에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도시민을 대상으로 20여개 시·군에서 준비한 22개소의 전원마을조성계획을 홍보하고 입주신청을 받는 「전원마을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페스티벌 기간 동안 도시민 43천여명이 다녀가는 등 도시민의 전원생활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음을 확인하였다.

전원마을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 숨쉬는 삶의 공간으로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마을조성계획수립 구상단계부터 입주하고자 하는 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주택의 배치 및 건축양식, 공동이용시설 공간, 조경 등을 적절하게 계획하여 농촌경관을 유지하고, 마을의 공동체 형성과 지속적인 유지·발전을 위한 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사업 모델개발과 제도정비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라. 농업·생활 용수개발

농림부에서는 면단위 이하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에 암반지하수를 개발하여 생활 용수를 공급하면서 가뭄시에 농업용수와 농산물세척용수까지 병행하여 공급하는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을 1994년부터 추진, 1,113천명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2004년까지 50호이상의 자연마을을 중심으로 제1단계('94~'04)사업 4,751

개소를 마무리하고 2005년부터는 소규모 자연마을(20~50호)을 중심으로 제2단계('05~'14)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까지 3,000개소를 추가 개발, 7,751개소의 농촌 자연마을에 농촌농업·생활용수를개발 지원할 목표로 추진중이며, 2006년에는 441억원을 투자하여 267개소를 개발할 계획이다.

###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계획

구 분	추진목표	2005까지	2006계획	2007이후
사업량(개소)	7,751	5,097	267	2,387
사업비(억원)	12,951	8,440	441	4,070

#### 마. 농어촌 상수도 보급·확충

농어촌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2004년말 35.2% 수준으로 도시지역에 비하여 상당히 열악한 형편이며, 특히 면단위 이하 산재된 자연마을은 상수도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대부분 우물·하천 등 자연수나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농촌지역의 환경 변화 등에 따른 수질오염으로 생활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상수도 보급현황

구 분		총대상인구	급수인구	보 급 율(%)	
전 국		49,053천명	44,187천명	90.1	
도시	대도시(광역시)	23,068	22,793	98.8	98.2
	중소도시(시)	16,618	16,166	97.3	
농촌	읍부지역	4,076	3,364	82.5	55.8
	면부지역	5,291	1,864	35.2	

자료 : 환경부 상수도 통계(2004)

또한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에 15,161억원, 도서지역에 3,930억원, 총 1조 9,091억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75%까지 향상시키기 위한 2단계 사업('05~'14)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이다.

바. 농어촌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소도시 육성

행정자치부에서는 읍지역을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농어촌지역사회의 중추소도시로 육성하고 생활편익과 문화기반, 소득이 구비된 이상적인 전원도시로 조성해 나가고자 소도읍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3년부터 10년간 전국 194개 소도읍에 총 12조원(국비 2조, 지방비 2조, 타부처국비와 민자 8조)을 투자할 계획이며, 사업원년인 2003년에는 인천 강화읍 등 14개읍에 962억원(국비 300억, 지방비 453억, 민자등 206억)을, 2004년에는 울산 온양읍 등 22개읍에 1,110억(국비 600억, 지방비 410억)을, 2005년에는 부산 장안읍 등 43개읍에 1,828억(국비 437억, 지방비 1,391억), 2006년에는 경기 장호원읍 등 66개읍에 2,326억원(국비617억, 지방비 1,709억)을 투자하여 지역특화산업 및 중심상점가 현대화, 도시인프라 확충, 관광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계획한 바와 같이 매년 20개 소도읍에 대한 육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간 2천억원의 국비지원이 10년간 계속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국비 지원 방식이나 규모로 보아 당초 계획된 목표달성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정부의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사.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위해 향후 6조원 투자

노후·불량 농어촌주택을 현대식으로 개량하여 깨끗하고 편리한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지역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는 1976년부터 연평균 1만여동의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여 2005년까지 총 9조 5,256

억원을 투자하여 386천동의 노후·불량 농어촌주택을 개량하였고, 2006년에도 1,800억원을 지원하여 4,500동의 농어촌지역의 주택개량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재원별 연도별 농어촌주택개량 투자현황 (단위 : 동, 백만원)

년도	사업량	사업비	응 자 지 원					비 고 (농특세)
			소 계	재특·농특	주택기금	지방비	농 협	
계획	520,393	9,525,629	9,488,924	2,594,556	3,664,486	2,725,772	504,110	1,086,908
추진	386,203	4,158,029	4,121,324	984,276	1,517,446	1,115,492	504,110	550,148
1976	4,254	3,190	2,552	-	-	2,552	-	-
1977	15,238	10,289	7,251	-	-	7,251	-	-
1978	50,000	88,000	83,000	16,600	20,750	16,600	29,050	-
1979	35,000	100,857	96,857	24,214	19,371	24,214	29,058	-
1980	20,000	86,105	83,520	20,880	16,704	20,880	25,056	-
1981	10,210	58,326	57,457	14,364	11,491	14,364	17,238	-
1982	3,118	20,771	19,794	4,949	3,959	4,949	5,937	-
1983	5,087	36,822	34,957	5,244	10,487	8,739	10,487	-
1984	5,110	38,746	34,899	5,234	10,470	8,725	10,470	-
1985	7,062	52,220	48,689	5,210	26,438	7,303	9,738	-
1986	5,069	38,510	34,866	5,230	17,433	5,230	6,973	-
1987	5,052	38,055	35,056	5,258	17,529	5,258	7,011	-
1988	6,052	43,729	42,042	6,306	21,022	6,306	8,408	-
1989	5,746	40,911	40,027	5,244	24,896	5,244	4,643	-
1990	5,677	50,025	49,960	5,995	29,976	5,995	7,994	-
1991	10,112	100,903	99,933	-	59,959	19,987	19,987	-
1992	10,493	141,481	141,399	-	105,060	21,351	14,988	-
1993	11,764	159,689	159,665	-	105,099	34,600	19,966	-
1994	16,164	240,000	240,000	19,520	140,480	59,000	21,000	19,520
1995	25,000	400,000	400,000	124,824	115,176	120,000	40,000	84,824
1996	25,000	400,000	400,000	129,498	110,502	120,000	40,000	89,498
1997	25,000	400,000	400,000	95,398	144,602	120,000	40,000	55,398
1998	19,845	346,400	346,400	98,520	105,430	118,444	24,006	64,520
1999	10,200	204,000	204,000	97,988	44,812	40,800	20,400	77,588
2000	7,750	155,000	155,000	38,800	38,800	53,700	23,700	38,800
2001	8,500	170,000	170,000	34,000	78,000	45,000	13,000	29,000
2002	9,200	184,000	184,000	56,000	56,000	54,000	18,000	36,000
2003	9,500	190,000	190,000	57,000	57,000	57,000	19,000	19,000
2004	9,000	180,000	180,000	54,000	54,000	54,000	18,000	18,000
2005	6,000	180,000	180,000	54,000	72,000	54,000	-	18,000
06계획	4,500	180,000	180,000	54,000	72,000	54,000	-	18,000
07이후	129,690	5,187,600	5,187,600	1,556,280	2,075,040	1,556,280	-	518,760

2007년 이후 개량할 농어촌불량주택은 134천동으로, 앞으로 건축비 등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동당 4천만씩 융자지원을 할 경우 6조원정도 재원이 필요하므로 지속적인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 아. 농어촌도로의 지속적인 정비추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과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으로 우리 농어업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농어촌생활환경개선 및 농어민의 후생복지등을 위하여 1994년 7월~2004년 6월말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농어촌지역에 투자되는 농어촌특별세 15조원중 1조2천억원을 농어촌도로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농어업의 삶의질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4년까지 10년간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농어촌도로에 3조6천억원으로 확대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농어촌도로는 농어촌지역의 교통해소는 물론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직접 이용되는 도로로서 그간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추진 결과 농어촌특별세 1조3,196억원을 포함한 4조7,875억원을 투자하였음에도 2004년 12월말기준 지방도, 군도 등 상위도로의 평균 포장률은 63.1%<sup>1)</sup>인데 비해 농어촌도로포장률이 40.1%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편,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의 주재원인 양여금법이 폐지(2004.1.29)되고 지방교부세로 전환 추진됨에 따라 농어촌도로사업이 더욱 위축될 우려가 크며, 이미 사업이 착수되어 시행중인 도로사업에 한해 2005~2008년까지 연간 8,500억원을 지원하기로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한바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도, 시도, 군도등에 분산 투자하는등 적은예산이 투입될 것이 예상되므로 농산어촌지역의 삶의질향상을 위해서는 농어촌도로분야에도 농특세 재원을 지원 정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사업비(억원)	2,400	2,400	2,400	2,400	2,400
사업량(km)	-	230	230	230	230

※ 농어촌특별세 재원에 대한 사업비 및 사업량, ( )는 실적

자. 환경친화형 농촌마을 조성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농촌지역에서 주택의 노후화와 빈집의 증가, 오폐수에 의한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농촌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웰빙과 녹색공간으로서 농촌이 재조명되고 농촌의 고유한 생태적, 문화적 자원 등 어메니티에 대한 새로운 가치가 발견되면서 농촌이 건강과 장수의 대안으로 점차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 농촌진흥청에서는 수질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수자원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연순환 방법을 이용한 친환경화장실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218개소를 보급하였다. 이 화장실의 특성은 병원성의 균의 완전사멸로 사람이나 동식물에 해가 없으며, 상·하수도 시설이 필요 없고, 악취가 발생하지 않으며 퇴비화와 액비로 활용함으로써 수질오염방지, 수자원절약, 분뇨처리장 건설 및 운영비용 절감은 물론 비닐하우스 단지 내에 설치토록 함으로써 농작업시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생활기능성, 에너지 절약, 전통성 확보를 도모할 수 있는 기술(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1~2004)을 도입하여 편리하고 농촌다운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15마을 82농가에 시범 보급하였다.

이 사업은 농촌전통테마마을의 민박농가 중심으로 전통적 농촌주거문화의 유지보전, 현대생활공간으로서의 기능성 확보를 통해 농촌주민의 주거생활 수준 향상과 도·농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내용은 텃밭, 화단, 장독대, 정원, 생울타리, 건물외벽 녹화 등 옥외 공간 조성, 도배, 장판 등 주요사항의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주택 내부 개선을 통한 환경친화적인 주거공간 구성 요소 적용과 문화생활, 휴식공간, 손님맞이공간 설치 등으로 환경친화적인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친환경적인 웰빙공간(생활+민박형 주택)으로 리모델링함으로써 지친 도시민에게는 휴식을, 농가에게는 소득을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리는 사업이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이러한 농촌환경 조성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2005년 70개 지역을 시작한 이후 2009년까지 전국 600지역(1,230읍면 32천마을)에 대한 농촌어메니티 자원조사를 실시하여 생태환경, 경관, 유적지, 전통기술, 특산물 등 지역고유의 농촌자원을 도식화, 일반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농촌자원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차. 하수처리 등 환경개선 사업

농산어촌의 기초마을 단위에서 배출되는 생활 오·폐수를 초기단계에서 처리하여 상수원 등의 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1991~2004년까지 2,092개소 마을에 4,000억원을 지원하여 하수관로 부설 및 처리시설 등을 확충하였고, 2005년에도 1,858억원을 지원하여 205개 마을에 하수도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앞으로도 환경보전과 상수원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2014년까지 하수시설이 불량한 1,827개 마을에 마을당 10억원을 투입하여 하수도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환경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주민반대 등으로 광역매립지 조성이 곤란한 농어촌지역에 매립, 재활용 등을 연계해 폐기물을 종합

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1995~2014)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에는 14개 사업을 지원하는 등 2014년까지 총 3,020억원을 투자하여 83개 지역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16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지역 소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배출하는 각종 오·폐수를 BOD 30ppm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88년부터 2004년까지 689억원을 투자하여 93개 처리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바 있고, 2005년에는 89억원을 투자하여 8개소(시설개선 포함)를 추진 중이며, 공공수역이 수질보전 및 농어촌지역 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주요상수원 및 하천주변에 밀집한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를 직접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1991년부터 국고지원사업으로 추진(1997년부터는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여 2002년까지 4,260억원(지방비 포함)을 투자하여 39개소의 시설을 설치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2003년에는 28개소(신규 13개소)를 설치하였다. 또한 환경부와 농림부 합동으로 가축분뇨 이용·관리대책을 수립하여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 자원화시설 설치, 친환경축사시설 지원, 친환경농산물이용촉진 등의 사업에 1조 460억원을 투자하여 친환경농업을 통한 환경보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 외에도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처리율 저하 및 오염물질 제거효율이 낮은 문제점에 대하여는 질소·인 제거설치, 공법개선, 축분 분리·저장시설 설치 등 시설 및 운영방안을 개선하여 시설이 적정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 카.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사업은 농촌지역의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농작업의 과중한 노동부담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피로를 풀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사업비 79억원으로 158개소에 설치하였다

마을단위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교육, 우수지역 현지견학, 마을주민의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마을회관설치사업, 건강장수마을 조성 등 여타사업과도 긴밀하게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다

또한 심야전기, 태양열이용시설 설치 등을 통해 운영비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인근 보건소, 일반병원 및 체육협회등과 연계하여 건강검진서비스,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농촌지역의 농업인 건강을 책임지는 센터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연찬회(6월), 사업현황 실태조사(9월), 운영관리 워크숍(10월) 등을 개최하였다

### 파.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은 고령화로 인한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인들 자신의 삶을 당당하고 건강하게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5년 신규사업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계획을 수립,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신규마을을 추가 발굴하여 노인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세워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 100개소에 총 사업비 42억원(개소당 42백만원, 3년간 육성, 국비, 지방비 각 50%)으로 사업에 착수하여, 2006년은 300마을 육성(기존 100마을, 신규 200마을)을 목표로 개소당 50백만원씩 지원하였다.

65세 이상의 노인과 55세~64세의 예비노인에게 경제, 건강, 학습·사회활동, 환경 등 4영역을 접목하고 천혜의 자연환경과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농촌노인은 복지수혜의 대상이기도 하나, 우리 사회의 귀중한 문화적·생산적 자원인 만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촌진흥기관, 정부부처, 관련기관/단체의 적극적인 협력 하에 사업 대상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앞으로도 마을민 스스로 주체적인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주민 협의를 통하여 3년간 마을 육성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 2. 교육여건 개선

### 가. 농어촌 고교생 대학특별전형 확대

도시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농어촌 주민의 고등학생 교육문제로 인한 이농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1996년부터 농어촌학생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비율은 금년(2006학년도)부터 현행 입학정원의 3%에서 4%로 확대하였으며, 대상범위는 농어촌 소재 고교졸업생 및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동지역이 된 고교 학생에게도 특별전형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1996~2006년까지 등록자 : 152,012명
- 2007학년도 선발예정자수 : 23,818명(일반대 13,568명, 전문대 10,250명)
- 실시 대학 수 341교(일반대 193교, 전문대 148교)
- ※ 전체 대학 수 : 352교(일반대 200교, 전문대 152교)

### 나. 농업인 자녀교육비 부담경감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을 경지 소유규모 1.5ha에서 전 농가로 확대하고,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사업과 함께 지

방의 재정운영 자율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2005년부터는 지방 이양사업으로 추진하였고, 2006년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사업은 26천명에게 700억원을 1·2학기로 나누어 지원할 계획이다.

#### 다.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농어민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 출신 대학생 중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 학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으며, 1994년부터 농특세를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다.

농어촌지역 출신 대학생에게 2003년까지는 학기당 200만원, 2004년에는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해 주었으며, 상환은 졸업 후 1년 거치, 융자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에 균등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2005년까지 3,279억원(226천명)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 9월 현재 26천명에 대해 7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라.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문화관광부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각종 문화 및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간 문화 격차에 따른 위화감을 해소하고 문화 향수권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88개관(486억원)의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을 지원하였다.

2006년에는 14개 농어촌 공공도서관에 101억원의 건립비를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로 지원하였으며, 2007년에는 11개관에 5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도서관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도서구입비 지원을 병행 추진하여 1995년부터 2004년까지 94억원을 지원하였으나, 2005년부터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이 지방 이양, 분권교부세의 재원으로 운영되어 지원규모가 다소 감소하였다.

### 3. 농어업인 연금제도 지원

#### 가. 농어업인 등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마련

농어촌 인구의 노령화 현상, 농수산물 개방 등으로 인한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노후 생계보장을 위하여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서의 연금제도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95년 7월 1일부터 농·어촌지역 주민에 대하여 국민연금제도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 나. 농어업인 연금제도 시행 성과

1995년 7월에 전국 농어민과 군지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농어업인에 대한국민 연금제도는 2006년 8월말 현재 농어촌지역 가입자 수가 197만명(농어업인 33, 비 농어업인 164만명)에 달하고 있어 정착단계에 도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1995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최저등급 보험료의 1/3을 매월 지원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이를 확대하여 최저등급 보험료의 1/2을, 2004년 7월부터는 기준등급 미만은 본인 보험료의 1/2, 기준등급이상은 해당 기준등급의 1/2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준 및 금액

구분	1995.7~2002.12	2003.1~2004.6	2004.7~2005.12	2006.1월 이후
기준등급	최저등급 1/3	최저등급 1/2	12등급	13등급
지원금액	2,200~4,400원	4,400~7,700원	8,800~19,800원	9,900~21,600원

\* 1995. 7월부터 2005.7월까지의 지역가입자 단계별 보험료 확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억원)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계획
212	221	293	271	399	502	605	673	761

다. 농어업인 연금제도 내실화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 및 복리증진 등 농어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2010년까지 농어민 중위소득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농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례노령연금 및 유족·장애 연금 등의 연금수급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국민연금 보험료의 자동이체 제도 및 선납·분기납제도 등 납부편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징수율을 제고함으로써 연금제도가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노후 소득보장제도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연금제도의 내실화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

#### 4. 농어촌 의료여건 개선

가. 건강보험제도의 개선

(1) 노인들의 의료기관 이용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검진 실시

노인들이 의원 및 보건의료원 이용시 본인부담액 경감연령을 2000년부터 종전의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농업인 등의 건강증진 및 질병의 사전 예방을 통한 국민의료비 절감을 목적으로 농어촌지역 세대주 및 40세 이상인 세대원을 대상으로 1995년부터 당뇨·고혈압·간기능 장애 등 성인병에 대해서 격년제로 건강검진을 시행하였으며, 1996년부터는 특정암 검진을 실시하였다.

## (2) 농어촌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

농어민에 대한 보험료 경감은 1988년 농어촌 의료보험이 시작될 때부터 추진되어왔던 사항으로 2000년 12월부터는 농어촌 지역의 의료서비스 이용상의 어려움, 경제능력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 경감율을 22%로 확대(종전: 15%)하였고, 2004년 1월에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WTO-DDA 체제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율을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04년에는 30%, 2005년에는 40%, 2006년에는 건강보험료 경감율 목표치인 50%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휴폐경지 등에 대한 보험료율 경감, 재해 시 보험료 납부유예, 소득이 없는 경우 결손처분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기관과의 거리가 멀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50%를 경감해주고 있다.

## 나.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 (1) 농어촌 의료공급기반 확충

농어촌지역의 의료기반 확충을 위해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에 2006년 9월 말 현재 1,196개소에 대하여 3,292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2005년 569억원을 확보하여 218개소에 지원하였으며, 2006년에는 573억원을 확보하여 217개소의 농어촌지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지원을 실시하였다.

### (2) 의료취약지역의 일차보건의료서비스 확대

1981년부터 농어촌, 도서지역 등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곤란한 지역에 1,905여 개의 보건진료소 설치 및 보건진료원을 배치하여 경미한 수준의 진료와 가정방문보건

사업을 통해 의료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일차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교통수단 및 의료시설 등이 미흡한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3) 공중보건한의사 배치 확대

1998년 공중보건한의사 제도를 도입한 이래 2000년까지 91명의 한방공중 보건 의사를 배치·운영하였으며, 병역법 개정(2000.12.26)으로 한의사면허 소지만으로 공중보건 의사 편입이 가능함에 따라 2001년 38명, 2002년 274명으로 증가하였으며, 1996년 유급 자원이 편입된 2003~2004년에는 2003년 387명, 2004년 303명으로 대폭 증원되었으나 이후 2005년 293명, 2006년 252명으로 감소되어 2006년 현재 총 846명의 공중보건한의사가 농어촌의 보건지소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 (4) 농어촌보건기관의 노인수발서비스 시범사업

2008년 7월 노인수발보험법이 시행되기 전에 공공보건기관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는 방문보건사업, 주간보호 등을 수발서비스 체계내로 도입하기 위한 타당성을 검증하여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인수발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적고 대상자의 경제적 수준이 낮아 공공보건기관이 수발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공급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농어촌보건기관인 보건지소(주간보호)와 보건진료소(간호·가정·목욕수발, 가정봉사원 운영)를 연계한 노인수발 서비스 시범사업 실시(2007.01~2008.12)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2006년도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시행내용보고서

---

2006년 12월 일 인쇄

2006년 12월 일 발행

발행 · 대한민국 농 립 부

편집 · 농림부 구조정책과

인쇄 · 유 성 인 쇄 공 사

☎ 2265-5540

---

<비매품>